2025년 연례보고서

통일 35년, 우리는 통일된 독일에서 성장했는가?



독일 연방정부
동독특임관실

Title: © gettyimages, LeoPatrizi

서문

통일 35년: 우리는 통일된 독일 속에서 성장했는가?

엘리자베스 카이저(Elisabeth Kaiser), 연방재무부 정무차관 겸 동독특임관(Staatsministerin und Beauftragte der Bundesregierung für Ostdeutschland)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올해 우리는 독일 통일 3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동독과 서독은 계속해서 함께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분단의 흔적은 여전히 사회, 정치, 경제 전반에 걸쳐 남아 있습니다. 이번 35주년을 맞아 저희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통일 당시 아직 태어나지 않았거나, 막 세상에 나온 이들의 목소리를 담아 보았습니다. 독일 통일이 자신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그리고 '동독'과 '서독'이라는 범주가 오늘날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동독과 서독의 청년들이 직접 써 내려갔습니다.

이는 저 개인에게도 매우 각별한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통일의 시기를 온전히 체감하며 겪지는 못했지만, 부모님과 조부모님의 이야기를 통해 그 영향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저희 세대는 교육 과정과 직장 생활 전체를 통일된 독일에서 보냈습니다. 처음부터 서독의 또래들과 동일한 외국어를 배웠고, 동일한 교육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TV에서는 '덕테일즈(DuckTales)'와 '미니 플레이백 쇼(Mini Playback Show)'가 방영되었고, 곧 이어 MTV도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메디치니(Medizin)', 그 다음은 '브라보(Bravo)' 포스터로 방을 장식했습니다. 이는 분명 아헨(Aachen)이나 뮌헨(München)도 게라(Gera)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남성들은 동서독 할 것 없이 연방군 입대와 대체복무(Zivildienst)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저희 중 다수는 대학 진학을 위해 서독의 대학교나 해외로 떠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독 지역에 남아 학업을 이어갔지만, 그곳에서 서독 출신의 많은 동기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 및 1990년대에 태어난 우리 세대가 범독일적 사회화를 거친 첫 세대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자라는 젊은이들에게 '동독'은 오늘날까지도 단순한 방위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곳은 정체성을 형성하는 공간이자...

... 삶의 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공간입니다. 본 보고서의 저자들은 바로 이러한 점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야나 파우스(Jana Faus)와 지몬 슈토르크스(Simon Storks)는 이에 관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50쪽 참조).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구서독 지역 출신의 많은 청년은 '서독인'이라는 분류에 별다른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특히 해안가나 알프스 인근에 거주하는 경우 더욱 그러합니다. 반면, 동독 출신의 청년들에게서는 자신을 '오시(Ossi, 동독인)'라고 정의하는

경우가 훨씬 더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서독 청년들은 대체로 출신 지역이 서독인지 동독인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동독 밀레니얼 세대의 3분의 2는 출신 지역이 여전히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답했습니다.

여기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비록 독일의 청년들이 지난 35년간 같은 나라에서 성장했다 할지라도, 그들의 성장 환경은 지금까지도 중요한 지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동독의 대도시 이외의 지역, 즉 소도시와 농촌 지역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연방 정부의 동등성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지역은 공공 서비스가 더 이상 포괄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며, 주민들의 소득 수준도 평균에 못 미치는 반면, 사회복지 혜택에 대한 의존도는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산 보유액 역시 동독이 서독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여기에 더해 동독 농촌 지역의 인구 고령화는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되어, 이 지역의 청년 인구 비율은 연방 평균을 훨씬 밑돌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동독 외곽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주변에서 또래 친구들을 만나기가 매우 힘듭니다. 대중교통이 몇 시간 간격으로 운행되는 탓에, 방과 후 또래 집단과 사회적 교류를 나누는 일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또래와의 교류는 대부분 가상 공간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반면 오프라인에서의 여가 활동은 서독 지역에 비해 가족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혹은 지역 동호회나 클럽 활동에 참여하기도 하지만, 그곳 역시 부모나 조부모 세대의 색채가 베어 있습니다.

결국 기성세대로부터 독립하여 지역 사회 내에서 자신들만의 아이디어와 프로젝트를 실행에 옮기는데 필요한 청년들의 임계 질량(Kritische Masse)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이에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청년들은 성인이 된 후 어쩔 수 없이 정든 고향을 떠나 대도시에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청년들이 농촌 지역에서도 계속 머물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적절한 여건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역 사회에서 맺는 끈끈한 우정만큼 강력한 결속력을 만들어내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또래와 만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인 청소년의 참여 또한 중요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의사 결정에 직접 참여해 본 경험보다 지역 사회에 대한 유대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제가 후원하고 있는 '실천!(Machen!)'이라는 공모전에서는 '청년 참여(Junges Engagement)' 부문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꾸준하게 시상하고 있습니다. 동독 농촌 지역의 비영리 단체들은 이 상금을 활용하여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젊은 수상자들의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참여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를 풍요롭게 하고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 청년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역 사회를 위해 함께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가고자 하는 모든 청년들을, 우리는 두 팔 벌려 환영해야 합니다.

또한 동독 출신이라는 것은 소득이 낮고 자산이 거의 혹은 전혀 없는 가정에서 성장했을 확률이 평균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배경은 많은 동독 사람들에게 성인이 된 이후 삶의 궤적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취업을 통해

독립하거나 전공이나 직업 훈련 분야를 바꾸고, 혹은 가정을 꾸리는 것과 같은 인생의 중대한 전환점에서, 동독 사람들은 서독 사람들에 비해 부모님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훨씬 적습니다. 소위 '인맥(Vitamin B)'이라는 자원 역시 동독보다는 서독에 훨씬 더 풍부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경제, 언론, 학문, 문화, 사법 분야의 주요 요직은 서독 출신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참고로 이는 동독 지역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번 임기부터 연방재무부(Bundesfinanzministerium) 산하에 편제된 동독특임관(Staatsministerin für Ostdeutschland)으로서, 생활 수준의 균등화를 더욱 진전시키는 데 저의 직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출신 배경이 삶의 기회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엘리자베스 카이저(Elisabeth Kaiser), 연방재무부 정무차관 겸 동독특임관(Staatsministerin und Beauftragte der Bundesregierung für Ostdeutschland)
사진: 연방주택도시개발건축부/헤닝 샤흐트(BMWSB/Henning Schacht)

우리는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란 청년들의 출발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하며, 새로운 자산 형성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합니다. 현재 계획 중인 '조기시작연금(Frühstart-Rente)'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참고로 이는 비단 동독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서독 지역에도 매일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빈곤과 부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정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결코 묵인해서는 안 됩니다.

제 업무의 또 다른 역점 과제는 사회적 요직의 인적 구성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방 정부는 지난 임기 동안 결정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연방 정부 내 주요 보직에서 동독 출신 인사의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방안을 확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구상이 다른 분야로까지 파급력을 넓혀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의제를 정치적 주요 현안으로 유지하고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매년 연방 행정 기관 간부들의 출신 지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수단으로 연례 '엘리트 모니터(Elitenmonitor)'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동 모니터를 통해 사회 12개 분야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동독 출신의 대표성 부족 원인을 연구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02쪽 이하 참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주요 요직에 대한 공정한 접근권은 비단 동독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주요 요직의 인선에 있어서, 여성, '노동자 자녀', 이주민, 그리고 장애인들 또한 보다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공공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다양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회적 결속력은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특정 인구 집단이 적절하게 대변되지

못하고, 그들의 관점과 문제가 공적 논의에 반영되지 못한다면, 민주주의를 향한 신뢰와 공동체 의식은 약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덧붙이자면, 다양성을 갖춘 팀이 대체로 더 큰 성과를 내기도 합니다.

독일 통일을 맞이한지 35년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도전 과제에도 불구하고 동독은 전반적으로 인상적인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동독의 경제는 이미 수년 전부터 서독보다 강력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동독의 많은 지역은 연구, 기술, 그리고 스타트업의 매력적인 거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재생 에너지 확대나 교통 인프라 구축 분야에 있어 동독은 이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의 수십억 유로 규모의 투자는 이러한 긍정적인 역동성을 만들어내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생동감 넘치는 문화 경관도 빼놓을 수 없는데, 이는 특히 올해 유럽 문화 수도로 선정된 켐니츠에서 잘 드러날 것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손꼽히는 흥미로운 문학 작품 중 다수가 젊은 동독 출신 작가들의 펜 끝에서 탄생했습니다. 이들 중 일부 작가들은 본 보고서에도 참여했습니다.

지난 35년간 쌓아온 이러한 긍정적인 성과들은 동서독을 막론하고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룬 결실에 대해 더욱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동시에 동독이 계속해서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은, 이러한 긍정적인 발전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 지원이 필요한 지역들이 여전히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경제 기반이 취약하고 인구 변화의 타격을 크게 입은 지역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분명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촌 지역도 강점을 성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생 에너지나 공공 서비스 및 관광 분야의 새로운 구상들이 바로 그러한 강점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강점을 더욱 확장하고, 특히 청년들을 위해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독일 통일 35주년을 맞이한 올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합니다. 동독이 처한 특수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동안의 성공적인 발전과 함께 남아 있는 큰 도전 과제들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젊은 세대는 이를 위해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그들의 시각을 동력 삼아, 모든 세대가 함께 국가의 미래에 대해 논의해 나가야 합니다.

진심을 담아 인사를 전합니다.



엘리자베스 카이저(Elisabeth Kaiser)

이어지는 제1장의 글에서는 평화 혁명과 통일, 체제 전환 그리고 그 후 지난 35년의 세월이 독일 전체를 어떻게 형성해왔는지를 중점적으로 조명합니다. 이 섹션은 오늘날의 동독 지역과 통일 독일을 다각도로 바라보기 위해, 통일된 독일에서 성장한 세대의 저자들이 각자의 개인적인 관점을 담아냈습니다. 다만, 여기에 수록된 글과 관점들은 독일 연방정부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본 보고서 제2장에 기술된 수많은 조치는 이미 연방정부에 의해 시행 중이며, 그에 따른 재정적 영향은 2025년 연방예산 및 현행 재정계획에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연방 예산과 관련된 그 외의 추가 조치들은 재원 마련 여부 및 예산 입법권자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에 언급된 내용은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예정된 예산 협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아울러, 헌법이 정한 연방과 주 간의 권한 범위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본 보고서는 사회 보장 제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목차

서문 3

제1장: 오늘날의 독일 11

아론 복스(Aron Boks) | 오늘날 젊은이들이 동독과 서독에 대해 묻는 이유는 무엇인가? 관점 1 12

마리 아이젠만(Marie Eisenmann) |
독일 분단 이후 태어난 사람들이 동과 서를 기준으로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관점 2 16

카스파르 드 부어(Caspar de Boor) | 동독 의식과 DDR의 무의식 20

클레멘스 뵈크만(Clemens Böckmann) | 멀고도 먼 동독(DDR) – 미지의 나라를 바라보는 관점들 24

파울라 퓌르스텐베르크(Paula Fürstenberg) | 통합(Einheit)이라는 개념에 대하여 28

야콥 슈프링펠트(Jakob Springfeld) | 왜 극우주의는 동독의 현상(이 아니)인가 32

바네사 바이어(Vanessa Beyer) & 리자 트렙스(Lisa Trebs) | (非)통일 속에서 자라나다 –
경청자이자 화자로서의 동독 Z세대 36

파트릭 알브레히트(Patrick Albrecht) & 레나 부르트(Lena Burth) 시장과의 인터뷰
동서독 지방 정치 40

@Wir_in_Ost_und_West –
동서독 역사 관련 소셜 미디어 프로젝트 실무 보고서 46

야나 파우스(Jana Faus) & 지몬 스토르크스(Simon Storks) |
통일된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여전히 하나가 되지 못했는가? 48

사진 시리즈: 고요한 변화 –
독일 최동단 및 최서단 지역의 젊은 시각들 55

제2장: 독일 연방정부의 동독 지역의 현 과제에 관한 주요 선정 사업(제21대 의회 임기)..... 71

동독의 시민참여와 자원봉사? 다양하고 활발하게!..... 72

활용되지 않은 전문 인력 잠재력: 동서독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76

'구조적 취약 지역을 위한 범독일 지원 시스템'..... 80

독일 통일과 유럽 전환을 위한 미래센터 건립 추진 현황..... 85

2025년 유럽 문화수도 켐니츠 88

동독 지역의 문화 진흥과 기억문화 지원 89

연방행정기관 내 '동독 출신 관리직' 확대 방안의
지속적 보완 및 이행..... 92

제3장: 연구 및 자료 조사..... 100

엘리트 모니터 최신 결과..... 102

2024년 다양성 및 기회균등 실태조사 - 독일 연방행정기관 내 동독 출신의 경력 기회..... 108

2025 독일 모니터
사회적·정치적 태도에 대한 요약 보고서
「독일은 변화에 얼마나 수용적인가?」..... 112

참고문헌..... 134

집필진..... 135

인쇄 정보..... 137

제1장

오늘날의 독일

오늘날 젊은이들이 동독과 서독에 대해 묻는 이유는 무엇인가? 관점 1

아론 복스

나는 오랫동안 내가 동독 출신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거의 십 년 전쯤 베를린으로 이사 왔을 때만 해도, 나는 하노버 근처 베르니게로데(Wernigerode) 출신의 세계시민이라고 생각하며 나를 소개했다. 20여 년이 넘는 시간동안, 나는 동독과 서독을 더 이상 구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자라왔다. 그러나 몇 년 전 나는 그러한 생각이 현실과는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1997년에 태어났다. 이에 내 자신은 물론 내 가족도 동독(DDR)이나 독재 체제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다. 잘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에 대해 한 번도 이야기를 나눠 본 적이 없다. 이러한 생각은 5년 전 12월의 어느 날, 할머니가 나에게 빌리 지테(Willi Sitte)의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비로소 바뀌었다. 그는 동독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 중 한 명이자, 당 간부였고, 사회주의통일당(SED) 중앙위원회 위원이기도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삼촌이었다. 우리 가족은 분명 동독과 많은 관련이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할머니께서 당시의 유년 시절과 청소년 시절, 그리고 직장 생활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나는 할머니가 심지어 동독에서의 삶을 꽤 좋아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엄마와 당시 경험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을 때, 나는 엄마가 합창단에서 활동했던 시절과 학교클럽에서 열렸던 파티, 그리고 그때 단결력이 얼마나 좋았는지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학교에서는 동독의 다른 모든 곳이 그랬던 것처럼 깃발 조회가 열렸고, 국가시민교육 과목 시간에서는 학생들에게 사회주의를 사랑하고 사회주의의 적을 미워하도록 가르쳤다. 교련 수업 시간에는 모두가 적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배웠다.

어머니는 어린 시절 NATO에 대한 방어 훈련을 해야 했던 피오니어 캠프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다. 그곳에서 엄마는 서독 사람들이, 특히 미국인들이 유사시 자신들을 공격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엄마는 어린 시절 왜 어디든 자유롭게 여행할 수 없는지에 관해 궁금해했던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셨다. 그리고 저녁 식탁자리에서 그런 질문은 절대 입 밖에 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던 아버지의 두려움에 대해서도 들려주셨다.

나는 엄마가 자라온 학교 시스템에 대해 더 알고 싶었다. 그러다 베르니게로데의 사회주의통일당 군 지도부의 문서

속에서 나의 옛 선생님 중 한 분이 1989년 12월에 작성한 발언문을 발견했다. 그는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사회주의의 장점들이 계속 유지되기를 바란다'며, '더 나은 동독'을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었다.

통일 이후, 이러한 관점은 학교에서 한 번도 다뤄진 적이 없었다. 역사 시간에는 오직 일당제(Einparteiensystem), 슈타지(Stasi), 그리고 장벽 희생자들만 다뤄졌다. 동독의 일상이나 교사들의 개인적 경험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학창시절 동독은 왜 그리 멀게만 느껴졌을까? 정작 나를 가르친 선생님들은 '통일 사회주의 교육 시스템'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본인들 스스로도 그안에서 교육받으며 자란 분들이었는데 말이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엄마에게 "그 시절이 지금과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지 궁금해요." 라고 말했다.

"세상에, 도대체 거기에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거니?"

"그러니까... 동독이 엄마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나는 그 빌어먹을 시스템이 내 인격까지 결정짓게 할 생각은 추호도 없어!"

놀랍게도, 몇 달 후 엄마는 전환기동안 자신이 쓴 모든 일기와 편지를 내게 건넸다. 아마도 처음에는, 자신이 거부했던 시스템이 나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라며 그렇게 막았던 것 같다. 하지만 그 일기장 덕분에 엄마와 할머니는 내게 동독과 격변기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정보원이 되었다.

나의 부모님은 1990년 아비투어를 마친 후, 하노버로 이사했다. 부모님은 항상 그때가 인생의 황금기였다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부모님과 함께 조부모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다른 면들이 드러났다. 당시 외조부모님은 극심한 생존 불안을 겪어야 했고, 친가 쪽 역시 남성 여럿이 일자리를 잃었다. 내가 주로 조용했던 분으로 기억하는 친할아버지도 쉰다섯이라는 이른 나이에 조기 퇴직을 하셔야 했다.

오늘날 내가 다른 사람들과 동독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이야기들이 눈사태처럼 쏟아진다. 대부분은 자신이 다녔던 일터, 브리가데 모임(Brigadefeiern), 그리고 이제는 거의 사라진 여러가지 것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 중 일부 이야기들 속에서는 동독이 억압과 폭력이 없는, 대신 저렴한 임대료와 무상 교육, 완전 고용, 그리고 해방된 여성들이 있는 사회로 그려지기도 한다.



사진: 켄 야마모토(Ken Yamamoto)

아론 복스(Aron Boks)
1997년 베르니게로데에서 태어났다. 작가이자 슬램 포엣(Slam Poet)으로 베를린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타츠 미래2 칼럼(taz-FUTURZWEI-Kolumne) 코너에서 '우리 세대의 목소리 (Stimme meiner Generation)'를 연재하고 있다. 증조부 빌리 지테(Willi Sitte)에 관한 책을 낸 데 이어, 2025년에는 신간 '강전류의 시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국가에서의 삶에 관하여(Starkstromzeit. Vom Leben in einem Staat, den es nicht mehr gibt)'를 출간했다.

어떻게 사람들이 이 시절에 대해 이토록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까?

나의 뿌리인 동독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을 무렵, 마침 이 주제는 독일 전역에서 미디어의 뜨거운 관심을 받게 되었다. 동독 지역 내 극우 정당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는 설문 조사 결과가 발표될 때마다, 사람들은 동독 사람들은 어쩐지 민주주의에 별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한다. 그들이 소외되고 뒤처졌다고 느끼기 때문이라며, 아무래도 동독은 무언가 다르다는 식으로 보는 시선이 존재한다.

이 주제는 끊임없이 화두가 되곤 한다. 2024년 여름, 내가 PEN 베를린과 함께 작센, 튀링겐, 브란덴부르크의 37개 지역을 순회하는 행사를 기획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어느 날 저녁 바우첸(Bautzen)에서의 행사를 마친 후 저녁 식탁에서 내 경험을 나누려고 했을 때, 마인츠에서 온 한 부부가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하지만 당신 같은 젊은 세대들에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문제잖아요!" 그러자 바이에른 출신의 50대 후반의 한 친구는 더 직설적으로 말했다.

"나도 이제 이 이야기 더 이상 못 듣겠어. 아론,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거야? 너와는 상관없잖아!"

어쩌면 내가 꽤 자주 경험했던 이런 방어적인 태도 뒤에는, 정신분석학자 아네트 지몬(Annette Simon)이 동독 정체성에 관한 저서에서 묘사했듯이 일종의 부끄러움이 숨겨져 있는지도 모른다. 그것은 서독 사람으로서 오랫동안 동독이라는 '쌍둥이 형제'에 대해 알지 못했고, 진심으로 관심을 두지 않은데서 오는 부끄러움이다. 그러다 주 의회 선거 전후에야 비로서 무엇인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심지어 젊은 동독인들도 계속 징징거린다고 여긴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다.

나 역시 동독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던 초기에는, 사람들이 통일에 대해 진지하게 불평이라도 할 때면, 이런 방어 기제를 내 안에 품고 있었던 것을 기억한다. 당시 나는 부끄러움보다는 일종의 불편함을 느꼈다. 동독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적게 벌고, 지도적 위치에 있는 경우가 훨씬 적으며, 많은 사람들이 물려받을 재산이 거의 또는 전혀 없으며, 내 앞 세대는 이미 90년대와 2000년대 내내 극우 폭력의 위협속에 살아왔다는 사실 같은 여러 차이와 경험을 하나둘씩 깨달았기 때문이다.

집에서 통일 이후 시절에 대해 이야기 나눌 때, 나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 어쩌면 내 유년 시절, 동독과 전환기에 대해 침묵하던 태도와, 서독 사회가 동독과 서독을 명명하지 않으려 했던 태도 사이에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었는지도 모른다. 일종의 동독에 대한 이중적인 침묵이다.

어쨌든 나는 이제 내가 동독 출신이며 동독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의식적으로 말한다. 나를 키우고, 가르치고, 테니스와 연극을 가르쳐 준 분들은 대부분의 삶을 완전히 다른 체제에서 살았고 - 분명 그 체제의 영향을 받은 분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동독식 사회화 과정을 거친 환경에서 자랐는지 서독식 사회화 과정을 거친 환경에서 자랐는지는 차이를 만든다. 그렇다면 이것이 오늘날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는 아직 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동서독 청년 모두가 그들의 가족들이 겪은 다양한 경험과 공통된 현재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흥미로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회학자 슈테펜 마우(Steffen Mau), 토마스 룩스(Thomas Lux), 율리안 하이데(Julian Heide)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서독 청년들 사이에서는 동·서 차이에 대한 인식이 줄어드는 반면, 동독 청년들 사이에서는 늘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통일 이후 세대 간의 대화가 서독에서 먼저 시작되기를 기다리는 것은 그다지 의미 있어 보이지 않는다.

나 또한 구서독에 뿌리를 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아는 바가 없다. 대신 나는 서독 출신 청년들에게 묻고 싶은 수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 또한 동독 출신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통일 이후 세대라고 부르고 싶다.

여러분의 조부모님은 악마를 더 두려워했나요, 아니면 동독의 공산주의자들을 더 두려워했나요? 서독 사람들은 사회주의나, 교환 사회(Tauschgesellschaft) 없이 어떻게 공동체를 유지하며 살았나요? 그 모든 것이 교회 덕분이었을까요? 여러분은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과 과거에 대해 이야기할 때, 구 서독에 대해 이야기하나요, 아니면 곧바로 나치 시대 이야기로 넘어가나요?

反파시즘을 통해 독재체제를 정당화한 국가와 슈툰데 눌(Stunde null)을 선언하며 민주주의를 시작한 국가에서 성장한다는 것은 과연 우리 가족들에게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나는 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럼에도 서로 다른 성장 환경에서 형성된, 각기 다른 내면화된 방어기제를 지니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마도 이러한 방어기제들을 허물어내는 일은 우리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세대보다 우리에게 더 수월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분단을 직접 겪지 않은 통일 이후 세대로서, 우리가 자라며 접했던 '독일의 통일'이 사실 어떤 이야기였는지를 함께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그 이야기란, 장벽이 무너진 후 독일 국기를 든 백인들만이 함께하게 된 것을 기뻐하고, 동독과 서독이라는 카테고리는 과거의 일이 되는 그런 서사이다. 작가 파울라 퓌르스텐베르크(Paula Fürstenberg)는 한 대화를 통해 내게 이 점을 깨닫게 해 주었다. 그리고는 또 다시 오시(Ossi)들끼리만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만약 통일 이후 세대인 우리가 동독과 서독을 막론하고 함께 과거를 향해 질문을 던지고 서로의 가족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면, 우리가 전해 들은 이 '통일 이야기'가 실제와는 잘 맞지 않으며, 다르게 서술되어야 한다는 점이 분명해질 것이다. 어쩌면 수백만 가지 서로 다른 이야기로 말이다. 이는 죄책감이나 부끄러움 혹은 분노를 나누기 위함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현재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이다.

독일 분단 이후 태어난 사람들이 동과 서를 기준으로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관점 2

마리 아이젠만

내가 처음으로 동부로 향했을 때, 나에게 국경이란 존재하지 않았다. 사실 보덴제(Bodensee)에서 베를린(Berlin)으로 이사하기 위해 그저 통과했을 뿐이었다. 라디오에서는 안넨마이칸테라이트(AnnenMayKantereit)의 노래가 흘러나왔고, 운전석에는 나의 절친한 친구가 앉아 있었다. 우리는 튀링겐(Thüringen) 주부터 시작된 남독일에서 운전할 때보다 차를 더 심하게 흔들어대는 콘크리트 판 아우토반에 조금 놀랐을 뿐이다. 주 경계선마다 동독 지역 연방주(처음엔 튀링겐, 그 다음엔 작센, 마지막으로 브란덴부르크)에 진입했음을 알리는 커다란 표지판이 서 있었지만, 우리는 별 관심이 없었다. 나는 동베를린으로 이사했다. 그 또한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어차피 장벽이 무너진 지 29년이나 지났는데, 내가 왜 그런 걸 고민해야 했겠는가?

베를린에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 둘째 날, 우리는 미테(Mitte) 지구의 훔볼트 대학교에서 출발해 옛 베를린 장벽을 따라 프렌츠라우어 베르크(Prenzlauer Berg)의 장벽 공원까지 걸어갔다. 우리는 지금 서쪽으로 걷고 있는지 동쪽으로 걷고 있는지만 생각하며, 과거 장벽의 경로를 표시해 둔 지지대를 지나 반대편으로 건너가 보기도 했다. 이리저리 왔다갔다하며, 처음에는 서쪽, 그 다음에는 동쪽으로.

언젠가 학교 다닐 적에 동독(DDR) 출신의 한 시대 증언자가 우리 교실을 방문한 적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나에게 그 사라진 나라는 역사 교과서의 몇 페이지로 축약되어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역사 교과서를 벗어나지 않았다. 나는 '신 연방주'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모님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부모님이 마르크(D-Mark)로 환산할 때 느꼈던 것과 똑같은 당혹감이었다. 시대에 뒤떨어지고 유효기간이 지난 기준점들이었다. 옛 것에 매달리는 이상한 반사 작용, 나는 '그건 이제 아무 상관없잖아요.' 라고 생각했다. 심지어 가끔은 짜증이 나기도 했다. 동독과 서독이라는 카테고리가 이제는 존재하지도 않는 거리감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대학 입학 첫 주에 나는 드레스덴 출신의 누군가를 알게 되었고, 우리는 친구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을 '오시(Ossi)'라고 불렀는데, 나는 우리 나이대에서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단어라고

생각했다. 가끔 그녀는 나와 다른 친구들을 심지어 '베시(Wessi)'라고 부르기도 했다.

몇 년 후 나는 한 동독 출신 남자와 사랑에 빠졌다. 그는 내가 베를린 장벽 근처에 산다는 사실을 흥미로워했지만, 동시에 그것이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에 흥분했다. 그가 처음 우리 가족을 방문했을 때, 나는 할머니가 동독을 여러 번 여행했었고, 그곳에서 사랑에 빠져 하마터면 동독에 머물 뻔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엄마가 왜 동독에 펜팔 친구가 있었는지(그 당시에는 그게 멋있는 일이었다), 그리고 아빠가 1989년 11월 9일에 장벽 붕괴를 축하하기 위해 베를린으로 훌쩍 떠나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내 남자친구는 나와는 전혀 다른 질문들을 우리 가족에게 던졌다. 그 질문들은 아마 내가 평생 듣지 못했을 이야기들을 이끌어냈다.

드레스덴 출신의 내 친구와는 달리, 내 남자친구는 자신을 '오시(Ossi)'라고 부를 뿐 아니라, 통일 이후 세대(Nachwendekind)라고도 칭하며, 자신의 동독 정체성에 대한 관점을 이전 세대와 구분했다. 1990년대 말에 태어난 나 역시 '통일 이후 세대'로 분류되었다. 하지만 나는 서독 출신 중에서 자신을 그렇게 부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다. 결국 서독 가정에서는 통일로 인해 달라진 것이 거의 없었고, 그래서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통일이라는 주제가 화두가 되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주제가 내 삶의 일부가 되었다. 전 신연방주 특임관이었던 볼프강 티펜제(Wolfgang Tiefensee)는 독일 통일 20주년에서 동서독 커플이 하나로 성장해가는 독일에 모범이 된다고 말한 바 있다. 나는 나의 동서 연애를 통해서, 내 남자친구와 내가 서로 다르게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분명히 깨달았다. 그전까지 나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내 남자친구가 자신의 (동독) 정체성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동안, 나는 그저 보이지 않는 지점들만 보고 있었다. 문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독일 역사에 문학적으로 접근했고, 동독의 책들을 마치 외국어로 쓰인 책처럼 읽었다. 생소한 약어들을 끊임없이 검색하고, 역사적 사건들을 찾아봐야 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자라 키르쉬(Sarah Kirsch), 슈테판 하임(Stefan Heym), 그리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들 중 한 명이 된 크리스타 볼프(Christa Wolf)의 책들을 읽었다.

그러면서 나는 나이 든 독자들이 -동독 출신이든 서독 출신이든 상관없이- 주로 동독 내 자신들의 역할에 매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크리스타 볼프의 책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그들은 스스로 동독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한다는 강박을 느끼는 듯했다. 그들이 과거를 파헤치는 동안, 더 나은 사회에 대한 믿음과 자신의 역할에 대한 고뇌를 다룬 크리스타 볼프의 글은 나에게 믿을 수 없을 만큼 시의적절하게 다가왔다.



사진: 피아 데르닉(Pia Dernick)

마리 아이젠만(Marie Eisenmann)

1999년 콘스탄츠(Konstanz)에서 태어났다. 2024년, 마그데부르크 문학관에서 열린 문학 행사 시리즈 '나뉘어진 의견(Geteilte(r) Meinung)'을 기획했다. 현재 타츠 판터 재단(taz Panter Stiftung)의 팟캐스트인 장벽의 메아리(Mauerecho)에서 '통일 이후 세대들의 대화(Nachwendekindertalks)'의 공동 진행을 맡고 있다. 유럽 문학을 전공으로 석사 과정을 밟고 있다.

동시에 나는 하인리히 뵐(Heinrich Böll), 잉게보르크 바흐만(Ingeborg Bachmann), 롤프 디터 브링크만(Rolf Dieter Brinkmann)과 같은 완전히 다른 문제들을 다루는 서독 작가들의 문학을 읽었다. 내가 태어나기 전 독일 내 단순히 두 개의 다른 나라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두 개의 다른 체제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나는 단 한 번도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없었다.

갑자기 나 자신을 서독인으로 바라보는 것이 도움이 되기 시작했다. 나의 가족사에서도 가톨릭적 도덕관과 전통적인 성 역할이라는 서독적 모티브들이 고스란히 나타났기 때문이다. 나의 친척 중 한 명은 1950년대에 혼외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조부모 밑에서 자라야 했고, 또 다른 친척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이유로 시부모님으로부터 남편과 헤어지라는 압박을 받았다.

어린 시절 내내 어디에나 존재했던 십자가와 미사를 나는 당시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 나에게는 그 모든 것이 지극히 당연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난 후, 동독에서는 모두가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며, 모든 학생이 종교 수업을 들어야 했던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야 비로서 그것이 당연한 게 아님을 알게 되었다.

이제 나는 동독 지역을 직접 더 자주 방문한다. 작년에는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한 PEN 베를린의 연속 행사에 동행하여 작센, 튀링겐, 브란덴부르크 주를 찾았다. 주 의회 선거를 앞두고 이 작가 공동체는 세 연방주에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며, 청중들에게도 발언할 기회를 주었다.

현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언론, 그리고 동독에 관한 논쟁이 펼쳐졌다. 객석에서는 자신의 삶의 이야기들이 금방이라도 터져 나올 듯한 기세로 사람들이 연이어 일어났다. 수많은 사람들이 통일 이후 겪은 자신들의 실패나 성취를 이야기하며, 통일의 불공정함을 지적하거나 자신들이 일궈온 성과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어떤 이들은 마치 이렇게 말하고 싶은 듯했다. "이제 제발 우리 좀 제대로 봐주세요!"

나의 서독 출신 친구들 대부분은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한다. 그들도 나처럼 동독 지역이 뉴스에 등장할 때에야 비로소 동독에 대해 생각할 뿐이다. 이상한 대조이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데도, 실제로 더는 서 있지 않는 장벽을 넘어 전달되는 이야기는 너무 적으니 말이다. 귀 기울여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내뱉는 "이제 그런 건 다 중요하지 않잖아"라는 식의 강요와 그 문제를 다루지 않으려는 태도는, 말을 건네는 사람들에게는 때때로 폭력적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그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들을수록, 나라의 한 부분에서 벌어진 완전한 체제 전환이 모두 해결되었다고 여기는 시각이 더욱 어리석게 느껴졌다.

이 글을 쓰는 지금, 나는 베를린 국립도서관의 신문 열람실에 앉아 있다. 만약 35년 전 장벽이 무너지지 않았다면 나는 오늘 이곳에 앉아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훔볼트 대학교에서 공부하지도, 동베를린으로 이사하지도, 장벽 지대를 따라 한가롭게 산책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어쩌면 사회주의 체제 한복판에 있는 이 서방의 섬, 베를린에 아예 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어떤 사람들은 결코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내 남자친구와 함께하지도, 이 글을 쓰고 있지도 못했을 것이다. 나는 서독 출신의 통일 이후 세대다.

하지만 '서독인'이라는 카테고리가 내 정체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까? 나 자신을 그렇게 부를 때 여전히 감정적인

동요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오히려 현재 나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하나의 보조 장치에 가깝다. 현재의 윤곽을 더 잘 알아보기 위해 내가 쓰는 안경 같은 것이다. 무엇보다 그 안경은 내가 질문을 던지고,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해준다. 그때 그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를 통해 오늘날의 모습에 대해 많은 것을 시사해 주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말이다.

동독 의식과 DDR의 무의식

카스파르 드 부어

논쟁 속의 불협화음

통일이 된 지 3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동서독간의 분단 시기를 둘러싼 정치적 발언들의 불협화음은 잦아들지 않았다. 언론인 발레리 쇠니안(Valerie Schönian)은 베를린 장벽 붕괴를 직접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에게 명확한 '동독 의식(Ostbewusstsein)'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 그녀는 2020년에 출간된 동명의 저서에서 이를 다소 모호한 정치적 요구들과 결부시켰는데, 이러한 요구들의 주된 맥락은 동독(DDR)의 과거를 덜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데 있었다.

독일문학자 디르크 오슈만(Dirk Oschmann)은 2022년, 동서독 관계를 포스트식민주의 이론의 어휘를 통해 설명했다. 코미디언 헤이즐 브루거(Hazel Brugger)는 2025년 그레고르 기지(Gregor Gysi)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서독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티셔츠를 착용했다.

동독의 의식을 고취하고 '서독'에 대한 비판을 강화하려는 이러한 담론들이 내용 면에서 항상 설득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독일 전체의 정치적 분위기에 미치는 이 '지진계적' 논쟁의 영향력은 결코 과소 평가될 수 없다.

포퓰리즘 세력은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사적으로 전승된 동독 시절의 좋았던 옛 기억뿐만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인위적으로 구성된 '동독 의식'을 통해 젊은 세대으로부터 정치적 자본을 끌어내고 있으며, 이를 통일 이후 세대에게까지 정치적으로 활용할 줄 안다.

이 동독 의식이 인위적으로 구성된 것임은, 정반대의 정치적 입장들이 얼마나 가볍게 이 의식을 자신들의 근거로 삼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동독 출신 자유민주당(FDP) 정치인 카트야 아들러(Katja Adler)는 '동독으로의 후퇴'를 경고하며, 과거 동독 시절을 현재의 사회적 논쟁을 비판하는 틀로 사용한다. 이는 자라 바겐크네히트 동맹(BSW) 대표 자라 바겐크네히트(Sahra Wagenknecht)도 마찬가지이다. 그녀는 자신이 보기에 억압된 현재의 표현의 자유를 과거 동독의 검열과 비교하곤 한다.

또한 지금의 동독 의식을 긍정적으로 소환하는 경우도 자주 있다. 그 중 일부는 1990년 이전 시절에 대한 향수 어린 언급들이 포함되는데, 정작 이 향수가 겨냥하는 젊은 세대는 그 시대를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없다. 현재 여론 조사에서 큰 지지를 얻고 있는 사례로 독일을 위한 대안당(AfD) 소속 정치인 비외른 회케(Björn Höcke)를 들 수 있다. 그는 동독 독재 체제로의 회귀를 경고하면서도, 동시에 과거 동독 시절의

몇몇 장점들을 소환한다. 예컨대 '카고 바이크 대신 심슨(Simson statt Lastenfahrrad)'과 같은 방식으로 말이다.

개인적인 경험

동독 메클렌부르크(Mecklenburg) 출신의 통일 이후 세대(Nachwendekind)인 나는 인위적으로 구성된 동독 의식에 관한 이 왜곡된 논쟁을 온몸으로 겪어야 했다. 라이프치히에서 대학에 다닐 때, 나는 작센 방언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의 동독 정체성을 부정당했다. 학생들은 내가 그들과 달리 동독 출신임을 곧바로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동독인'이 아닐 것이라고 단정했다. 정작 동독 정체성을 자신들의 것으로 강력히 주장한 이들은 '동독의 새로운 출발(Aufbruch Ost)' 같은 단체에서 활동하는 서독 출신 대학생들이었다. 분명한 것은, Z세대(Gen Z)에게 동독 정체성은 서독에서 사회화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어려움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다.

내가 서독에서 보낸 시절은 또 달랐다. 동료 학생들은 술에 취해 인터내셔널가(Internationale)를 불렀고, 이는 나에게 불쾌감을 불러일으켰다. 이 노래가 나에게는 동독 정권과 그 이데올로기로 오염된 노래라는 사실을 그들이 무시했기 때문이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극우적 흐름은 나에게 주로 '동독만의' 문제로 치부되어 전달되곤 했다. 한편, 서독에 사는 옛 동창들은 자신들의 동독 의식을 거의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는 라이프치히의 서독 출신 학생들이 동독 의식을 언급하는 빈도와 거의 반비례한다.

몇 년 전부터 나는 슐레스비히-홀슈타인(Schleswig-Holstein) 주에 살며, 북독일 복음루터교회(Nordkirche)의 목사로 일하고 있다. 이 북독일교회는 관할 구역 안에 동독과 서독 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몇 안 되는 대규모 기관 중 하나이다.

적어도 내 삶의 경로를 따라가면 '동-서-동-서독인'인 나에게, 이점은 그곳에 지원한 이유 중 하나였다. 하지만 북독일교회 서독 지역에서 근무하는 내 또래 동료들의 모습은 달랐다. 그들은 아예 처음부터 '동독'으로 가는 것을 배제하거나, 설령 두 지역이 통합된 형태라 해도 지역 간의 차이가 여전히 중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곤 한다.



사진: 마르코 하이넨(Marco Heinen)

카스파르 데 부어(Caspar de Boor)

1994년생으로 메클렌부르크(Mecklenburg)에서 성장했다. 괴팅겐(Göttingen), 스트라스부르그(Strasbourg), 라이프치히(Leipzig)에서 신학을 전공했다. 현재 슐레스비히-홀슈타인(Schleswig-Holstein) 주의 하일리겐하펜(Heiligenhafen)에서 목사로 일하고 있다. 그는 '화해를 위한 평화봉사단(Aktion Sühnezeichen Friedensdienste)'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독일 비영리 사단법인(Deutsche Gesellschaft e. V.)을 통해 다수의 에세이를 발표했다.

‘DDR의 무의식’

나는 이를 두고 이른바 ‘DDR의 무의식’이라 부르고 싶다. 신연방주에서 동독 의식이 부지런히 만들어지는 반면, 정작 DDR 역사의 중요성은 자주 무시된다. 이는 직접 그 시대를 겪지 않은 세대가 과거의 역사를 배우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내가 현재 근무하는 동홀슈타인 지역에도 많은 사례들이 있다. 클라우스토르퍼 타워(Klaustorfer Turm)는 한때 냉전기의 감시 기지였지만, 오늘날에는 관광용 전망대로 이용되고 있다. 페마른(Fehmarn) 섬의 불페너 할스(Wulfener Hals) 캠핑장에는 1988년 고무보트를 타고 탈출한 동독 피난민 가족이 상륙했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골프 코스를 예약하거나 서핑을 즐기는 곳이 되었다.

목사로서 개인적으로 듣는 가족사를 통해서야 비로소, 겉으로 드러난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사람이라는 정체성 아래 깔려있는 동독 또는 분단을 통해 형성되었으나 집단 무의식 속으로 밀려난 삶의 궤적들이 모습을 드러낸다. 이주와 찢어진 가족, 냉전의 위협이나 국경에서의 검문 같은 것들이 결정지었던 1990년 이전의 삶의 이야기 말이다.

이러한 ‘DDR의 무의식’은 심지어 동독 지역에서도 나타난다. 그곳에서 향수 어린 정체성을 형성하려 할 때, 실제 동독 역사에 대한 사실적 기억은 너무나 드물게 다뤄지기 때문이다. 문학에서는 이러한 예외들이 오히려 본질을 이룬다. 예를 들어 이네스 가이펠(Ines Geipel)은 자신의 오빠에 대해, 안네 라베(Anne Rabe)는 폭력적인 교육 방식에 대해 쓴다. 베티나 빌페르트(Bettina Wilpert)는 동독의 청소년 보호시설 조사에 몰두하고, 루츠 자일러(Lutz Seiler)는 발트해를 통한 탈출 사건들을 조명한다.

무의식 속에 잠겨 있던 동독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주제들은, 그 주제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폭발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주가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존재해 온 보편적 현상이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쟁의 위협 또한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끊임없이 의식 위로 끌어올려야만 한다. 그래야 과열된 논쟁이 냉철한 토론으로 바뀔 수 있다.

동독 시대를 재조명하는 것은 정치 교육의 과제이다. 특히 냉전 시기를 직접 경험하지 못한 우리 세대에게는, 정치적 현실 감각을 상실해 버린, 비현실적으로 형성된 정체성에 빠지지 않기 위해 과거의 현실을 공부해야 한다.

이것이 더욱 중요한 이유는 '무의식'이라는 표현이 과거의 흔적들이 통일 이후 세대 안에서 자칫 다른 방식으로 터져나올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동독지역’에서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사회적 논쟁으로부터 스스로를 평행 세계에 격리시킨 채, 그 안에서 카고 바이크를 가장 큰 문제로 여기거나 한때 수많은 동독인이 누렸던 기본권인 망명권을 타인에게는 거부하기도 한다. ‘서독’에서는 우리 공동의 삶을 위협하는 지진과도 같은 위험을 예고하는 지진계적 진동들을 감지하지 못하게 된다.

‘세속화된’ 사회들

입교예식 대신 성인식이 표준인 곳에서 신학 공부를 시작한다는 것은 나에게는 적잖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정치적 논쟁에서 그러하듯, ‘동독’은 종교적 발전에서도 일종의 지진계적 역할을 한다.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Mecklenburg-Vorpommern) 주는 슐레스비히-홀슈타인(Schleswig-Holstein) 주보다 세속화가 훨씬 더

진행되어 있다. 하지만 이제 서독도 그 뒤를 빠르게 쫓고 있다.

혹시 종교성과 정치라는 두 영역에서 나타나는 학습 효과 부재 현상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이 둘의 평행관계는 놀랍다. 종교적 결속력의 상실은 사회적 공론의 중요성이 사라지는 현상과 나란히 진행되는데, 이는 다시 과열된 포퓰리즘 논쟁을 조장한다. 그리고 두 경우 모두, 구동독(DDR) 지역에서 역사적 조건들로 인해 이 과정이 더 먼저 진행되었을 뿐, 결과적으로 서로 비교 가능하다.

예를 들어, 내가 현재 일하고 있는 하일리겐하펜(Heiligenhafen)에는 여러 활동적인 사회단체들이 있다. 나는 이러한 활동적인 사회단체 구조들을 메클렌부르크에서 본 적이 없다. 2025년 6월 초, 나는 '길드 축제(Gildefest)'에 초대받았다. 급진주의, 인종차별 그리고 현실 감각의 상실에 반대하는 연설이 끝난 후, 독일 국가와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가(州歌)가 차례로 울려 퍼졌다. 나는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출신도 애국심이 강한 사람도 아니었지만, 개방적인 공동체 의식을 유지하면서 소속감과 '뿌리내림'을 만들어 내려는 이러한 시도에 감동을 받았다.

그러나 이 '길드(Gilde)' 역시 다른 많은 단체나 교회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그 유효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그들의 전통주의를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이러한 발전, 즉 '세속화'를 통해 공동체를 형성하는 지역 차원의 공적 공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회가 생겨날 수 있다. 동독에서는 중앙집권과 국가의 개입 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를 의도적으로 파괴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공적 공간이 저절로 붕괴되고 있다.

역사를 의식한다는 것, 즉 크고 작은 모든 도전과제에 직면하여 각자 자신의 위치와 시민적 책임을 성찰하는 것은 동독 의식을 형성하는 것으로 대체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동독 역사를 의식화하는 일을 지역적·지방적 차원의 정치 교육 과제로 삼는다면, 우리 사회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공동체 형성을 위한 현실 감각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하나의 공식으로 정리하자면, 문제의 핵심은 형성화된 동독 의식이 아니라 역사와 정체성을 의식화하는 것이다.

멀고도 먼 동독(DDR) – 미지의 나라를 바라보는 관점들

클레멘스 뵈크만

내 앞의 테이블 위에는 태어난 지 4 주 된 아기가 누워 있다. 팔다리가 두 개씩 있고, 아직 사물을 제대로 보지는 못한다. 눕고, 마시고, 소화하는 것조차 이 아이에겐 감당하기 벅찬 숙제이다. 지금 이 아이는 중력의 작용을 경험하는 데 온전히 몰두해 있다. 어떤 대상이나 사람이 자신의 시야에서 사라져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 아이는 아직 알지 못한다. 아이에게 현실이란 눈앞의 지금 이 순간뿐이다. 이 아이는 동독(DDR)에 대해서는 아직 한 번도 들어본 적조차 없다.

하지만 과거는 언제나 이미 그곳에 존재한다. 비록 이 아이가 구 동독 지역에서 태어났을지라도, 아기에게서 역사의 흔적을 직접적으로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천천히, 그리고 조금씩 역사의 다양한 층위들이 이 아이에게도 보이지 않게 스며들 것이다. 사라진 국가인 동독은 종말을 맞이한 지 3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단순한 이야기 그 이상의 존재이다. 이것이 바로 이 아이도 인생을 살아가며 겪게 될 중요한 경험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역사에 대한 지식은 아이가 현재를 더 잘 이해하고, 미래를 위한 행동의 선택지를 넓히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가까운 이웃이나 타인과의 교류에 있어서도 역사에 대한 지식은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역사에 대한 지식이 상호작용을 더 매끄럽고, 쉽고, 단순하게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 아이가 -장차 타인과 공유하게 될- 역사에 대해 더 많은 지식을 쌓을수록, 자신의 행동을 더 신중히 성찰하고, 주변의 몸짓과 생각 그리고 표현을 해석하고 평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1989년, 아기인 내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 주의 카펫 위에서 기어 다니는 법을 배우고 있을 때, 동독 주민들의 광범위한 시위는 정부로 하여금 국경을 개방하게 만들었다. 그 뒤로 사회적 관계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변화가 뒤따랐다. 독일 동부에서 전례 없는 격변의 10년이 시작되는 동안, 그 사건들은 나의 현실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TV나 신문, 라디오 같은 미디어를 통해 관찰된 것들일 뿐, 나의 현실 속으로는 제한적으로만 다가왔다.

이에 서독의 가정에는 동독의 해체가 흔히 이야기되지 않은 채 남겨졌다. 동독과 개인적·전기적 연고가 없는 서독 사람들에게 동독은 일종의 비(非)장소(Nicht-Ort)와 같았다. 심지어 내가 북서독에서 학창 시절을 보낼 때 조차도 동독은 기껏해야 부수적인 현상으로만 등장했다. 역사의 주변 영역으로 치부된 채, 구 서독은 20세기를 통일된 독일로 끝맺고 싶어 했다. 만약 동독에 관해 이야기했다면, 독일 분단의 원인과 다른 사회 모델을 시도한 일에 대한 질문들이 필연적으로 함께 제기되었을 것이다. 특히 1989/90년의 격변을 테마로 삼는 데는 높은 수준의 분별력을 필요로 했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스스로의 역할에 대한 자기 비판적인 질문도 필연적으로 수반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동독은 오랫동안 나에게도 채워지지 않은, 즉 개인적 지평 너머에 존재하는 알려지지 않은 거대한 빈 공간으로 남았다. 이러한 속성은 기본적으로 나의 관심과 호기심을 깨우기도 하지만, 때로는 투영된 이미지나 잘못된 전제들로 영향을 받기도 한다.

그 후 오랫동안 신연방주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동독은 자신의 유년 시절과 청소년기를 보낸 장소로서 긍정적으로 남아 있었다. 어떤 이들은 동독을 정치적 유토피아로 계속 높이 평가하며, 나치 독일과 자본주의 연방공화국에 대한 소위 대안 모델로 여겼다. 반면 다른 이들은 동독을 20세기의 또 다른 공포의 유령으로 보았다. 사람들이 동독에 대해 지금까지 어떤 경험을 결부시키든 상관없이, 동독은 동·서독 모든 지역에서 기준점이자 투영의 대상이며 마찰의 장으로 남아 있다. 건축, 역할 모델, 자산의 분배 혹은 시민 단체의 확산에 이르기까지, 동독과 그 여파는 오늘날까지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양면성과 모순, 그리고 다양성은 엄청나다. 물론, 그것들을 기꺼이 보려는 의지가 있다는 전제하에 말이다.

동독을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지난해 나의 소설 '당신이 얻을 수 있는 것(Was du kriegen kannst)'을 낭독하는 자리에서 나는 "왜 동독(DDR)을 주제로 선택했는가?'라는 질문을 자주 받았다. 사실 소설 집필을 시작하기 전까지, 나는 동독을 다룬 적이 거의 없었다. 국가보안부(Staatssicherheit)의 임무를 수행했던 한 성노동자의 이야기가 나에게 전해진 것은 우연한 일이었다. 이 인물에 대해 깊이 파고들수록, 나는 내 안의 빈자리, 지식의 공백, 편견과 투영된 이미지들을 깨닫기 시작했다. 갑자기 나는 한 인물에 주목하게 되었고, 이 인물을 통해 역사와 그 결과에 접근하는 다양한 길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주인공의 삶은 에르츠게비르게(Erzgebirge)에



사진: 카롤린 핸체스(Carolin Haentjes)

클레멘스 뵈크만(Clemens Böckmann)

작가이자 편집자, 영화 제작자이다. 2024년에는 소설 '당신이 얻을 수 있는 것(Was du kriegen kannst)'이 출간되었고, 2025년에는 '충격 속에서 - 토마스 할란의 가해자 문학(Aus Fassungslosigkeit - Thomas Harlans Täterliteratur)'을 출간했다. 2026년에는 조사 기록물인 '알바로 마더홀츠의 진짜 삶(Das richtige Leben des Alvaro Maderholz)'이 출간될 예정이다.

있는 공산주의적 색채를 지닌 가족사에서 시작해, 소시민적 환경에서 자란 젊은 여성의 도약과 열망을 거쳐 국가보안부와 알코올 남용 사이에 갇혀버린 인물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서사를 관통하게 되었다.

결국 나는 글을 쓰기 시작했다. 태어난 장소와 시기로 인해 나에게 자전적인 접근방식은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항상 직접 경험한 것만 이야기한다면, 나의 어휘력은 빈약할 것이며, 세상에 대한 나의 상상력은 숨막힐 만큼 좁았을 것이다. 1980년대 후반에 태어난 나는 1960/70년대 세상을 - 에르츠게비르게뿐만 아니라- 독서를 통해 이해해야 했다. 다행히도 많은 분들이 그 시절의 경험을 내게 기꺼이 들려주었고, 그건 내게 큰 행운이었다.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삶의 기억과 장소의 의미를 묻는 과정은 새로운 문을 여는 열쇠인 동시에 무거운 짐이기도 했다. 나의 이야기가 결국 어떻게 구성되든지 간에, 인터뷰 대상자들의 기억은 그 안에서 왜곡되어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나의 이야기는 어찌 되었든 그 장소들을 재구성할 것이고, 모든 이가 그곳을 원래의 모습으로 알아보게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책에서 이야기되는 동독은 사라진 국가나 어린 시절의 잃어버린 장소를 대체할 수도 나아가 법치국가적 차원의 배상을 대신해 줄 수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현재 그리고 기억과 역사의 재구성을 책의 주제로 삼을 수밖에 없었고, 또 그렇게 해야만 했다. 소설 속 등장인물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다룰지, 어떤 기대를 품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들의 서사가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어디에서 도구화되고 있는지에 대해 서로 대화를 나눈다. 과거, 주인공이 자신의 관찰과 경험을 슈타지에 팔아넘겼다면, 소설 속 1인칭 화자(Ich-Erzähler)인 '나'는 슈타지의 성 노동자들의 흥미로운 이야기에 관심을 드러낸다. 역사와 경험 그리고 사건들을 어디까지 이용하고, 전시하며, 혹은 공감하며 묘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은 소설을 쓰는 내내 도전 과제로 남았다. 여기서 과거와 현재는 결코 서로 분리될 수 있는 단위가 아니었다. 그렇게 나는 시간의 다양한 층위와 그 얽힘을 파헤치며 글을 써내려갔다.

소설을 오래 쓰면 쓸수록, 역사가 얼마나 멀리 뻗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나의 현실에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점점 더 깨닫게 되었다. 동시에 사건과 이야기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은 초기에는 다분히 거리감이 있었다. 나는 역사와의 친밀감을 스스로 일궈내야만 했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나의 경험, 배경, 그리고 (무)지식들이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이러한 거리감은 매번 새로운 관점으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인터뷰 대상자 중 한 명은 이렇게 말했다. "어쩌면 이런 시간적 거리 덕분에 비로소 그 일들에 대해 쓰고 말하는 것이 가능해졌을지도 몰라요." 그녀는 이어서 이러한 거리 덕분에 사건과 그 영향에 대해 세심하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개방성에 도달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당신이 얻을 수 있는 것'은 한 젊은 여성이 동독을 통과해가는 이야기를 동행하는 책으로 완성되었다. 이 책은 안전한 거리에서 내리는 도덕적 가치 판단이 아니라, 오히려 당대의 모순 속에서 다양한 길을 모색하는 양가적인 인물에 대한 공감 어린 접근이 되고자 했다. 가해자나 피해자로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이야기도 견뎌낼 수 있게 하려는 시도였다.

이는 공동의 기억을 위한 토대가 될 것이다. 즉,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로 대하며 불편하고 어려운 지점들을 표현할 수 있는 말과 언어를 찾아내는 것 말이다. 가장 좋은 결실을 본다면, 이 책은 동독에 관한 공동의 서사 중 일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다른 이야기들을 대체할 수는 없다.

어느덧 나는 서른 중반이 되었다. 1989년 기어 다니던 아기는 성인 남성이 되었다. 이제 나의 현실은 단지 지금 이 순간만이 아니라, 가장 다양한 관계들의 연속성과 여러 경험 세계들의 다채로움으로 존재한다. 이미 동독 종식 이후 두 번째 세대가 자라나고 있다. 그들에게는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동독의 역사를 대면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진다. 점점 더 많은 젊은이들이 동독을 배타적인 정체성의 표시로 여기고 있다. 신연방주에서는 민족주의적이고 반민주적인 세력이 꺾이지 않고 강하게 확장되고 있다. 동독에 대한 지식과 그 연속성은 희미해져가고 있다. 동시에 그 당시의 행동 패턴들은 꺾이지 않은 채 드러나고 있다. 이제 많은 가정에서 동서독의 경험이 서로 교차하고 있다. 동독을 이야기하지 않는 미래란 상상할 수 없다. 오히려 동독을 우리 공동의 경험적 지평이자 공동 미래를 이루는 필수적인 구성 요소로 이야기해야 한다. 이것이 현세대와 다음 세대에게 남겨진 과제이다.

통합(Einheit)이라는 개념에 대하여

파울라 퓌르스텐베르크

우리는 통합이 필요하지 않다

이 생각은 2017년부터 벌써 8년째 내 곁을 떠나지 않고 있다. 이는 터무니없는 생각이다. 왜냐하면 내가 기억하는 한, 동독과 서독이 하나의 통합된 공동체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목표였기 때문이다. 나는 1987년 포츠담(Potsdam)에서 태어나, 통일 이후의 동독 지역에서 성장했다. 나는 소위 말하는 내적 통합에 대한 믿음을 저버렸다. 나는 시들어버린 풍경(verblühte Landschaft)이다.

내가 우리는 통합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할 때, 그것이 결코 정치적 통합, 즉 1990년까지 존재했던 두 독일 국가가 이제 하나의 국가가 되었다는 단순한 사실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 통합은 이미 이루어졌으며, 나는 이를 되돌리고 싶어하는 사람을 단 한 명도 알지 못한다. 비록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확고한 사회주의자로 남아 있는 일부 동독 사람들, 특히 노년 세대가 있긴 하지만, 그들조차 사회주의통일당(SED) 독재 형태의 사회주의로 돌아가기를 원하지는 않는다. 또한 서독 사람들 중에서도 속으로는 옛 서독을 다시 자기들만의 것으로 간직하고 싶어하지 않을까 의심되는 이들이 간혹 있긴 하지만, 그들 역시 소리 내어 그렇게 말한 적은 없다. 장벽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정치적 요구를 했던 유일한 곳은 풍자 정당인 디 파르타이(Die Partei) 뿐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내가 과거 동독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사실을 얼마나 자주 확인해 주어야 하는지 정말 황당할 따름이다. 하지만 환상통도 진짜 통증이기에, 나는 여기에 다시 한번 분명히 적어두려 한다. 나는 절대 동독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지난 10년 간 나는 동독에 대해 이야기하고 글을 써왔지만, 이제는 사용할 적절한 단어들이 사라지고 있다. 하나씩 하나씩 그동안 사용하던 단어들이 의심스럽게 느껴진다.

1 내적 통합

내가 우리는 통합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할 때, 그것은 이른바 내적 통합을 의미한다. 즉 통합의 정신적, 지적, 감정적 측면이자 우리가 추구해 온 소속감을 말한다. 나는 이러한 내적 통합을 환상이라고 생각한다. 사회학자 잔드라 마트호이스(Sandra Matthäus)와 다니엘 쿠비아크(Daniel Kubiak)는 이를 통합의 허구라고 부른다. '그것은 정치적 통합에 문화적 획일성이 상응하며, 또 마땅히 그래야만 한다는 관념을 의미한다.' 2017년 사회주의통일당(SED) 독재청산연방재단의 안나 카민스키(Anna Kaminsky) 총장은 "내적 통합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내적 통합은 오지 않으며,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지도 않다. 문제는 단어 자체에 있다. 통합이라는 단어는 획일성, 일치, 동질성과 너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하나를 뜻하는 첫 음절(Ein-)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어울리지 않는다. 다원주의 사회 안에서 이러한 발상 전체는 그 효력을 잃었다.

2 통일 도취

1990년 10월 3일, 브란덴부르크 문에서 열린 기념행사 현장에는 수많은 독일 국기 사이로 적지 않은 수의 제국기들도 보였다. 그리고 그날 밤 1,500명의 네오나치들이 갓 통일된 독일 전역을 휩쓸며 폭력을 휘둘렀다. 공격 대상이 된 이들은 계약 노동자들, 유색인종, 좌파, 그리고 주택 점거자들이었다. 통일은 내 성장기를 지배한 우익 폭력의 격화를 알리는 출발 신호였다. 누군가에게는 평화 혁명 이후 이어진 이른바 야구 방망이의 시절(Baseballschlägerjahre)이 그 이름만큼 결코 평화롭지 않았던 것이다. 이는 또한 위협받는 이들을 보호하지 않고, 나치들을 종종 방치하고 처벌 없이 넘어가게 한 경찰과 사법 당국의 실패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공권력의 비개입은 1989년 가을에는 큰 행운이었으나, 그 이후로는 지속적인 치욕이 되었다. 그리고 10월 3일은 우익 폭력에 노출된 모든 이들에게 위험한 날로 남아 있다. 당시의 공격들은 그저 통일 도취 속에서 일어난 개별 사건들로 치부되었다. 독일 사전 두덴의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도취(Taumel)란 a) 현기증(어지러운 느낌) b) 도취적인 심리 상태, 내적 흥분, 열광, 과잉된 감정을 뜻한다. 사람들은 그 좋은 분위기를 나치들에 의해 망치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나치들을 단지 통일에 취한 사람들 정도로 여겼다. 말하자면 마치 독일 통일의 도취감 속에서는 우익 구호가 입 밖으로 튀어나오거나 야구 방망이가 손에 쥐어지는 일쯤은 일어날 수 있다는 식이었다. 정치인 클라우스 란도프스키(Klaus Landowsky)는 1990년대를 애국적 분위기 속의 도취적 발전기로 묘사했다. 또한 그는 누가 포함되지 않았는지도 밝혔다. "당연히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애국적인 과업은 동독 지역을 통합하는 것이었지, 이주 노동자들을 통합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통일 파티에 누가 초대받지 못했는지는 처음부터 명확했던 것이다.

3 재통일

과연 다시(wieder)라는 단어는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역사적 현실과 연결되어 있는가? 설령 그 단어가 비스마르크의 독일 통일을 암시하려 했거나 혹은 다른 의도로 쓰였다 할지라도, 그 말은 독일 분단 직전의 시대였던 파시즘 또한 떠올리게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통일(Vereinigung)이라고만 말하기로 결정한다. 다시(wieder)라는 말은 지워버린다. 이 단어가 내게는 불쾌하기 때문이다.



사진: 요나스 루드비히 발터 (Jonas Ludwig Walter)

파울라 퓌르스텐베르크(Paula Fürstenberg)

1987년 포츠담(Potsdam)에서 태어났다. 작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통일 이후 세대와 그들이 겪는 동독식 사회화를 주제로 작업하고 있다. 저서로는 소설 '날개 달린 호랑이 가족(Familie der geflügelten Tiger, 2016)'과 '우주의 나날들(Weltalltage, 2024)'이 있으며, 쾰른의 키펜호이어 앤 비치 출판사에서 출간되었다. 현재 베를린에 거주하고 있다.

4 통합의 언어

그러자 청중석의 한 여성이 사회자가 신연방주(neue Bundesländer)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며, 묻는다. "우리가 언제까지 '새로운 사람들'이어야 하나요?" 사회자는 동독 사람들을 마치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인 것처럼 동부(der Osten)를 단수형으로 부르고 싶지 않았으며, 신연방주는 어쨌든 복수형이라며 해명한다. 나는 두 사람 모두 옳다고 생각하며, 동독(Ostdeutschland)이라는 표현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해 본다. 하지만 곧 우파들이 동독이라는 말을 극우주의의 암호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는 사실이 떠오른다. 그들은 축구 경기장에서 "동-, 동-, 동독"이라고 외쳐댄다. 그리고 이 단어를 프락투어체로 자동차에 붙이고, 목덜미에 문신으로 새긴다. 이 모든 선택지 중에 그것이 최악의 대안이기에, 나는 사회자와 청중석의 여성을 그 문제 속에 내버려 둔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에게는 적절한 단어가 없다. 우리는 심지어 아무 문제가 없는 지리적 명칭조차 제대로 정하지 못하고 있다.

5 드디어 다시 동질적으로

1992년부터 2005년까지 발행된 모든 독일연방공화국 정치체제 소사전 판본에는 통일 항목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다. " 독일이 다시 비교적 동질적인 시민 사회가 되기까지는 아마도 한 세대 전체가 필요할 것이다." 다시. 동질적인. 이것이 바로 독일 통일에서 말하고자 했던 의미였을까? 통일의 탄생 순간부터 '우리가 인민이다(Wir sind das Volk)'라는 구호가 '우리는 한 민족이다(Wir sind ein Volk)'로 옮겨갈 때, 이는 이미 민족적-동질적 환상을 부추겼다. 그리고 설문조사기관 포르자(Forsa)가 매년 가을마다 독일인들이 이제 한 민족으로 결속했는지 물을 때마다, 이러한 인식은 계속해서 더 굳어져간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안타까운 부작용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들의 핵심에 이미 내포되어 있던 것이라면 어쩌겠는가? 그렇다면 나 역시, 좌파 성향의 하위문화 속에서 청소년기를 보냈든 아니든 간에, 이 단어들의 핵심을 수십 년 동안 퍼뜨려 온 셈이다. 이 단어들을 입에 담는 모든 사람들이, 이 핵심을 계속해서 퍼뜨리고 있는 것이다.

6 독일의 통일

독일의 통일은 그동안 수많은 방식으로 이야기되어 왔다. 매년 가을, 베를린 장벽 붕괴와 통일 기념일 연설 속에서 통일은 냉전이 평화롭게 종식되고 민주주의가 독재에서 승리한 성공 스토리이다. 당시 경제활동 인구의 이야기 속에서 통일은 실업센터에서 펼쳐지는 사회적 몰락의 역사다. 당시 젊은 세대의 이야기 속에서 통일은 황무지와 테크노 클럽 지하실, 점거된 주택에서 생겨났다가 사라져버린 자유 공간의 역사이며, 강제 퇴거 혹은 임대차 계약과 화재 안전 규제라는 결말로 끝나는 이야기다. 서독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통일은 왜 동독 사람들은 도심이 아스팔트로 말끔히 정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에 대한 영원한 물음표이다. 하지만 지금은 2025년이다. 극우 정당이 동독 지역 5개 주 전체에서 제1당이 되었고, 연방 전체에서는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우익 폭력 수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곳에서 바라본 통합된 독일연방공화국은, 국가사회주의 이후 그 이름에 걸 맞는 反파시즘 국가를 세우려 했던 세 번째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것처럼 보인다. 이제는 독일 통일을 있는 그대로, 즉 독일 내 파시즘이 다시 힘을 얻게 된 역사로 이야기해야 할 때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된 데 얼마나 타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는 이제 내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 시들어버린 풍경이 된 나는 정당화에는 관심이 없다.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다. 놓쳐 버린 기회를 애도하는 일이다. 우리는 그것을 합의, 통합,

혹은 새로운 통합이라 부를 수 있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재통일이라고 불렀다. 우리는 그것을 독일의 다양성이라 부를 수도 있었지만, 독일의 통일이라고 불렀다. 설문조사기관 포르자(Forsa)는 매년 가을마다 1989년에 쟁취한 민주주의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물을 수도 있었지만, 대신 매년 가을 우리가 한 민족으로 결속했는지를 묻는다. 슈테펜 마우(Steffen Mau)는 평화적 시위 운동이 가졌던 민주적 잠재력은 충분히 사용되지 못한 반면, 민족적 잠재력은 지나치게 사용되었다고 기술했다. 이 단어들 속에 깃든 국가주의적, 민족주의적,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극우적인 잠재력 때문에 나는 말문이 막힌다. 우익 단체들은 1989/90년의 기억을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이용하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해낸다. 그리고 민주적이고 다원적인 사회를 지지하는 우리들은, 이 모든 것에 맞서 싸울 힘이 있는 단어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실패를 인정하는 것은 우울한 일이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이는 그 단어들의 핵심을 계속해서 퍼뜨리지 않기 위함이며, 통일을 反파시즘적이고 다원주의적인 관점에서 기억하고 사유를 확장해 나갈 새로운 서사를 찾기 위함이다. 그리고 내가 작가로서 배운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단어가 강력한 영향력을 가졌으면서도 동시에 대체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2024년 초,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최대 규모로 열린 시위의 수많은 피켓에는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할 일은 바로 지금이다(Nie wieder ist jetzt)' 라고 적혀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결코 다시는 없을 통일(Nie-wieder-Vereinigung)'을 소망한다.

왜 극우주의는 동독의 현상(이 아니)인가

야콥 슈프링펠트

민주주의, 기후 정의, 反차별을 위해 활동하는 활동가이자 작가로서, 나는 지난 2년이 넘는 시간동안 독일 전역을 돌며 낭독회와 토론회에 참여해 왔다. 나의 정치적 울타리 안에서만 머물고 싶지 않았기에, 학생들이나 교회 공동체, 때로는 연방군 관계자들과도 자주 토론을 하고 있다. 몇 달 전에는 뮌헨의 한 문학관과 학교에서 낭독회를 가졌다. 늘 그랬듯이, 나는 작센주의 츠비카우(Zwickau)에서 보낸 나의 청소년기, 이 땅과 맺어 온 상호적인 관계, 신나치주의, 그리고 민주적 시민사회를 강화할 방안들에 대해 강연했다.

행사 중 하나가 끝난 후, 나는 약간 당황했다. 민주주의의 위기에 관해 다룰 때, 이중잣대가 얼마나 만연한지에 놀랐기 때문이다. 한 무리의 청소년이 나에게 다가와 감사 인사를 전하며 안도 섞인 말을 건넸다. "뮌헨에 사는 저희는 정말 평화롭고 민주적인 세계에 살고 있네요! 작센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정말 충격적이에요." 나는 우선 대화를 시작해 준 것에 감사를 표했지만, 그들의 발언은 내 마음 한 구석에 다시금 불편함을 일으켰다. 인플루언서, 팟캐스터 또는 정치인들이 핵심적인 지점을 외면할 때마다 내가 느끼는 바로 그 불편함이다. 그 지점이란 극우 세력은 독일 전역에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으며, 신나치주의의 일상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독일 전체의 문제라는 사실이다. 당연히 바이에른주의 주도인 뮌헨도 예외는 아니다.

흔히들 이런 일이 벌어진다. 독일 내 다른 지역 사람들이 츠비카우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들은 (당연히) 네오나치, 우익 폭력, 혹은 나의 고향 도시에서 벌어진 국가사회주의 지하조직(NSU)의 잠적 사건을 흔히 떠올리곤 한다. 반면 똑같은 사람들이 뮌헨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바이스부르스트, 옥토버페스트, 혹은 FC 바이에른을 머릿속에 떠올린다. 물론 이는 단순히 그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진부한 보도 방식, 선입견, 그리고 오래된 틀에 갇힌 사고방식의 문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는 완전히 모순된 일이다. 뮌헨은 수많은 좋은 것들을 상징하는 도시지만, 동시에 극우 폭력이 빈번히 발생한 현장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2001년 NSU의 네오나치들은 채소 장수 하빌 킬리치(Habil Kiliç)를 살해했고, 2005년에는 소상공인 테오도로스 불가리데스(Theodoros Boulgarides)를 살해했다. 2016년에는 극우 성향의 18세 청년이 올림피아 쇼핑센터 안팎에서 9명을 살해하기도 했다.

이 일화들을 통해 내가 결코 의도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 동독인들이 그저 투박하게 서독인들을 손가락질하며, 동독 내 상황을 축소해 말하는 것이다. 동독 학교에서 강연을 진행하면, 성소수자 혐오, 인종차별, 反유대주의 그리고 기타 다른 형태의 차별을 겪는 피해자들의 모습이 여전히 서독보다 더 많이 눈에 띈다. 불과 몇 주 전에는 작센-안할트주의 한 학교에서 NSU 희생자의 전기를 낭독했을 때, 청중석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이토록 충격적인 반응은 서독에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다. 이와 관련해 나는 세 가지 점을 특히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일상적 인종차별, 네오나치 집단의 일상화, 그리고 극우 사상에 대한 동조[1]는 서독보다 동독에 더 심화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들은 독일 전역에서 발견된다.

둘째, 비록 서독의 反민주적 정서가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해도, 그것이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는 보장이나 자동적인 안전장치는 결코 아니다. 이를 자각하지 못하면 부주의한 행동을 하게 되고, 그저 동독만을 지목하느라 정작 눈 앞의 나무에 가려 숲을 보지 못하게 된다. 통일 후 동독으로 이주하여 그 지역 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많은 네오나치들은 이제 그들의 '동독 성공 모델'을 서독으로 옮기고자 할 것이다. 이미 그 과정에 깊숙이 개입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셋째, 그들은 이미 행동에 나섰다. 극우 청소년 단체들은 동서독 할 것 없이 도처에서[2]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으며, 성소수자 축제(Christopher Street Day)에 반대하는 동원력도 전역에서 증가하고 있다[3]. 또한 동서 간의 격차뿐만 아니라, 도시와 농촌[4] 간의 차이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동독'에 관한 논쟁에서 내가 가장 아쉽게 느끼는 점은 무엇일까? 바로 동독에서 극우주의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비단 동독만의 문제가 아닌 독일 전체의 문제이긴 하지만) 분명한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동독 지역의 임금이 서독 지역보다 여전히 낮고, 상속받을 자산이 적으며, 고위직 진출 기회마저 적다면, 이는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올해 스물세 살인 나의 세대 역시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이것이 극우 세력이 부상하게 된 (수많은) 원인 중 하나이다.



사진: 코코 빌로사(Coco Villosa)

야콥 슈프링펠트(Jakob Springfeld)
츠비카우 출신의 활동가다. 그는 연대하는 동독을 위해 활동해왔으며,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테오도어 호이스 메달(Theodor-Heuss-Medaille)를 수상했다. 2025년 1월 31일, 저서 '서독은 동독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른다 – 왜 우익 세력의 부상이 우리 모두에게 위협이 되는가'를 출간했다.

[1] https://www.tagesschau.de/inland/gesellschaft/autoritarismus-deutschland-studie-100.html#:~:text=31%2C1%20Prozent%20der%20Befragten,auf%2044%2C3%20Prozent%20gestiegen
[2] https://www.zeit.de/2025/17/deutsche-jugend-voran-rechtsextremismus-jugendliche-gewalt-chats
[3] https://cemas.io/publikationen/neue-generation-neonazis-mobilisierung-gegen-csd-veranstaltungen/cemas_-_2024-11_-_research_ paper_-_neue_generation_neonazis.pdf
[4] https://www.tagesschau.de/inland/gesellschaft/studie-afd-waehler-100.html

나의 부모님은 두 분 모두 동독 시절에 태어나고 자랐다. 어머니는 드레스덴에서, 아버지는 츠비카우 근처의 모젤(Mosel) 출신이시다. 두 분은 예나 지금이나 개신교 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며, 동독 체제를 늘 못마땅하게 여기셨다. 심지어 통일 후 아버지가 겪으신 실업조차 지속적인 좌절감을 남기지는 않았다. 마침내 자유롭게 말하고, 여행하며, 투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감사함이 훨씬 더 컸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유로운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근본적인 감사함, 그리고 그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인식은 나에게도 이어졌다. 이는 모든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사회를 바라보는 나의 관점에 영향을 주고 있다.

하지만 부모 세대가 동독 독재 체제에 더 순응하며 살아온 가정에서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 동독의 보육 시스템이나 적은 빈부격차, 혹은 완전고용을 칭찬하거나, 이러한 (내 생각에도 실제로 긍정적인) 측면들에 대해 향수 어린 미화를 하며 그리워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체제 반대자나 정치적 박해를 받았던 이들은 아닐 것이다. 내가 이러한 태도를 근시안적이고 독재를 미화하는 태도로 여기는 것과는 별개로, 이 또한 우리 세대에 영향을 미친다. 부모가 자녀에게 통일 이후 거대한 전환 과정에서 겪은 추락의 경험, 즉 실업과 체제전환, 그리고 그로 인한 가족 내 위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곳에서는, 다중적 위기로 점철되어 또 다시 격변하는 시대에 불안이 싹튼다. 그것은 젊은 세대든 기성세대든 동독 사람들이 또다시 사회적으로 추락할 수 있으며, 지금 현재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전환 과정에서 패배자의 위치에 서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다.

나에게 분명한 것은, 두 가지 관점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체제에 순응한 이들에게는) 동독 시절의 일부 요소들이 좋았을 수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동독이 많은 이들에게 고통을 안겨준 권위주의적 독재 국가였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민주주의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오늘날의 권위주의 세력을 위한 토양에 영양분을 주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동서독 간의 불평등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 이러한 불평등이 그동안 너무나 방치되어 왔다는 사실과 연방의회 선거과정에서 동독지역의 문제가 거의 의제화 되지 못한 점은 반드시 논의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모든 사실이 결코 신나치주의나 반민주주의, 혹은 무분별한 서독 증오를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서독에서 낭독회를 할 때 나는 종종 이런 질문을 받는다. "왜 당신은 아직도 동서독 이야기를 하시나요? 당신 세대에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나는 대개 이렇게 답한다. "글쎄요. 통일은 서독 사람보다 동독 사람들에게 훨씬 더 많은 변화를 주었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이는 오늘날 진행 중인 전환 과정 속에서 근본적인 불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제 친구들조차 그 불신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내가 동서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좋아서가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날이 오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우리 민주주의자들이 '동독'에 대해 이야기할 때만이, 反민주주의자들이 이 개념을 악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젊은 네오나치들이 "동독! 동독! 동독!"이라고 외칠 때면, 나는 가끔 그들보다 더 큰 목소리로 "동독! 동독! 동독!"이라고 되받아치고 싶어진다. 왜냐고? 물론 나는 무엇보다 나 자신을 유럽인이자 한 인간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네오나치들이 내가 고향이라 부르는 이 땅을 가로채려 한다면, 나는 그저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나 역시 동독인이지만, 네오나치는 아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만나는 젊은 사람들을 떠올리면, 정말 두렵고 불안해진다. 최근 들어 교사들로부터 일종의 '소화기' 역할을 해달라는 연락을 자주 받았다. "우리 학교 네오나치 아이들의 마음을 좀 돌려주세요!" 그러고는 교실 책상에 새겨진 하켄크로이츠,

히틀러식 경례, 혹은 우익 폭력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진다. 그런데 왜 이런 접근 방식이 내게는 늘 부족해 보일까?

나를 소화기 역할로 찾으려는 생각은 장기적인 대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네오나치 한 명을 설득해 마음을 돌리게 할 시간에, 차라리 의지가 있는 10명의 학생과 함께 反차별 모임을 만들거나, 시위를 조직하고, 투표하지 않는 사람 12명을 설득해 투표장에 가게 만드는 것이 훨씬 낫다. 우리가 젊은 네오나치에 대해 이야기할 때조차, 나는 이 논의가 너무나 단편적이라고 느낀다. 언론이 동독의 '네오나치 청소년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극우 단체 간부 양성소들은 이를 고맙게 여기며 이렇게 말한다. "그래, 네가 젊은 동독인이라면, 당연히 네오나치가 되어야지!"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동독인'이라는 말이 본래 전혀 부정적인 것이 아님에도, 나 자신을 그렇게 부르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네오나치들은 자신들만의 '동독'에 대한 이해를 내세우며 민주적인 동독인들에게 오히려 해를 끼치고 있다. 네오나치 동독인이 늘어날수록 '극우적인 동독'이라는 클리셰적 서사는 사실로 뒷받침되며, 그로 인해 내가 느끼는 불쾌함과 막연한 불안감이 점점 더 강화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5년이 된 지금, 이제는 서독인도 서서히 막연한 불안감을 느껴야 할 때이다. 그저 우연히 (서)독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인종차별이나 反유대주의 같은 문제로부터 저절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非)통일 속에서 자라나다 – 경청자이자 화자로서의 동독 Z세대

바네사 바이어 & 리자 트렙스

우리는 동독인을 상상할 때, 과연 어떤 모습을 떠올릴까?

백인, 남성, 과거지향적이고 낙오된 모습인가? 이런 고정관념적 이미지는 독일 통일 후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다. 제작사 호퍼리히터 앤 야콥스(Hoferichter & Jacobs)와 라이프치히 대학교가 공동으로 진행한 데이터 분석이 이를 증명한다. 1990년 이후 발표된 수억 건의 언론 기사를 분석한 결과, 우리가 이미 피부로 느끼고 있던 사실이 드러났다. 미디어 속의 동독은 주로 표준에서 벗어난 곳, 위기 지역,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와 무력감 등 부정적으로 묘사되어 왔다. 다채로움, 연대, 민주적 같은 단어는 거의 등장하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히 다른 서사들도 존재한다. 그리고 전형적인 이미지에 부합하지 않는 우리 같은 사람들 - 바네사 바이어(Vanessa Beyer)와 리자 트렙스(Lisa Trebs) - 도 있다. 우리는 동독에서 자랐지만 젊고, 여성이며, 미래를 향해 바라본다. 동독인이 정치에 냉소적이거나 낙후되었다고 묘사될 때, 과연 우리도 포함되는가? 동독과 전환기를 오직 이야기로만 접한 우리에게 동독 정체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오랫동안 우리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공적 담론 속에서 우리의 경험은 너무 자주 빠져 있었고, 젊은 세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2022년, 다큐멘터리 시리즈 '(非)통일 – Z세대는 동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18세에서 26세 사이의 청년 10명을 조명하며, 통념적인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그들의 실제 삶과 통일 독일 및 자신의 뿌리를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을 보여주고 미래에 대한 전망을 질문했다.

우리는 마즐룸(Mazlum)과 같은 이들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한다. 그는 유색인종 동독인으로서 성장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새로 정착한 만하임에서도 고향 에르츠게비르게(Erzgebirge) 방언을 버리고 싶지 않은 마음을 이야기한다. 마리(Marie)는 학업을 마친 후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로 돌아갈지를 고민한다. 마리에게 변화란 바로 자신이 발을 딛고 있는 곳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호앙(Hoang)은 켐니츠(Chemnitz)가 그곳의 테크노 씬으로 유명해지기를 바란다.

이 다큐멘터리 시리즈는 새로운 세대의 시선을 통해 동독을 경험하도록 초대한다. 그 곳은 생동감 넘치고, 모순적이며, 충분히 이야기할 가치가 있는 곳이다.

경청하고, 대화하며, 더 나아가 생각하기

곧 분명해진 사실은 다큐멘터리 시리즈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이 주제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우리 세대의 많은 이들이 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非)통일 이니셔티브와 함께 워크숍, 영화 상영 후 관객과의 대화, 토론회를 조직했다. 자원봉사로 진행되는 이러한 활동들은 종종 세대를 아우르는 장이 된다.

우리의 행사는 대개 모두에게 열려 있으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세대 간의 대화가 이루어진다. 그럴 때면 어르신들은 우리에게 묻곤 한다. "왜 젊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런 문제에 매달리나요? 이건 이제 당신들과는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마치 이 주제가 이미 오래전에 해결된 일인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통일 이후 태어난 거의 모든 이들은 이에 대해 저마다의 의견을 가지고 있다. 이 주제는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가족, 학교, 미디어, 그리고 정치적 일상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주제를 마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의 통일은 동독 시민운동에 참여했던 비교적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그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었다. 하지만 통일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너무 자주 간과되어 왔다. 특히 기성세대는 우리에게 전환기 이후 겪었던 삶의 균열, 즉 경제적 손실과 개인적 좌절, 그리고 정서적 상처에 대해 이야기한다. 우리가 주최하는 많은 행사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은 매우 사적인 대화로 이어진다. 젊은 참가자들은 그 속에서 오늘 날 자신들이 겪고 있는 경험과의 연결고리를 발견한다. 때때로 워크숍은 그들이 그 연관성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고 이를 표현할 언어를 찾아내는 생애 첫 순간이 되기도 한다. 그들은 그동안 많은 것이 제대로 공론화되지 못했음을 느낀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서사에는 전환기와 함께 일어났던 모든 것들, 즉 도약과 작별, 성공과 상실, 새로운 시작과 불확실성과 같은 양가적 감정들을 담을 자리가 종종 없었다.





사진 1: 코코 빌로우(Coco Villow)
사진 2: 아니카 돌마이어 & VNG(Anika Dollmeyer & VNG)

바네사 바이어(Vanessa Beyer)
1997년생으로 라이프치히(Leipzig) 인근에서 성장했다. 정치 커뮤니케이션 및 공공 참여 컨설턴트로 활동 중이다. (非)통일 이니셔티브의 공동 설립자이며, 유럽 문화 수도 – 켐니츠 2025를 위한 프로젝트 '세대 이야기 - 경계 극복하기, 정체성(들) 형성하기(Generationsgeschichten: Grenzen überwinden, Identität(en) gestalten)'의 공동 운영을 맡고 있다.

리자 트렙스(Lisa Trebs)
1997년생으로 라이프치히(Leipzig) 인근에서 성장했다. 개발 정책 분야 전문가로 활동 중이다. (非)통일 이니셔티브의 공동 설립자이며, 유럽 문화 수도 – 켐니츠 2025를 위한 프로젝트 '세대 이야기 - 경계 극복하기, 정체성(들) 형성하기(Generationsgeschichten: Grenzen überwinden, Identität(en) gestalten)'의 공동 운영을 맡고 있다.

Z세대 또한 자신들의 경험을 풀어낼 공간이 필요하다. 동독의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이 자란 곳, 즉 마을이나 지역, 방언, 식문화 전통, 그리고 문화적 특색에 깊은 유대감을 느낀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이러한 요소들이 전국적인 미디어 담론뿐만 아니라, 또래들과의 개인적인 만남에서도 비웃음을 사거나, 평가절하되는 경험을 한다. 동시에 많은 이들은, 주변에서 우익·극우 성향이 점점 보편화되는 것을 보며 소외감을 느끼기도 한다. 그리고 이는 내적 분열감으로 이어진다.

(非)통일 이니셔티브로서 우리는 이러한 감정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러한 감정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우리의 프로그램은 설령 감정이 격해지거나 상반된 입장이 충돌하더라도, 솔직한 대화를 위한 장이 되고자 한다.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일과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 나간다. 또한 긴장과 동시성, 그리고 모순이 존재할 수 있는 공간 안에서 감정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체성(들) – 모두이거나, 아무것도 아니거나, 혹은 그 사이 어디쯤

우리는 다수가 유럽인으로서 사고하며, 사회에 적극 참여하고 민주적으로 활동하는 세대이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은 자신의 동독 정체성을 의식하며 살아간다. 이는 자신이 동독 출신임을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던 이전 세대와는 종종 다른 방식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체성은 이를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악용하려는 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포퓰리스트들과 극단주의 정당들은 동독 정체성을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전유하려 한다. 그들은 동독 정체성을 두려움과 배제, 그리고 구시대적이거나 새로운 적대적 이미지로 채운다. 우리는 이에 맞서 만남과 경험, 그리고 이야기 속에서 형성되는 개방적이고 다채로우며 모순적인 정체성을 제시한다. 이 정체성은 하이브리드 형으로, 다른 정체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작센 출신의 새미(Sammy)는 민주주의를 위한 자신의 정치적 참여를 동독 정체성의 일부로 묘사한다. 마즐룸은 자신을 이주 배경을 가진 작센인으로 정의하며, 비록 지금 다른 곳에 살고 있지만, 에르츠게비르게 지역의 고향 도시와 여전히 유대감을 느낀다. 레아(Lea)에게 고향이란 이웃과 함께했던 주말 농장, 약트부어스트(Jagdwurst)를 곁들인 슈피렐리(Spirelli) 파스타 그리고 노래 '클링 클랑(Kling Klang)'과 같은 어린 시절의 추억인 동시에, 우익적 태도가 강화되는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 호앙(Hoang)은 스스로 동독인이라 느끼지는 않지만, 과거 동독의 계약 노동자였던 부모님이 겪은 경험과 그들의 삶이 그동안 얼마나 주목받지 못했는지를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정체성이란 고정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정체성은 언어, 음악, 건축, 이웃, 가족을 통해 일상 속에서 형성된다. 정체성은 변화하며, 단 하나로 정의될 수 없는 다층적인 것이다.

동독 담론 속에서 Z세대는 어디에 서있는가?

Z세대는 정서적 측면을 경험하면서도 객관적인 분석을 이해하는 세대이다. 이전 세대와 달리 우리 중 많은 이는 "서독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갔다"라는 식의 즉각적인 감정을 더 이상 느끼지 않는다. 그 대신 우리는 구조적인 차이, 즉 경제적 격차, 대표성 부재, 취약한 인프라 등을 분석적으로 바라본다. 또한 우리는 고착화된 권력 구조를 직시하며, 이를 공론화하고자 한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이에 대한 침묵이다. 담론의 공백, 그리고 동독이 가진 다채로운 경험들이 보이지 않게 가려져 있는 것이다.

동독 3세대가 자신들에게 특별한 전환 역량이 있다고 자부한다면, 우리 세대는 명확한 서사 역량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동독이 어떠했는지, 혹은 신탁관리청(Treuhand)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설명하지 않는다. 대신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동독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한다. 기억이란 우리가 결코 겪어보지 못한 시대에 대한 향수를 품는 '오스탈기(Ostalgie)'가 아니다. 우리에게 기억이란

현재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시도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범독일적 서사의 일부로 이해하고 있다. 동독이 직면한 도전과제는 국가 전체의 문제이다. 불신이 커지고 우익 서사가 힘을 얻을 때, 이는 지역적인 문제를 넘어 우리 공동의 미래가 걸린 문제가 된다. 결속력은 저절로 형성되지 않는다. 이를 위해서는 인정과 다양성, 그리고 무엇이 우리를 연결하는지에 대한 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서독 출신의 대화 파트너들과도 교류를 모색하고 있다.

우리는 동독을 표준에서 벗어난 곳으로 보지 않는다. 우리에게 동독은 유럽이라는 공간의 일부이다. 이는 우리가 유럽 문화 수도 – 켐니츠 2025(Kulturhauptstadt Europas – Chemnitz 2025)를 위해 진행 중인 최신 프로젝트 '세대 이야기 – 경계 극복하기, 정체성(들) 형성하기(Generationsgeschichten – Grenzen überwinden, Identität(en) gestalten)'를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우리는 폴란드, 체코의 파트너들을 비롯해 탈하임, 츠비카우, 켐니츠의 활동가들과 함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각 사회는 사회주의를 어떻게 기억하는가? 그리고 젊은 세대는 체제 전환 후 체감되는 결과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이 과정에서 고향, 소속감, 실망 그리고 책임과 같은 개념들을 둘러싼 활발한 협의 과정이 형성된다. 우리의 목표는 지역에 뿌리를 두면서도 유럽으로 연결된, 현재와 미래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구축하는 것이다.

미래를 향한 시선: 미래(Z)세대

우리는 과거와 현재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며, 동시에 동독, 독일, 그리고 유럽에서 능동적으로 미래를 만들어 간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청년들이 자신의 관점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동행한다. 또한 그들과 함께 구체적인 미래상을 발전시킨다. 우리는 민주적 참여와 문화적·사회적 소속감, 그리고 이동성과 정주 전망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우리의 공간은 대도시에서 떨어진 곳에 사는 청년들에게도 열려 있다. 미래는 베를린이나 라이프치히 같은 곳뿐만 아니라, 츠비카우, 게라(Gera), 혹은 오버뵈자(Oberbösa) 같은 곳에서도 싹트기 때문이다. 미래는 일요일에 노년층과 청년층이 함께 모여 배구를 하고 싶다는 지역 현장의 바람에서부터 정치 교육에 관한 초지역적인 논의에 이르기까지 그 모습을 드러낸다. 미래는 이처럼 지역에서 시작되어 그 너머 먼 곳까지 뻗어 나간다.

향후 몇 년간 우리의 목표는 동독 지역에서 새로운 전망을 만들어가는 동시에, 언제나 더 큰 전체를 시야에 두는 데 있다. 우리는 동독의 경험을 성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태도로 다루고자 한다. 차이를 견뎌내고, 책임을 다하며, 새로운 서사를 수용하는 동독을 지향하며.

(非)통일은 우리의 목소리이다. 우리는 경청과 사유 그리고 동참의 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한다. 새로운 관점은 오직 대화를 통해서만 – 논쟁, 의심, 그리고 현장의 대화를 통해서만 – 형성되기 때문이다. 모든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나라를 위하여.

동서독의 젊은 시장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방자치단체는 정치의 기본 단위로서, 시민들의 일상을 형성한다. 유럽이나 국가, 혹은 주(州) 단위에서 만들어진 추상적인 규정들은 지자체를 거치며 아주 구체적인 도로, 어린이집 자리, 대중교통망으로 실현된다. 이와 동시에 시장은 흔히 말하는 '현장'에서 사람들과 직접 소통한다. 그들은 무엇이 제대로 작동하고 그렇지 않은지, 무엇이 사람들을 움직이고 또 분노하게 하는지 잘 알고 있다. 동독과 서독의 농촌 지자체를 대표하는 가장 젊은 시장 중 두 명이 그 이야기를 전한다.

두 분은 왜 이렇게 젊은 나이에 시장으로 출마하셨고, 그 과정은 어땠나요?

레나 부르트(Lena Burth): 저는 재무행정기관에서 세무조사관으로 근무했어요. 루드비히스부르크(Ludwigsburg)의 한 행사에서 '시장'이라는 직업군을 알게 되었고, '나도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잘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장 선거에는 총 6명의 후보가 출마했는데, 그중 4명이 여성이었어요. 저는 가족과 친구들의 지지를 받으며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어요. 홍보물에 들어갈 사진은 취미 사진작가인 제 친구가 찍어주었고, 디자인은 제가 활동하는 음악 동호회의 지휘자가 맡아주셨죠. 완성된 홍보물은 제가 직접 배포했습니다.

파트릭 알브레히트(Patrick Albrecht): 저는 행정사무전문가 분야 직업교육을 마친 후, 2022년 행정석사(Diplom-Verwaltungswirt) 과정을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제가 대학교를 다니던 고타(Gotha)에서 학교 동료와 셰어하우스(WG) 식탁에 앉아, 우리 지역 시장 선거에 누가 출마하면 좋을지 고민한적이 있어요. 그 무렵부터 직접 출마해 보겠다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자라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도 지금도 무소속이에요. 그 말은 곧 후보로 등록하기 위해서 80명의 지지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뜻하죠. 서명을 받기 위해 저는 집집마다 방문했어요. 많은 서명을 얻기 위해서는, 시민들과 제대로 이야기를 나누어야 했죠. 수많은 시민들과 그들의 부엌 식탁에 마주 앉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민들은 이 도시에서 무엇이 바뀌었으면 좋겠는지 제게 여러 제안을 해주었지요. 이후 일간지에서 네 명의 후보 모두에게 자신의 프로필을 소개하는 글을 실을 기회를 주었어요. 또한 공개 토론회도 열리며 모든 과정이 매우 공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결선 투표에 가서는 다소 비신사적인 일도 있었지만요. 상대 후보가 홍보물 하나를 배포했는데, 제가 해석하기에는 '아직 학업 중인 사람은 시장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치려 한 것 같았어요.

그 우려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해보겠습니다. 35세 미만의 시장으로서, 연령대가 높은 시장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을 다르게 시도하고 계신가요?

부르트: 저는 나이가 결정적인 요소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시장이든 각자 나름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저는 세무서에서 세무조사관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알브레히트: 저희가 연령대가 더 높은 시장들과 다른 점은 미디어에 접근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일례로 저는 당선 직후 왓츠앱(WhatsApp)과 인스타그램(Instagram) 채널을 개설해서 시민들과 일상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에서 그날그날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소식을 전하고, 그에 대해 피드백도 받고 있죠. 이곳에 사시는 분들은 함께 소통하고 참여하기를 원하시거든요.

부르트: 정치적 투명성과 직접적인 소통 모두 중요한 요소예요.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새롭게 시도하려는 것이 바로 지자체 전용 앱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시장으로서 내건 특정한 의제보다는 지역 사회에서 처리해야 할 당면 과제들을 해결하고 계신다는 뜻인가요?

부르트: 네, 맞아요. 사실 다른 방법이 없기도 하고요. 현재 저희의 재정 상태가 매우 불안정하거든요. 올해는 정말 겨우 적자를 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내년에도 예산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책을 자유롭게 설계할 여지는 거의 없어요. 사실상 남아 있는 예산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업무에만 사용할 수 있어요.

알브레히트: 정말 적절하게 잘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 지역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상황이 정말 심각합니다.

그렇다면 지자체에서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세 가지 핵심 현안은 무엇인가요?

부르트: 가장 큰 현안은 투자 적체 문제입니다.

1



2



파트릭 알브레히트(Patrick Albrecht)

24살이며, 튀링엔(Thüringen) 주 변두리에 위치한 농촌 소도시 괴스니츠(Gößnitz)에서 줄곧 살아왔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공공 행정 분야에 입문하여 직업교육과 대학 공부를 마쳤으며, 2024년부터 이 평화로운 도시의 시장으로 재임 중이다.

레나 부르트(Lena Burth)

루드비히스부르크(Ludwigsburg) 공공행정대학교에서 법학 학사(Bachelor of Laws) 학위를 취득하고 상급 공무원 자격시험을 통과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주(州) 재무 공무원으로 근무했으며, 마지막 직책은 세무조사관이었다. 2023년부터 오스트라흐(Ostrach) 시장으로 재임 중이다.

사진 1: 잔드라 테츠너 포토디자인(Sandra Tetzner Fotodesign)
사진 2: 잉고 락(Ingo Rack)

오스트라흐(Ostrach)는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 주에서 면적이 가장 넓은 지자체 중 하나거든요. 저희 지자체는 29개의 마을로 나뉘어 있어 상대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도로는 그야말로 절망적인 수준이죠. 여기에 더해 또 다른 걱정거리는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문제예요. 연방 정부의 보조금을 받기는 하지만, 지원 체계가 바뀌면서 시민들이 광통신망을 이용하게 하려면 지자체 자체 예산을 투입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시민들 역시 일정 부분 자기 부담금을 내야만 하고요. 이런 문제들은 소방서 건물의 화재 안전 기준 미충족 문제에서부터, 초등학교의 종일 돌봄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이건 연방 정부의 지침이에요. 이를 위해 학교 건물 증축이 필요하죠. 분명 좋은 프로젝트지만, 한편으로는 체육관 지붕에서 비가 새는 등 기존 학교 시설을 유지하는 데에도 많은 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할 일은 많지만 예산은 부족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알브레히트 시장님, 시장님의 지자체 상황은 어떠한가요?

알브레히트: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최근 튀링겐 개발은행(Thüringer Aufbaubank)이 참여한 전문 컨퍼런스에 다녀왔는데요. 그분들도 지난 수년간 투자율이 마이너스였다고 직접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인즉, 우리가 있는 것만으로 소모하고 버티며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산이 없어서 더 이상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죠. 만약 이를 대출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용 상태인지 판단하기 위해 지자체의 예비비가 충분한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저희는 종일 돌봄과 관련된 문제는 겪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곳 동독 지역 초등학교는 예전부터 소위 '호르테(Horte)'라고 불리는 방과 후 돌봄 시스템을 갖추고 있거든요.

아울러 행정 분야 전문 인력 부족 문제도 강조하고 싶어요. 연방 정부나 주 정부는 매년 몇몇 업무를 지자체에 추가로 넘겨줄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같은 지방자치단체 행정 기관에서는, 어떤 인력으로 그 업무들을 감당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에요. 게다가 규모가 더 큰 지자체들이 더 높은 급여와 직급을 제시할 수 있기에, 상황은 더 어렵습니다.

부르트: 맞아요! 저희도 유치원 교사 한 분을 채용하는 데 거의 9개월이 걸렸습니다.

난민 수용처럼 미디어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는 주제들은 두 분 지역에서 중요하지 않은가요?

부르트: 아니요, 중요합니다. 제가 당선되자마자 가장 먼저 맡은 업무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당시 난민을 더 수용해야 한다는 지침이 군청에서 직접 내려왔어요. 하지만, 정작 저희 지역은 이미 꽉 찬 상태였죠. 시의회에서 여러 차례 긴급 회의를 진행한 후에야, 저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데요. 컨테이너를 아무 데나 설치하는 방식으로는 통합을 이룰 수 없다고 판단해서 부동산 한 채를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시민들이 달가워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난민들이 꽤 잘 통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알브레히트: 저는 그 문제를 직접 겪지는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군(Landkreis) 차원에서 난민들을 수용했거든요. 많은 난민들이 개인가정에 수용되기도 했고요. 그렇지 않았다면 아마 저희 지자체도 부르트 시장님 지역처럼 초기에는 회의적인 시각이 컸을 겁니다.

사회 내, 독일 전체 혹은 특히 지자체 내에서 양극화를 느끼시나요? 만약 있다면 어떤 주제 때문인가요?

부르트: 저희가 느끼는 건 시민들 사이에 공동체 의식이 기본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저희 지역에 잔디 광장을 갖춘 호수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 아름다운 장소를 즐기실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 주차장도 마련해 두었거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방문객들은 단 5미터라도 덜 걷고 싶어서 농경지에 무단 주차를 하거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고, 패들보더들은 수영객을 배려하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모두가 서로 조금씩만 배려하면, 정말 아름다운 곳이 될 텐데,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알브레히트: 이곳 동독 지역에는 이미 널리 알려진 것처럼 매우 전형적인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주 정부나 연방 정부의 정책에 대해 점점 더 극단적인 의견들이 나오고 있죠. 현재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에요. 사실 지자체 차원에서 직접적인 관련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는 끊임없이 화두가 됩니다.

지자체로서 정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큰 현안은 에너지 가격이에요. 가스 요금은 물론이고, CO2 부담금으로 인해 기름값도 계속 오르고 있어요. 이 곳, 농촌 지역에서는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예를 들어 일반적인 건축 비용 또한 오르고 있고요. 인건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지자체에도 끊임없이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지자체도 시민들과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셈입니다.

시의회 내 정치적 분위기는 어떤가요? 정당 간에 양극화 현상이 있나요?

알브레히트: 저희 시의회는 연방이나 주 정치에서 흔히 알려진 대형 정당들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대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의원들 중 스스로를 특정 정당의 일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부르트: 저희 지역에는 기독교 민주연합(CDU), 사회민주당(SPD), 그리고 자유 유권자당(Freie Wähler)까지 세 개의 서로 다른 후보자 명부가 있어요. 모두 정당의 이름을 내걸고는 있지만, 정당 정치를 하지는 않아요. 연방이나 주 정치에서처럼 당론 구속(Fraktionszwang) 같은 것도 저희는 없습니다.

연령대를 보면 두 분 모두 통일된 독일에서 성장하셨어요. 개인적으로 동독과 서독의 구분이 여전히 의미가 있다고 느끼시나요? 지자체 내 분위기는 어떤가요?

부르트: 저는 개인적으로 누군가가 동독 출신인지 서독 출신인지를 두고 스스로 차이를 둔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자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짚을 점이 있다면, 그건 바로 유치원 비용이에요. 우리 지역 주민들은 동독 지역을 항상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곤 해요. 저희는 보육료를 정기적으로 인상해야만 하거든요. 원래 지침상으로는 실제 유치원 보육 비용의 20%를 부모가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저희 지자체 부모님들은 비용의 약 11~12%만 부담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정기적으로 인상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단체 협약에 따른 임금 인상으로 인해, 작년 한 해에만 보육료를 거의 12% 인상해야 했습니다. 현재 종일반 기준으로 3세 미만(U3) 자녀를 둔 부모는 639유로를, 3세 이상(Ü3)은 381유로를 지불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큰 금액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말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곳 부모들은 보육료를 내야 하는데, 동독 지역은 주 정부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그것도 주(州) 재정조정제도(Länderfinanzausgleich)를 통해 우리가 낸 돈으로 말이다" 라고요.

알브레히트: 저희 지자체에서도 부모들이 실제로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요. 한 달에 약 350유로 정도 됩니다. 저희는 오직 마지막 2년만 무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알브레히트 시장님은 동독과 서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시장님의 지자체에서도 여전히 화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브레히트: 나이가 많은 세대의 인식 속에는 여전히 이러한 구분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요. 생일 파티나 큰 축제에 가면 가끔 그런 이야기들을 듣곤 합니다. 보통 임금 차이가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이 곳 출신 청소년들 사이에서 일종의 유행처럼 자신이 오시(Ossi)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는 현상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삶의 모습만 놓고 본다면, 이제 더 이상 차이점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저도 과거에는 다른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직업 교육을 시작한 2019년만 해도, 장벽이 무너진 지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공공 부문 단체 협약상 임금 체계는 여전히 동서 간의 구분을 두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셨는데요. 두 분 모두 비교적 작은 농촌 지자체를 대표하는 만큼, 서로 같은 팀이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동서 간의 차이가 더 크게 느껴지시나요?

부르트: 제 생각에 저희는 같은 문제들과 씨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알브레히트: 맞아요! 적어도 아까 도로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도 '그렇다!'고 느꼈습니다. 어르신들께 전해 들은 것처럼, 서독의 도로는 금으로 깔려 있는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이제 보니 서독의 마을 도로들도 저희만큼이나 상태가 안 좋은 것 같네요.

부르트: 제가 보기에 중요한 것은 동서독 간의 차이가 아니라,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입니다. 오스트라흐는 바덴-뷔르템베르크 주를 통틀어 가장 전형적인 농촌 지역 중 하나입니다. 고속도로를 만나려면, 어느 방향으로 가든 차로 한 시간은 달려야 합니다. 한 시간에 한 번 운행되는 버스도 29개 마을 중 딱 두 곳만 연결해 줄 뿐이죠. 심지어 지자체의 3분의 1은 휴대폰 신호조차 잡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이 곳, 농촌 지역에서 정말 소외되어 있습니다.

알브레히트: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도시와 농촌이야말로 독일 내 핵심적인 대립 구조입니다. 다만 저희 지역 상황이 조금 더 낫긴 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어디서나 휴대폰 신호가 잡히고, 광통신망도 이미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도 10분 거리에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자체의 미래를 위해 한 가지를 바랄 수 있다면, 현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바라시겠습니까?

부르트: 재정적인 면은 물론 행정적인 면에서도 더 많은 자율권이 있길 희망합니다.

알브레히트: 저는 그저 합리적인 수준의 재정적 지원이 다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Wir_in_Ost_und_West

동서독 역사 관련

소셜 미디어 프로젝트 실무 보고서



인스타그램: @wir_in_ost_und_west

2024년과 2025년은 독일 역사에서 중요한 기념비적인 해다. 기본법 제정 75주년, 평화 혁명 35주년 그리고 통일 35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젊은이들에게 이 날짜들은 그저 역사 교과서의 소제목처럼 자신의 일상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로 들릴 뿐이다. 동시에 '동독(Ost)'과 '서독(West)'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남아 있다. 선거 분석이나 언론, 혹은 고정관념 속에서 학습된 속성들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과거의 틀에 따른 경계짓기는 오히려 새롭게 더해지고 있다.

인스타그램 채널 **@wir_in_ost_und_west**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되었다. 이 교육 프로젝트는 청소년들이 동서독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고정관념에 의문을 제기하도록 독려하며, 이를 통해 정치적 참여와 미디어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에듀베르줌(Eduversum GmbH)와 SED 연방독재청산재단이 협력하여 운영하며, 독일 연방 정부 동독 특임관의 지원을 받는다.

이 채널은 젊은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공간인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젊은이들에게 다가간다. 정보성 포스팅, 릴스(Reels), 밈(Memes) 등을 통해 역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구동독(DDR)과 구서독(BRD)에 대한 성찰을 유도하며,



에듀베르줌(Eduversum): 포스트 @wir_in_ost_und_west

공통점과 지역적 차이를 함께 보여준다. 진입 장벽이 낮고 일상과 밀접한 방식의 지식 전달 및 교류를 통해 서로를 동등한 입장에서 이해하고, 때로는 논쟁과 토론을 통해 집단적 정체성 형성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고자 한다.

@wir_in_ost_und_west: 프로젝트 비하인드

소셜 미디어 채널 @wir_in_ost_und_west는 이 프로젝트의 핵심이다. 이곳에서 역사적·정치적 지식을 팩트에 기반하여, 일상과 밀접하며, 개방적인 토론의 형태로 전달한다. 또한 커뮤니티와의 소통을 중점에 두고, 댓글과 투표, 질의응답 세션을 통해 팔로워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 낸다.

이 채널의 진정성은 피어 투 피어(Peer-to-Peer) 방식에서 나온다. 동서독 출신의 두 젊은 여성이 채널을 진행하며, 각자의 관점을 공유하고 생각해 볼 거리를 제공한다. 이들은 커뮤니티의 언어로 소통하며, 역사적 사실이 맥락 속에서 이해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진다. 이는 동서독 역사가 지금까지 주로 '부엌 식탁'에서 개인적으로 전승되어 온 점을 반영한 것이다. 우리 채널은 출처에 기반하고, 다각적인 시각을 제공하며, 실제 사진 자료를 시각적으로 활용해 작업함으로써 이러한 상황과의 연결을 시도한다.

채널의 내용은 역사적 사건부터 오늘날의 현실, 그리고 청소년들의 관심사를 폭넓게 아우른다. 지역적 다양성을 조명하고, 일상사적 측면에서 소비와 노동 세계를 탐구하며, 정치 구조와 기억 문화를 비교한다. 또한 평화 기도회와 월요 시위부터 '미래를 위한 금요일(Fridays for Future)'에 이르기까지 시위의 역사의 흐름을 추적하고, 이주 및 변혁의 경험을 다룬다. 기념일과 트렌드, 커뮤니티의 피드백은 지속적으로 콘텐츠 제작 동기로 반영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실 정보와 토론이 어우러진 풍성한 콘텐츠가 만들어진다.



사진: 에듀베르줌(Eduversum GmbH)

에듀베르줌(Eduversum)

팀: 야니나 프랑케(Janina Franke, 오른쪽), 프라우케 하게만(Frauke Hagemann, 가운데), 미날데 바그너(Minalde Wagner, 왼쪽), 프레데릭 자우엘스(Frederic Zauels, 사진에 없음). 연방독재청산재단이 전문 지식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이들을 지원한다.

통일된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여전히 하나가 되지 못했는가?

야나 파우스 & 지몬 스토르크스

36년은 긴 시간이다. 36년 전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36년 전, 바비 맥퍼린(Bobby McFerrin)의 'Don't Worry, Be Happy'는 독일 차트에 10주 간 머물렀고, 데이비드 핫셀호프(David Hasselhoff)의 'Looking For Freedom'이 그 뒤를 바짝 쫓았다. 서독인들은 형광색 나일론 트레이닝복과 화려한 오버사이즈 셔츠에 캐럿 진을 입었으며, 도시의 풍경은 포퍼(Popper)와 펑크(Punk) 스타일을 한 사람들로 가득했다.

때는 1989년이었다. 연말이 되자 서독의 관점에서는 갑자기 '오시(Ossis, 동독인)'들이 합류했다. 1년 후 독일은 '재통일(wiedervereinigt)' 되었다. 마치 나라가 단순히 확장되거나, 혹은 정상 상태로 되돌아간 것처럼 수동적인 용어로 표현되었다. 초반에는 서독인들에게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다. '재통일'이라는 수동적인 용어는 그들의 관점을 여실히 드러낸다. 심지어 어떤 이들에게는 독일 내 새로운 여행지조차 늘어나지 않았다. 2019년의 자료에 따르면, 서독인 6명 중 1명은 독일 연방 공화국의 구동독 지역을 단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다. 반면, 동독인들에게는 이런 비판을 할 수 없다. 동독인 2명 중 1명은 서독 지역을 10회 이상 방문한 경험이 있다(Ehni et al., 2019). 동독을 향한 많은 서독인들의 관심은 오늘날까지도 매우 제한적이다. 최근 몇 년간 우리는 다수의 질적·양적 연구를 통해 독일 통일의 현주소에 관한 문제를 다루어 왔다. 그 중 한 연구에 따르면, 서독인의 46%가 서독인들은 오늘날까지도 동독에 대해 거의 관심이 없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aus et al., 2020).

동독인의 관점에서 통일은 결코 수동적인 '재통일됨'이 아니었다. 그것은 삶의 뿌리를 뒤흔드는 변화였으며, 많은 이에게 평화로운 시대에는 유례를 찾기 힘든 삶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구서독에서 나치즘 이후 민주주를 재건하는 과정이 경제적 도약 및 번영의 약속과 긴밀하게 맞물려 진행되었다면, 동독에서는 1989년 이후 이러한 과정이 많은 경우 좌절, 실망 그리고 실업과 손을 잡고 진행되었다(Mau 2024). 마지막 동독 정부가 설립한 신탁관리청(Treuhand)의 활동 결과로 인한 수많은 개인적 경험들은 오늘날까지도 상처로 남아 있으며, 이는 헬무트 콜(Helmut Kohl)이 약속한 '꽃피는 풍경(blühende Landschaften)'에 대한 기대와 충돌하는 경우가 많았다.

동독인들은 이 사건을 문법적으로 능동태로 표현하며, 자신들이 직접 이끌어 낸 장벽 붕괴에 대해 이야기한다. 하지만 오늘날까지도 이 전환이 평화롭게 진행된 것에 대해 충분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낀다. 동독인의 71%가 이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Faus et al., 2020).

오늘날까지도 자산, 연금, 임금 면에서 동서 간의 실질적인 차이는 뚜렷하게 존재한다. 이러한 격차는 이미 각종 통계로 충분히 증명되어 있다. 하지만 이 글은 그러한 지표보다는 주관적인 경험에 주목하고자 한다.

독일인의 절반 이상은 분단된 독일을 더 이상 알지 못한다.

독일 연금보험의 자료에 따르면, 자녀 양육 기간을 포함한 1인당 평균 보험 가입 기간은 약 41년에 달한다(독일 연금보험, 2024). 즉, 통일이 된 지 어느덧 한 사람의 평생 직장 생활 기간에 맞먹는 시간이 흐른 셈이다. 1990년 당시 청년이었던 이들은 오늘날 조부모 나이가 되었다. 당시 이미 연금 수령 연령에 해당되었던 많은 이들은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통일 무렵 태어난 이들은 이제 30대 초중반으로 직장 생활을 하며, 평균적으로 첫 아이를 가질 나이가 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분단된 독일을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알지 못한다. 감정적으로도, 경험에 기반해서도 말이다. 그렇다면 이 세대에 이르러서는 모든 것이 평준화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꼭 그렇지는 않다. 세대를 거듭하며 차이가 희미해지기도 하지만, 경험은 사회화를 통해 '상속'되며 고정관념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사진 1&2: 우반 루스/폴리티스(Urban Ruths/Pollytix)

야나 파우스(Jana Faus)
사회학자이자 연구·자문 기관인 폴리티스 전략 연구소(Pollytix Strategic Research)의 설립자 겸 대표이다. 20년 이상 아시아, 호주, 독일의 정치 및 사회적 주제를 연구해왔으며, 독일의 사회 문제에 관한 수많은 출판물을 집필한 작가이기도 하다.

지몬 스토르크스(Simon Storks, 사회학 석사)
사회학자이자 연구·자문 기관인 폴리티스 전략 연구소(Pollytix Strategic Research)의 시니어 컨설턴트로 활동 중이다. 오토 브레너 재단(Otto Brenner Stiftung)의 여러 연구를 통해 독일 통일의 현주소를 추적해 왔으며, 특히 통일 이후 세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오시(Ossi, 동독인)은 게으르다'

통일 이후 세대인 한 서독 청년이 우리가 진행한 연구 중 하나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의 가장 친한 친구는 동독 출신인데, 저는 그 사실을 한 번도 숨긴 적이 없어요"(Faus et al., 2020). 개방성의 표시로 의도된 이 말은 오히려 출신 지역이 여전히 하나의 경계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이면에는 '오시'는 다르다는 인식이 깔려 있으며, '베시'는 그들을 내려다보는 경향이 있다.

또 다른 연구(Faus/Storks, 2019)에서는 통일 이후 세대들에게 동독인을 한 단어로 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동독인들은 스스로를 더 소박하고, 인간적이며, 부지런하다고 보는 반면, 서독인들은 동독인들에게 더 인종차별적이고, 멍청하며, 게으르다고 묘사하곤 한다. 이러한 편견은 여전히 존재한다. 게으른 동독인이라는 서독의 오래된 내러티브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한 단어로 표현하기: 서독인과 비교했을 때, 동독인은 훨씬 더 ...

서독



모르겠음/무응답 13%
차이 없음 1%

동독



모르겠음/무응답 7%
차이 없음 20%

대상: 18~29세의 모든 유권자. 출처: Faus/Storks. (2019).

한 단어로 표현하기: 동독인과 비교했을 때, 서독인은 훨씬 더 ...

서독



모르겠음/무응답 19%
차이 없음 6%

동독



모르겠음/무응답 13%
차이 없음 4%

대상: 18~29세의 모든 유권자.

'베시(Wessi, 서독인)은 거만하다'

반대 방향의 고정관념 또한 존재한다. 가장 흔한 예는 '베시는 거만하다'는 인식이다. 통일 이후 세대인 한 동독인은 이렇게 말했다. "어딘가에 있을 때 가끔 스스로도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오, 전형적인 베시네'라고 말하게 되죠. [...] 그 특유의 잘난 척하거나 거만한 느낌 같은 거요. 어떤 면에선 우리와 소득 수준이 다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차이를 여전히 느낀다고 생각합니다"(Faus et al., 2020).

앞서 언급된 한 단어로 묘사하는 설문조사에서 서독인들은 스스로를 더 규율적이며, 친절하다고 묘사했다. 반면 동독인들은 서독인을 더 거만하고, 자만심이 강하다'고 특징지었다. 한편 동독인들은 스스로를 더 겸손하고, 소박하며, 가난하다고 묘사하는데, 이는 그들이 자주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스스로를 정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독인들 또한 고정관념에 직면한다. "제 친구들 중에는 동독 지역으로 이주했을 때 부유한 베시라고 비난을 받은 친구들도 있어요"(Storks et al., 2023).

정체성: 동독과 서독

적어도 '동독'이라는 개념은 통일 이후 세대안에서도 계속 살아 숨 쉬고 있다. 이때 동독은 단순한 지리적 명칭을 넘어 정체성의 층위로 작용한다. 그 스펙트럼은 동독을 의식적으로 동일시하는 사람들부터 그러한 동독과의 동일화 자체에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들까지 폭넓게 나타난다.[1] 통일 후 30년이 지났음에도 동독인들은 스스로를 동독인으로 식별하지만, 서독인들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표현이 존재하지 않는다. 서독 사람들은 예를 들어 스스로를 남독일인 혹은 북독일인으로 인식할 뿐이다. 통일 이후 세대만을 대상으로 동독과 서독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한 그룹 토론에서 눈에 띄는 점이 있었다. 서독인들은 자신들의 공통된 서독 출신 배경에 거의 의미를 두지 않았다. 반면, 동독인들은 '우리는 여기서 오시 그룹이구나'라는 것을 즉각 알아차리며, 이를 하나의 낙인으로 느낀다(Storks et al., 2023).

그렇다면 결국 부모 세대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부모들이 자신들이 겪은 거대한 시대적 단절, 즉 상처와 굴곡, 그리고 희망을 자녀에게 전수해 줄 것이라고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가족과 통일에 대해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는 동독 청년은 47%에 불과했다. 서독의 경우 그 비율은 겨우 28%에 머물렀다 (Storks/Faus, 2019).

중요한 것은 대화의 여부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야기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2019년 우리가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서독에서는 통일에 대해 대화하는 빈도는 낮았지만, 대화가 이뤄진 경우 긍정적인 내용(22%)이 부정적인 내용(6%)보다 훨씬 더 많았다. 반면 동독의 경우, 통일 시기에 대해 긍정적인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는 응답은 31%,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었다는 응답은 16%로 나타났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부모 스스로 '통일의 패배자'라고 생각하는 가정의 자녀들이 이 시기에 대해 가장 자주 대화를 나누었으며, 동시에 부정적인 서사를 훨씬 더 자주 들었다는 것이다. 동독에서는 서독보다 훨씬 더 많은 청년들이 자신을 '통일 패배자'의 자녀라고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동독 21%, 서독 11%), 이는 왜 동독인들이 평균적으로 통일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지를 설명해 준다 (Faus/Storks, 2019).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동서독의 경험을 하나로 아우르는 공동의 자기이해는 어떻게 형성될 수 있을까? 시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 필요한 것은 만남과 대화, 그리고 서로를 향한 의식적인 관심이다.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고 귀를 기울일 때만 이해를 위한 공간이 생겨난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가 아니라, 함께 이야기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한쪽은 격변과 상실, 그리고 재정립의 시기를 돌아본다. 다른 한쪽은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고, 변화 속에서도 조직성과 책임이 유지되었던 시간을 되돌아본다. 두 관점 모두 독일 기억의 공간에 기여하며, 두 관점 모두 인정을 바란다.

공통의 서사는 억지로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차이를 대립이 아닌 더 큰 전체의 일부로 이해할 때, 그 서사는 자라날 수 있다. "나는 동독인이다"라는 고백이 더 이상 분리의 경계가 아니라 대등한 목소리로 이해될 때, 그리고 서독인들에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즉각적인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고 의문시될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

[1] 자세한 내용은 Storks et al. (2023) 참조

통일 후 35년이 지난 지금,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 통일은 단지 역사 교과서에 기록되었다고 해서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통일은 하나의 과정이다. 그리고 그 과정은 일상 속에서, 대화 속에서, 그리고 상호 존중 속에서 언제나 다시 처음부터 시작된다.

이때 동독과 서독이라는 구분이 유일하게 결정적인 카테고리는 아니다. 이민국가이자 다원적인 현대 사회인 통일 독일 에는 무엇보다 이주민들의 관점 또한 포함된다(Foroutan, 2021).

참고문헌

Deutsche Rentenversicherung. (2024). Statistikband Rente 2023. Berlin: DRV.

Ehni, E.; Riesewieck, F. & Heinrich, R. (2019). ARD – DeutschlandTREND November 2019. Berlin: infratest dimap.

Faus, J.; Hartl, M. & Unzicker, K. (2020). 30 Jahre deutsche Einheit: Gesellschaftlicher Zusammenhalt im vereinten Deutschland. Gütersloh: Bertelsmann Stiftung.

Faus, R.; Storks, S. (2019). Im vereinten Deutschland geboren – in den Einstellungen gespalten?: OBS-Studie zur ersten Nachwendegeneration. Frankfurt am Main: Otto Brenner Stiftung.

Foroutan, N. (2021). Die postmigrantische Gesellschaft: ein Versprechen der pluralen Demokratie. Bielefeld: transcript Verlag.

Mau, S. (2024). Ungleich vereint: Warum der Osten anders bleibt. Berlin: Suhrkamp.

Storks, S., Faus, R., & Faus, J. (2023). Auf der Suche nach Halt. Frankfurt am Main: Otto Brenner Stiftung.



'베어발더 호수(Bärwalder See)': 아니카 토마스(Annika Thomas), 24세, 니스키(Niesky)

사진 시리즈: 고요한 변화

독일 최동단 및 최서단 지역의 젊은 시각들

독일은 아헨(Aachen)에서 괴를리츠(Görlitz)까지 이어지는 나라이다. 최서단 도시와 최동단 도시간의 직선 거리는 630km에 달한다. 언뜻 보기에도 이 두 도시 사이에는 단순히 지리적 거리 그 이상이 존재하는 듯하다. 실제로, 2023년 기준 아헨 지역의 월평균 세전 급여는 3,667유로였던 반면, 괴를리츠 지역은 2,820유로에 불과했다. 2023년 기준 아헨 지역의 평균 연령은 42.5세였으나, 괴를리츠 지역은 49.7세였다. 하지만 두 지역 모두 전통 깊은 산업 및 에너지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다. 두 곳은 각각 라인(Rhein) 지역과 라우지츠(Lausitz) 지역 탄광 지대의 일부로서, 19세기부터 독일의 상당 부분에 전력을 공급해 왔다.

아헨에서 라인-에르프트(Rhein-Erft) 지역에 이르는 라인 광산 지역과, 작센 오버라우지츠(Oberlausitz) 및 브란덴부르크 주 니더라우지츠(Niederlausitz)를 아우르는 라우지츠 광산 지역은 모두, 비록 서로 출발 조건은 다를지라도 구조적 변화의 한복판에 서 있다. 석탄 화력 발전 분야의 고임금 일자리들은 2038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축될 예정이며, 일부는 이미 1990년부터 감축되어 왔다. 두 지역 모두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닌 고요한 변화를 겪어왔고, 지금도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동시에 수많은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작센주 문화협회인 뢰바우렙트(Löbaulebt)와 벨텐타우쉬(WeltenTausch) 이니셔티브의 주관으로 진행되었다. 두 구조전환 지역에 거주하는 25세 이하 청년들은 '고요한 변화 – 독일 통일 35주년'이라는 슬로건 아래, 사진을 출품하며 각자의 고향을 바라보는 관점을 공유했다. 라인 지역과 라우지츠 지역의 청년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130점 이상의 출품작 중 일부를 선정하여 전시회를 기획했다. 이 전시회는 베를린 소재 작센 자유주 연방 대표부와 함께 선보인다. 이번 보고서는 해당 전시회의 일부 작품들을 소개한다. 각 지역별로 7점의 사진을 선정하여 짝을 이루어 나란히 배치하였고, 청년 심사위원단의 해설이 더해졌다.

작가 및 심사위원(알파벳순)

라인 광산 지역: 파울 방크(Paul Bank), 레온 바르디(Leon Bardhi), 레나 블롬베르그(Lena Blomberg), 이다 괴를리츠(Ida Görlitz), 니콜라스 퇴르너(Nikolas Thörner), 로빈 볼프(Robin Wolff)

라우지츠 광산 지역: 셀린 세일란(Selin Ceylan), 리하르트 피들러(Richard Fiedler), 막스 힐제(Max Hilse), 에비 호프만(Evi Hoffmann), 안날레나 리브너(Annalena Liebner), 한나 뮐러(Hanna Müller)

프로젝트 총괄: 막스 힐제(Max Hilse)

이 프로젝트는 미래의 길 동독(Zukunftswege Ost), 프로젝트투게더(ProjectTogether)의 '민주주의를 위해 하나로(Vereint für Demokratie)', 그리고 팜 재단(Palm-Stiftung)의 지원을 받았다. 전시회는 2025년 10월/11월에 베를린 소재 작센 자유주 연방 대표부와 협력하여 개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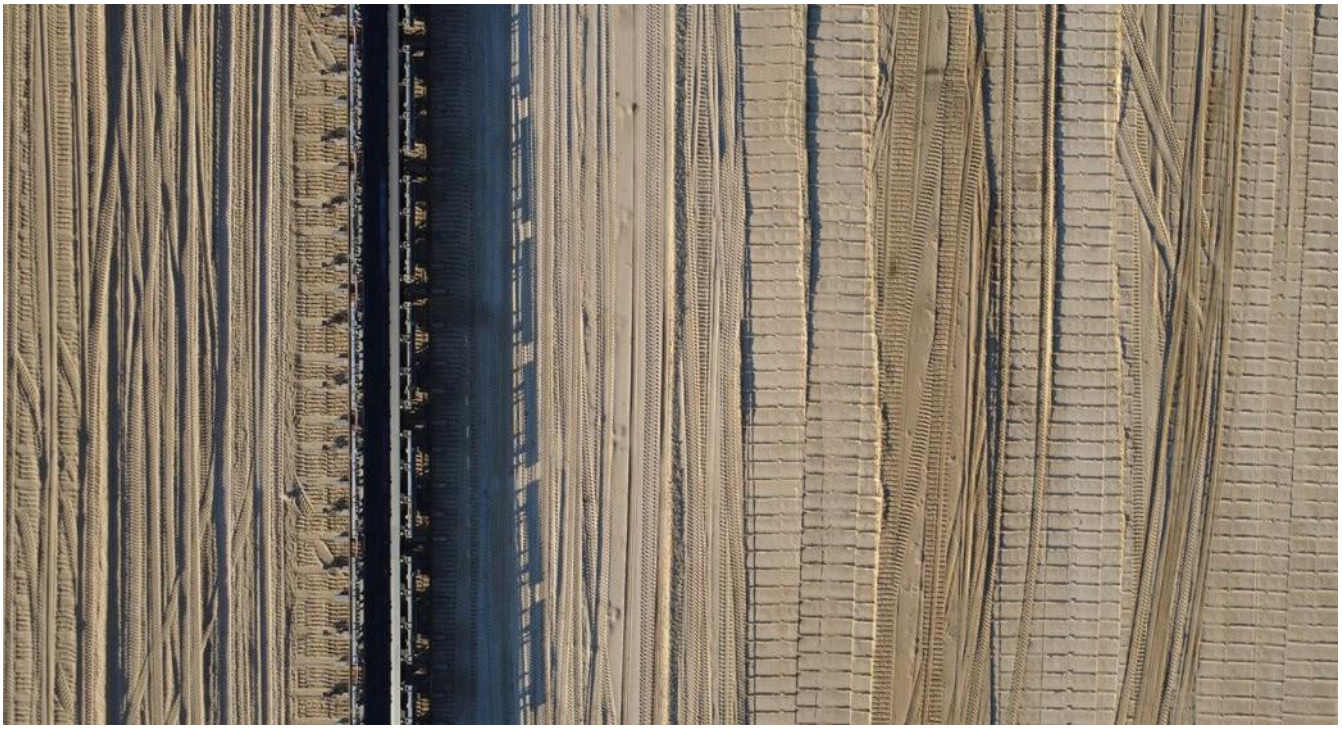
함바흐 노천광산(Tagebau Hambach): 사무엘 부흐(Samuel Buch), 24세, 엘스도르프(Elsdorf)

연방 서부의 함바흐(Hambach) 노천광산은 계속해서 땅을 집어삼키고 있다. 크레인도, 구덩이도, 약속도 모든 것이 거대하다. 남겨진 것은 계획 없는 풍경이다. 자연 복원이나 혁신 공원, 혹은 그저 다음 항공 사진을 위해 준비된 풍경일 뿐이다.

동독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똑같은 갈탄, 똑같은 굴착기, 하지만 헤드라인에 오르는 일은 더 적다. 복스베르크(Boxberg) 발전소는 2038년, 독일의 마지막 석탄 화력 발전소로서 가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우리 지역들은 수십 년 동안 불빛을 밝혀왔다. 독일 전력의 20% 이상이 라인 광산 지역과 라우지츠 광산 지역에서 생산되었다. 가르츠바일러(Garzweiler), 함바흐(Hambach), 라우지츠 (Lausitz), 라이히발데(Reichwalde). 이곳에는 거대한 구덩이와 사라진 마을들, 그리고 집 보다 큰 굴착기들이 있다. 우리의 부모님은 이곳에서 고되게 일하셨고, 조부모님은 어딘가에서는 전력이 공급되어야만 했기에, 마을을 떠나야만 했다.

젊은 세대로서 이런 풍경 속에서 자라다 보면, 때로는 자신도 그처럼 텅 비어버린 듯한 기분을 느낀다. 함바흐(Hambach)든 노흐텐(Nochten)이든 질문은 하나로 귀결된다. 굴착기가 떠나고 나면 무엇이 남는가? 아무런 계획이 없다면 무엇이 찾아오는가? 내가 살고 있는 이 땅과, 나의 보금자리에서 누릴 삶에 대한 결정은 누가 내리는가? 이 곳들은 프로젝트이기 전에 누군가의 집이다. 미래는 구덩이 속에서 자라지 않는다. 미래는 신뢰 속에서 자란다.



라이히발데 노천광산(Reichwalde Tagebau): 파니 볼프(Fanny Wolff), 23세, 브란덴부르크 안 데어 하펠(Brandenburg an der Havel) 출신, 리첸(Rietschen)에서 성장



테라 노바(Terra Nova) 전망대: 사무엘 부흐(Samuel Buch), 24세, 엘스도르프(Elsdorf) 출신

이 흑백 사진에 담긴 것은 파라솔과 선베드가 있는 해변이 아니라, 함바흐(Hambach) 노천광산의 절벽면이다. 하지만 라우지츠 지역에는 실제로 이런 모양의 해변들이 존재한다.

과거 노천광산이었던 많은 곳이 이미 자연 상태로 복원되거나 물이 채워져, 근교 휴양지이자 관광 명소로 발전했다. 가장 잘 알려진 사례 중 하나가 베어발더 호수(Bärwalder See)이다 (60 페이지 참조). 1992년, 클리텐(Klitten) 마을이 철거되기 직전 이 노천광산은 가동을 멈췄다. 1997년부터 노천광산에 물을 채우기 시작해, 2009년에 완료되었다. 그 결과 13km² 면적에 달하는 작센주 최대 규모의 호수가 탄생하여 인기 있는 물놀이 장소가 되었다. 매년 이 호숫가에서는 지역 최대 규모의 축제 중 하나가 개최된다.



코트부스 오스트제(Cottbuser Ostsee): 핀 바이너트(Finn Weinert), 19세, 코트부스(Cottbus)

위 사진은 담수 작업 완료를 약 10개월 앞둔 코트부스 오스트제의 모습이다. 이 호수는 2024년 말에 최종 수위에 도달했다. 하지만 호수에서 수영이 허가되기까지는 2030년까지 기다려야 한다. 참고로, 그때부터 함바흐 노천광산도 물을 채우기 시작할 예정이다. 그 작업은 2070년경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연 복원과 구조적 전환은 이처럼 여러 세대에 걸쳐 완수해야 할 과업이다.



아헨 근교의 폐허: 한네 운도르프(Hanne Undorf), 24세, 아헨 지역

버려진 장소들(Lost Places). 회색빛에 방치되고 폐허가 된 곳. 아헨 인근의 옛 벨기에 군부대에서 촬영한 첫 번째 사진에는 검은색 대문자로 "VERBODEN TE ROKEN"(금연)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다. 하지만 이곳에서 더 이상 관리되지 않는 것은 비단 금연만이 아닌 듯하다.

흑백 사진은 오버라우지츠의 도시 치타우(Zittau)에 자리한, 아마도 한때는 당당한 풍채를 자랑했을 옛 저택의 잔해를 보여준다. 폐허가 된 건물은 도심 한복판에 서있다. 버려진 장소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러한 무질서, 즉 '변화에 맞서는 태도'이자 동시에 '스스로 변모하는 모습'은 스프레이로 그려진 무질서(Anarchie, 아나키)의 상징 'A'에서만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두 사진은 변화란 항상 계획 없이, 때로는 혼란스럽게 일어나며, 빈틈을 남긴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1988년 치타우의 인구는 3만 8천 명이 넘었으나, 2024년에는 주변 마을을 편입하고도 2만 5천 명에 불과했다. 바이스바서(Weißwasser)나 호이에르스베르다(Hoyerswerda) 같은 다른 지역들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곳곳에 화려한 건물들이 있지만, 정작 그곳에 살 사람은 턱없이 부족하다.

추진 중인 수많은 구조 전환 조치들은 1990년대와 같은 또 한번의 구조적 단절의 막기 위해 마련되었다. 오늘날의 변화는 더 느리게 진행되며,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고요하고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예로 치타우(Zittau)는 최근 몇 년간 치타우/괴를리츠 응용과학대학 주변에 연구소들이 들어서면서, 진정한 연구 거점 도시로 발전해왔다. 괴를리츠에는 현재 독일 천체물리학 센터(Deutsches Zentrum für Astrophysik)를 중심으로 대규모 연구센터가 조성 중이며, 이는 앞으로 지금까지 오버라우지츠로 가거나 돌아오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다. 반면 쾰른이나 아헨 같은 대도시권에 인접한 라인 광산 지역들은 이러한 인구 유출을 심각하게 겪지는 않았다.



치타우(Zittau)의 폐허: 야콥 가세(Jakob Gasse), 17세, 뒤르헤너스도르프(Dürrhennersdorf)

초기 독일어권 시인 중 한 명인 안드레아스 그리피우스(Andreas Gryphius)는 이미 1637년 그의 유명한 소네트「모든 것이 헛되도다(Es ist alles eitel)」에서 이렇게 썼다. "지금 도시가 서 있는 곳은/ 머지않아 초원이 되리라." 많은 이들이 그와 비슷한 회의적인 시선으로 구조 전환을 바라본다. 철거와 공실, 그리고 구조 축소가 너무도 자주 풍경을 지배하며, 대중의 인식을 형성하곤 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현실도 존재한다.

서쪽으로는 아헨 대학병원(Universitätsklinikum Aachen)이 테크노이드(technoid) 거인처럼 우뚝 솟아 있다. 257미터에 달하는 노출 콘크리트 외벽은 그 길이가 거의 '타이타닉호'와 맞먹으며, 1985년 운영을 시작하기 전까지 유럽 최대의 건설 현장이었다. 푸른 초원 위에 세워진 이 건물은 격자형 파사드, 배관망, 그리고 설비타워들이 마치 회로도처럼 외부로 드러나 있다. 산업 시대의 시대착오적인 기념비처럼 도시 변두리에 우뚝 선 이 건축물은, 인접한 멜라텐(Melaten) 대학 캠퍼스 위로 미래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자연 한복판의 거인: 멜릭샤 우제이로프스키(Meliksah Uzeirovski), 19세, 아헨(Aachen) 지역



노이에스 무스카우어 성(Neues Muskauer Schloss): 파니 볼프(Fanny Wolff), 23세, 브란덴부르크 안 데어 하펠(Brandenburg an der Havel), 리첸(Rietschen)에서 성장

세계문화유산인 퓌르스트 퓌클러 공원(Fürst-Pückler-Park) 내에 위치한 노이에스 무스카우어 성의 탑들 또한 주변 풍경을 압도한다. 이 성 또한 대칭과 명확한 기하학적 형태로 매력을 자아낸다. 그러나 앞서 언급된 건물과는 전혀 다른 인상을 준다. 지금 모습의 성은 사실 아헨 대학 병원보다도 그 역사가 짧다. 노이에스 무스카우어 성은 1945년 발생한 참혹한 화재로 오랫동안 검게 그을린 폐허로 남아 있었다. 1990년 이후에야 비로소 복원 작업이 시작되었고, 2013년에 마무리되었다.

사진에 담긴 두 건물은 초원을 병원으로, 잡초가 무성한 폐허를 다시 성으로 탈바꿈시키는 인간의 창조력을 보여준다. 구조적 변화는 단순히 무언가를 잃는 것, 그 이상이다. 그것은 공간을 새롭게 구상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독일 통일 광장, 노이스(Neuss): 알렉산드라 오텐스만(Alexandra Ottensmann), 17세, 노이스(Neuss)

원래 하나였던 것들이, 이제 함께 성장한다 - 정말 그럴까? 위키피디아의 '독일 통일 광장(Platz der Deutschen Einheit)' 리스트에는 14곳이 등록되어 있다. 하지만 라인 광산 지역의 노이스(Neuss)에 위치한 광장은 아직 아무도 추가하지 않았다. 이러한 명칭의 광장은 브라운슈바이크(Braunschweig)에서 비스바덴(Wiesbaden)에 이르기까지 곳곳에 있으며, 동독의 세 도시에도 존재한다. 대개의 경우 그리 화려한 모습은 아니다. 또 다른 사진에 등장하는 표지판들이 판매되는 장소들은 위키피디아에서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한 가지 짐작할 수 있는 점은, 이 표지판들은 통일 광장을 찾아보기 힘든 곳, 즉 동독의 지방 시골 마을에서 훨씬 더 자주 눈에 띈다는 사실이다.

이런 사진들이 찍히는 나라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쨌든 하나로 통합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2023년의 한



라우지츠(Lausitz) 축제 판매대: 니콜레타 자비데이(Nicoleta Zavidei), 21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RW) 출신, 바이스바서(Weißwasser)에서 성장

설문조사에 따르면 서독인의 18%가 자신을 서독인으로 정의한 반면, 동독인은 40%가 자신을 동독인으로 정의했다(Infratest Dimap). 또한 동독 젊은 세대의 61%는 여전히 동서 갈등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다(MDR). 밀 이삭 화관(Ährenkranz)에 대한 낭만이 이토록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는가? 2019년에 시행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989년 이후 동독인이 서독을 방문한 횟수는 평균 68회인 반면, 서독인이 동독을 방문한 횟수는 17회에 불과했다. 심지어 서독인의 17%는 동독 지역을 단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WDR).

앞서 언급한 설문조사와 사진들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을 여실히 보여준다. 서독에서 독일 통일을 바라보는 태도는 의무감은 있으되 무관심하다. 반면 동독의 경우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이 점차 뒤로 밀려나고 있으며, 특히 많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새로운 동독 의식이 싹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우지츠(Lausitz) 출신의 청소년 심사위원단 역시 스스로를 동독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들만의 고유한 것에 대한 강한 애착이 타인과 통일에 대한 거부로 이어질 때, 상황은 우려스러워진다.



'더 빠르게, 더 멀리, 더 높게': 니클라스 하르트만(Niklas Hartmann), 23세, 라인-노이스 지역(Rhein-Neuss-Kreis)

독일은 아헨에서 괴를리츠까지 이어지는 나라지만,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가고자 하는 이들에게 그 길은 험난하기만 하다. 프랑크푸르트나 쾰른에서 환승해야 하며, 때로는 심지어 베를린을 거쳐 돌아가야 한다. 동서를 잇는 철도 노선은 매우 적다. 이것은 서로에 대한 낮은 관심의 결과일까, 아니면 오히려 원인일까? 누가 알겠는가.

이동성은 지역 주민의 삶도 결정짓는다. 라우지츠는 17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자부심 넘치는 철도 지역이다. 한때 위용을 자랑했던 수많은 역사(驛舍)들이 그 증거이나, 안타깝게도 그 중 일부는 방치되어 쇠락했다. 오른쪽 사진에 보이는 뢰바우(Löbau)역이 바로 그런 사례다. 반면 코트부스(Cottbus)에는 약 10억 유로 규모의 투자와 함께 구조 전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새로운 ICE 정비 공장이 들어섰다.

특히 우리 같은 젊은 세대는 물론 출퇴근하는 사람들에게는 인근 대도시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라인 광산 지역의 상당 부분은 라인-루르 광역철도(S-Bahn)가 활발히 운행된다. 아헨 지역은 현재 레지오트램(Regiotram) 건설을 계획 중이다. 오버라우지츠 지역 또한 최근 몇 년간 드레스덴행 열차 배차 간격을 꾸준히

단축해 왔다. 그러나 라우지츠의 농촌 지역에서 괴를리츠, 바우첸, 코트부스 같은 지역 중심지로 이동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우며, 베를린이나 드레스덴 같은 대도시로의 접근은 말할 것도 없다.

농촌 지역의 많은 청년들에게 이동이란 대개 처음에는 모페드, 동독 지역에서는 주로 심슨(Simson)으로 시작해 나중에는 자동차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대중교통이라는 대안이 있는 경우가 드물기도 하며, 있더라도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드레스덴과 괴를리츠 사이처럼 철도 노선이 아직도 전철화되지 않은 곳에서 특히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 곳은 여전히 디젤 기관차만 운행되며, 그로 인해 장거리 고속열차 연결이 불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와 주 정부의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방 정부 차원의 구속력 있는 확답은 아직 없는 상태이다. 원활한 교통망 확충은 구조적 전환을 성공으로 이끄는 필수 조건이다. 이제는 교통망 확충에 나서야 할 때다. 특별 기금이 있는 지금이 아니라면, 과연 언제 하겠는가?



뢰바우 역: 막스 울만(Max Ullmann), 21세, 드레스덴(Dresden), 뢰바우(Löbau)에서 성장



복싱: 아가예프 우제이르(Aghayev Uzeyir), 16세, 아헨(Aachen)

청소년들이 싸우고 있다. 스포츠 경기장 안에서만이 아니라, 자신들을 향한 기대와 앞날의 막막함, 그리고 구조적 공허함에 맞서 싸우고 있다. 아헨에서의 복싱, 데미츠-투미츠(Demitz-Thumitz)에서의 캠핑. 이는 일상에서의 탈출이자, 청소년들에게 공간을 내어주는 일이 드문 이 나라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자신들만의 공간이다.

두 사진 모두 소외된 청년들이 아니라, 오히려 무언가에 의해 굳건히 지탱되고 있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친구들, 자신이 발 딛고 선 장소, 그리고 자신만의 아이디어가 그들을 지탱하고 있다. 두 구조 변화 지역의 청년들에게 정작 부족한 것은 태도가 아니라, 참여의 기회다.

구조적 전환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몇 마디로 표현하자면, 청년들이 머물고 싶거나, 직업 교육이나 학업을 마친 뒤 다시 돌아오고 싶은 지역으로 가꾸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내에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야 한다. 또한 문화적 혜택과 만남의 장소를 갖춘 살기 좋은 환경도 필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맞는 또래 청년들이 곁에 있는 것이다.

지역 발전의 초점은 바로 이러한 성공 조건들에 맞춰져야 한다. 청년들이 충분히 있어야만, 그 지역은 향후 돌봄과 산업 분야에 필요한 노동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기업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며, 지역 단체에서 활동할 헌신적인 인재와 미래에 대한 전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미래를 위해 지역 사회에서 함께 싸워나가야 하며, 그 과정에서 낙관주의를 잃지 말아야 한다.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음을 그리고 우리 지역이 밤을 앞둔 황혼이 아니라 동트기 전 새벽에 서 있다는 확신을 가질 때만이 비로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

우리는 지금 일출 앞에 서있다. 하루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 독일의 최서단 지역이든 최동단 지역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 하루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



캠핑 여행: 알렉산더 나투쉬(Alexander Natusch),16세, 바우첸(Bautzen)

제2장

독일 연방정부의 동독 지역의 현 과제에 관한 주요 선정 사업 (제21대 의회 임기)

동독의 시민참여와 자원봉사? 다양하고 활발하게!

독일에서는 수백만 명이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다. 시민참여와 자원봉사 활동은 참여하는 개인을 지역사회와 더 긴밀히 연결하고 네트워크를 확장함으로써 사회 결속을 다지고 사회참여를 촉진한다. 특히 동독 지역에서는 스포츠, 문화, 여가, 환경보호 등 공동체 유대를 강화하는 활동에 참여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동독 지역의 시민사회 참여율은 약 37%로 서독(40.4%)[1]보다 다소 낮지만, 통일 이후 동독에서 참여율이 크게 증가하면서 동서 간 격차가 점차 좁혀지고 있다.

도시들이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독 지역은 여전히 농촌 지역과 구조적 기반이 취약한 지역이 주를 이룬다. 이러한 곳일수록 지역사회활동과 자원봉사에 나설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하다. 독일 농촌 지역의 시민사회 참여율(41.6%)은 도시 지역(38.8%)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이는 사회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농촌 지역(30%)과 사회경제적 여건이 매우 심각한 농촌 지역(35%)에서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2] 이러한 현상은 특히 동독의 마을과 소도시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자원봉사자들은 이러한 동독의 농촌 지역에서 종종 여러 난관에 부딪힌다. 재정적 지원과 사회적 인정이 부족하며 젊은 세대의 유출도 계속되고 있다. 서독에 비해 자원봉사 지원체계가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체계적으로 조율하거나 참여자를 동원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동독에서는 동시에 기업과 시민사회단체 간의 협력이 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인구 대비 등록된 협회 수가 서독보다 더 많고, 비공식적인 자원봉사 활동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제 중요한 과제는 현재 구조적 장벽으로 인해 참여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 집단을 자원봉사로 이끌어내는 것이다. 저소득층, 저학력층, 이주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접근성을 높이는 일은 자원봉사의 미래 세대를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특히 주민들이 언제든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지역 내 거점지원센터를 확충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1] 2019년 자원봉사 설문조사(Freiwilligensurvey 2019)

[2] Tuuli-Marja Kleiner & Luise Burkhardt (2021). https://www.diw.de/de/diw_01.c.824080.de/publikationen/wochenberichte/2021_35_1/ehrenamtliches_engagement_soziale_gruppen_insbesondere_in_sehr_laendlichen_raeumen_unterschiedlich_stark_beteiligt.html

독일 시민참여 및 자원봉사 재단 위탁 연구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참여 지원(Kommunale Engagementförderung)’[3]

연구 주제
16개 연방주 내에서 시민참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반 조건은 어떠하며, 그 발전 양상은 어떠한가?

주요 결과
서독 지역은 시민참여의 오랜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동독 지역은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관련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긍정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시민참여 지원이 중요하다는 인식은 독일 전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며,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참여 지원’ 연구에 따르면 많은 지자체가 자원봉사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중앙 차원의 정보·상담 서비스도 유용하지만, 이것이 현장의 구체적인 지식을 대체할 수는 없다. 수많은 과제가 지역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이해와 현지 전담 인력이 있어야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 시민참여 및 자원봉사 재단

독일 시민참여 및 자원봉사 재단(Deutsche Stiftung für Engagement und Ehrenamt, 이하 DSEE)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적으로 개인과 단체를 지원하는 기관이다. 본 재단은 시민참여와 자원봉사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봉사자들이 현장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활발한 시민사회를 조성하고 독일 사회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본 재단은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州)의 노이슈트렐리츠에 본부를 두고 있어 동독 지역 자원봉사 현장이 직면한 과제에 대해 높은 문제 인식과 이해를 갖추고 있다.

DSEE, 동독 지역의 시민참여와 자원봉사 지원

본 재단은 여러 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학술연구 과제 지원 등을 통해 그 임무를 수행한다. DSEE는 2024년까지 약 13,100건의 지원 신청을 승인했으며, 지원 규모는 약 1억 2천만 유로에 달한다. 전체 지원금의 80%가 구조적 기반이 취약한 농촌 지역에 투입되었다. 특히 동독 지역(베를린 포함)에서는 약 4,750개 프로젝트에 5,200만 유로가 지원되었고, 이 지역의 승인 건수는 2020년 이후 꾸준히 늘어나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3] Hanna Kribbel & Ralph Richter (2024). Kommunale Engagementförderung. Eine bundesweite Untersuchung kommunaler Unterstützungsstrukturen für Engagement und Ehrenamt. Deutsche Stiftung für Engagement und Ehrenamt. Neustrelitz.

DSEE는 연방 시민참여 네트워크(Bundesnetzwerk Bürgerschaftliches Engagement) 및 튀넨 지역개발연구소(Thünen-Institut für Regionalentwicklung e. V.)와 공동으로 '참여하는 지역(EngagiertesLand)' 프로그램을 출범했다. 이 사업은 구조적 기반이 취약한 농촌 지역이 시민참여, 자원봉사 및 지역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25년 기준, 독일 전역에서 93개의 시민참여 네트워크가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중 57개가 동독 지역에 위치해 있다. 또한 DSEE는 튀넨 지역개발연구소와 새로운터전만들기협회(Neuland gewinnen e. V.)가 운영하는 '지역 혁신가(Neulandgewinner)' 프로그램과 협력하여 공동 행사 개최, 관계자 간 네트워크 구축 등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이 외에도 동독 지역의 시민참여와 민주적 공동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결성된 전국 재단 연합체인 '동독의 미래를 여는 길(Zukunftswege Ost)' 공동 이니셔티브 구축에도 참여하고 있다. 2024년부터는 작센주(州) 사회·보건·사회결속부와 함께 '지역 참여센터 역량 강화 – 현장 활동가 및 자원봉사자 확보(Regionale Engagementzentren stärken – Engagierte und Ehrenamtliche vor Ort gewinnen)' 모델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구조적 기반이 취약한 낙후된 농촌 지역에 10개의 참여지원 시설을 설립 및 확장하고 있다.

작은 자극, 큰 효과

특히 구조적으로 취약한 농촌 지역에서 시민참여와 자원봉사는 활기찬 공동체의 핵심 기둥이다. DSEE는 이러한 지역을 대상으로 소규모 지원사업을 운영하며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해당 지역에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비영리 단체는 최대 1,500유로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의 목표는 시민참여 활동 또는 자원봉사 수행에 있어 진입 장벽이 낮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사업을 통해 2024년까지 약 7,500개의 프로젝트가 지원을 받았고, 그중 2,900개가 동독 지역에서 진행되었다.

특히 상담·안내 창구 역할을 하는 거점지원센터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DSEE의 접근성 높은 상담 서비스가 수요가 많다. 베를린을 제외한 동독 지역의 경우, 활동가들의 상담 서비스 활용률이 서독보다 63% 더 높게 나타났다. 다만, 상담 주제의 경우 동서독이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활동가들은 지역을 불문하고 관료주의적 행정 절차, 법적 문제, 세무 처리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모범 사례: 'KommA – 인종차별에 맞서는 지자체 연합'

동독 지역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또 다른 사례는 연방정부 이주·난민·통합 및 반인종차별 특임관실이 추진하는 'KommA – 인종차별과 혐오에 맞서는 지방자치단체 연합 및 전략(Kommunale Allianzen und Strategien gegen Rassismus und Hass, 이하 KommA)'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예나, 괴를리츠, 비스마르 등 시를 비롯해 미텔작센군 및 포어포머른-그라이프스발트군 등 동독의 여러 시범 지자체들이 참여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자원봉사자들이 인종차별과 각종 차별에 대항하는 연대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동독의 다수 지역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명예직 시장'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접근과 지원이다. 이들은 교육, 수요 조사, 실무 안내 자료 등을 통해 적대적 상황에 대처하는 역량을 기르고 실무 중심의 도움을 받는다. 또한 디지털 플랫폼과 지역 워크숍을 통해 동료 간의 경험을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이로써 KommA는 자원봉사자들의 보호와 역량 강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동독의 구조적 취약 지역에서 지역사회 참여와 사회 결속을 위한 지속가능한 구조를 만들어나가고 있다.

동독 지역의 시민참여를 존중하고 인정하기

연방정부 동독특임관실이 주관하는 공모사업 '실천!(machen!)'이 2025년 6회째를 맞이했다. 독일 시민참여 및 자원봉사 재단(DSEE)과의 협력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25년에는 1,100건이 넘는 프로젝트 아이디어가 접수되었는데, 이는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총 83만 4,000유로의 상금이 수여되었으며, 수상 프로젝트 대다수는 동독의 농촌 지역에서 제출된 프로젝트였다. 이는 참여형 공모사업 '실천!(machen!)'이 시민참여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내는 지원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전국 단위의 독일 시민참여상(Deutscher Engagementpreis) 또한 자원봉사 활동을 가시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작년 전체 후보 중 18.6%가 동독 출신이었다는 점은 현재 동독의 자원봉사 활동이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공동 이니셔티브 '동독의 미래를 여는 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과제이다. 이러한 공동의 과제에 기여하고 동독 지역의 시민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차이트 재단 부체리우스(ZEIT Stiftung Bucerius), 셀렉스 재단(Cellex Stiftung), 프로이덴베르크 재단(Freudenberg Stiftung) 및 독일 연방재단협회(Bundesverband Deutscher Stiftungen)를 중심으로 여러 재단이 힘을 모았다. 이들이 조성한 '동독의 미래를 여는 길 기금'은 민간 자금을 활용해 운영된다. 복잡한 관료적 절차를 배제하고, 동독 지역의 민주주의·다양성·통합을 위해 노력하는 협회와 시민사회 조직, 협력 네트워크를 지원한다. 시행 첫해에 20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후원했고, 100만 유로에 육박하는 민간 자금을 투입해 동독 지역의 민주적 참여활동을 지원했다.

BULEplus 사업 – 문화예술 프로젝트 '모두의 터전(Aller.Land)'

'모두의 터전 – 함께 만들고 기반을 다지자(Aller.Land – zusammen gestalten. Strukturen stärken., 이하 Aller.Land)' 사업[4] 또한 주목할 만하다. 'Aller.Land'는 연방문화미디어청과 연방 농업식품향토부가 연방 차원의 사업인 '농촌개발 및 지역 가치창출(BULEplus)' 재원과 연방정치교육원의 재원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며, 연방내무부가 파트너로 참여하는 사업이다. 'Aller.Land'는 2023년 5월부터 주로 구조적 기반이 취약한 농촌 지역에서 문화, 참여, 민주주의 활동을 지원한다. 독일 전역 30개 지역에서 6년에 걸쳐 문화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며, 그중 11곳이 동독 지역이다. 모든 과정은 자원봉사를 기반으로 하는 시민주도 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진행된다. 해당 사업의 목표는 문화와 민주주의 활동, 정치 교육, 지역 개발을 연결하는 새로운 연대를 구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도시.농촌.문화 여행(Stadt.Land.Kult(o)ur) – 지역을 누비는 민주적 대화 테이블(demokraTISCH unterwegs)'[5] 프로젝트는 일상 속에서 주민들이 만나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참여자들은 '알텐부르크 대화 테이블(Altenburger Tisch)'과 '정치 소통 테이블(PoliTISCH)'과 같은 형식을 빌려 지역 곳곳을 순회하며 대화의 장을 마련한다.

[4] '농촌개발 및 지역 가치창출 프로그램(BULEplus)'은 여러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농촌 지역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할 새로운 시범 프로젝트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5] 튀링겐주(州) 알텐부르거란트군

활용되지 않은 전문인력 잠재력: 동서독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탄탄한 전문인력 기반은 독일의 경제적·사회적 번영의 근간이다. 현재 노동시장은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기업들은 숙련된 인력을 구하지 못해 공석을 채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추세는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독일의 사회보험 의무 가입 근로자 약 3,500만 명 중 800만 명 이상이 55세 이상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앞으로 10~12년 정도만 노동 시장에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동독 지역에서는 수년 내에 노동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젊은 층보다 은퇴로 인해 노동 시장을 떠나는 고령 인력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6]

또한 도시보다 농촌 지역에서 평균을 상회하는 심각한 전문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특히 구조적 기반이 취약한 동독의 농촌 지역에서 두드러지는데, 해당 지역의 인구 고령화가 더 심화되었다는 점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7]

따라서 목표를 명확히 설정한 대책을 통해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여기에는 연방정부의 '전문인력 전략(Fachkräftestrategie)'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도 포함된다.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열쇠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제고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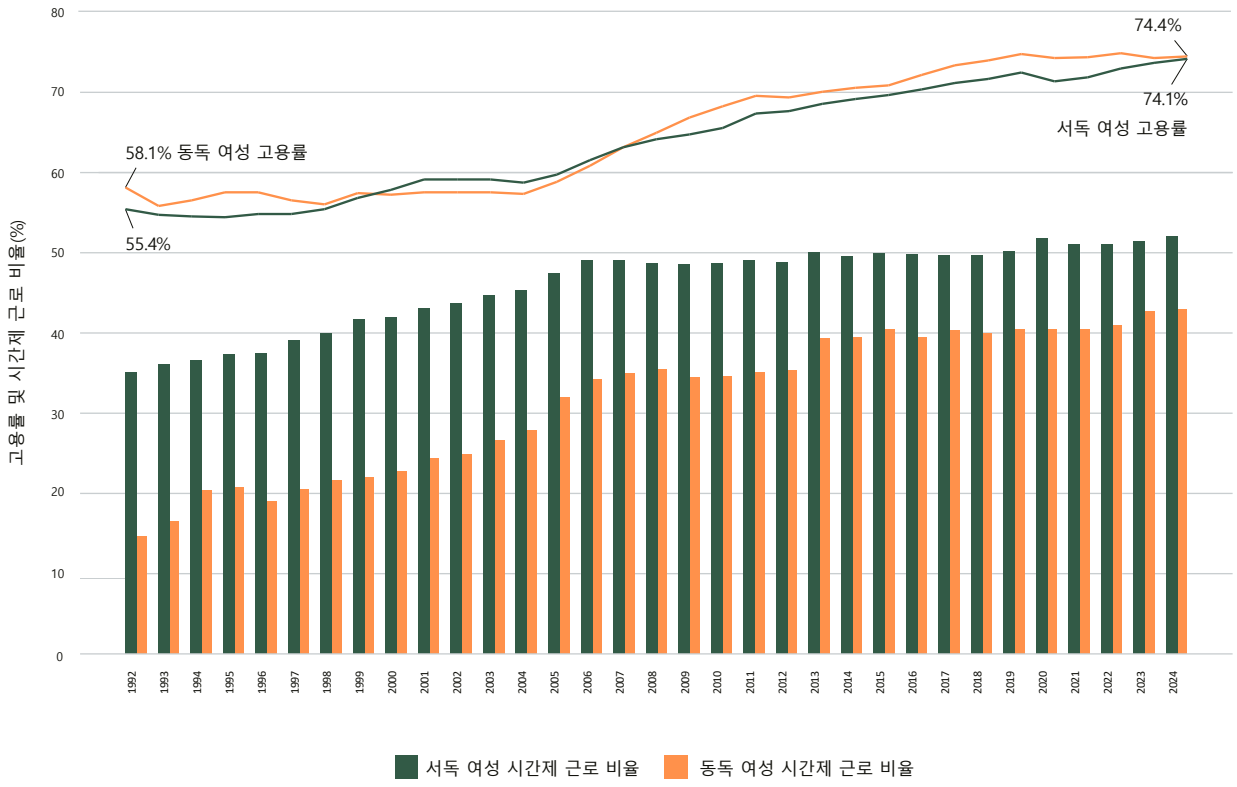
여성인력 활용은 독일 내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가장 큰 잠재력을 지니는 분야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 있어 동독 지역은 선도적 사례가 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동독 지역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서독 지역보다 항상 높은 수준을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근로시간을 배제하고 여성의 고용률만 살펴보면 두 가지 점이 드러난다. 첫째,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독일 전역에서 여성 취업률은 꾸준한 상승 곡선을 그려왔다. 둘째, 전통적으로 동독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서독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격차가 크게 좁혀져서 현재 동독 지역 여성의 취업률은 74.4%, 서독은 74.1%에 달한다(<그림 1>). 그러나 노동시장 참여 규모, 즉 근로시간을 고려하면 양상은 달라진다. 동독 여성의 시간제 근로 비율은 전 기간에 걸쳐 서독보다 현저히 낮았고, 이러한 경향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최근 동독 여성의 시간제 근로 비율은 42%로, 서독은 이보다 10%p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그림 1>).

[6] 출처: 독일 연방고용청 산하 노동시장 및 직업연구소 단기 보고서(IAB-Kurzbericht) 2025년 8월.

[7] 출처: Peters, J. C. (2024). Fachkräfteengpässe in ländlichen Räumen. Braunschweig: Thünen-Institut für Innovation und Wertschöpfung in ländlichen Räumen. *Zahlen & Fakten zur Wirtschaft in ländlichen Räumen 01/2024.* p. 2.

<그림 1> 1992년~2024년 동서독 여성 고용률[8] 및 시간제 근로 비율[9] 추이



출처: 독일 연방통계청, 연방노동사회부 자료

또한 여성 시간제 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동독 25.7시간, 서독은 21.1시간으로, 동독이 현저히 긴 것으로 나타났다.[10]

동서독 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양상이 이처럼 차이를 보이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회적 인식과 역할 기대가 동독 여성의 더 높은 고용률과 가계소득 기여도에 계속 영향을 미쳐왔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양 지역 모두에서 보육 인프라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과거 동독은 경제적으로 높은 여성 고용률에 의존했으며, 이에 따라 서독과 달리 전국적인 보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여성의 전일제 근로를 장려하는 정치적 분위기를 조성했다. 반면 서독은 주로 한 명의 생계부양자가 가계 소득을 책임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경로 의존성은 오늘날까지도 동서독 노동시장의 구조적 차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의 동서 격차는 상당 부분 줄어들었다. 그 배경에는 서독이 3~5세 아동 대상 보육시설을 확충하며 인프라 격차를 빠르게 따라잡은 것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현재 3~5세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률[11]은 동독 93.7%, 서독 91.2%이다.

[8] 고용률: 15세 이상 65세 미만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2024년 인구동태표본조사(Mikrozensus) 1차 결과
[9] 시간제 근로 비율: 근로계약을 기반으로 한 임금근로자 중 시간제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 2024년 인구동태표본조사 1차 결과
[10] 출처: 독일연방통계청(Destatis), 2024년 인구동태표본조사 1차 분석
[11] 본 통계의 인구 데이터는 1987년 및 1991년 인구조사를 바탕으로 한 연방통계청의 인구 추계치에 근거하며, 2014년 이후 수치는 2011년 인구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산출됨

반면, 3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보육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와 실제 이용률에서 여전히 동서 간 뚜렷한 차이가 존재한다. 이 연령대의 보육시설 이용률은 동독 55.2%, 서독 33.9%에 머무르고 있다(<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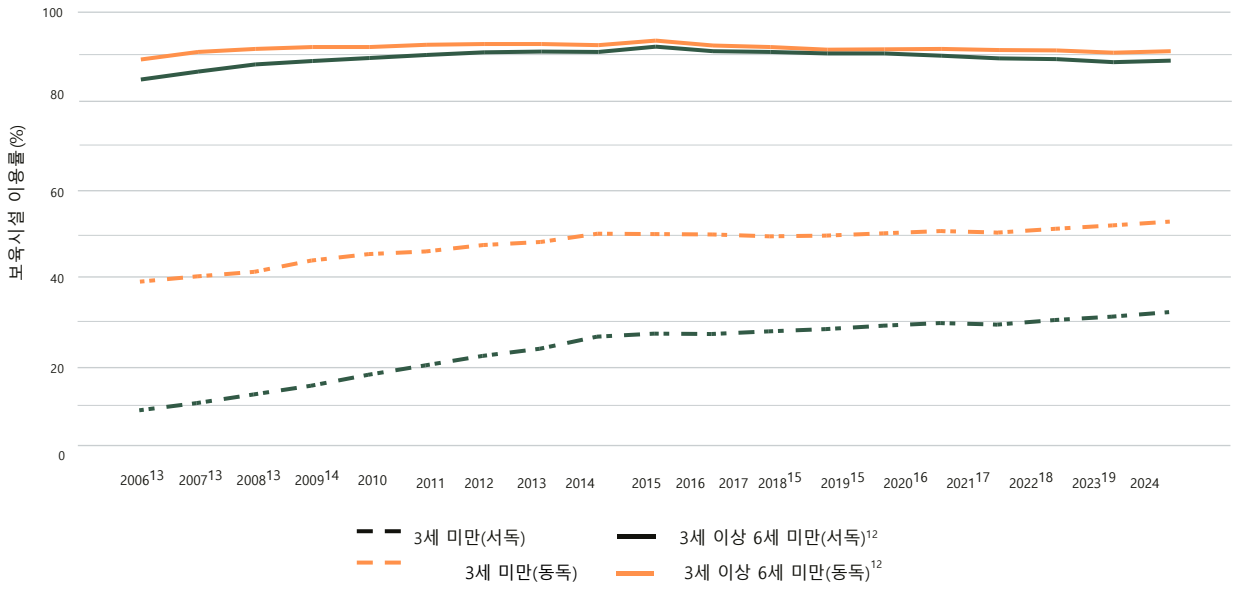
여성, 특히 어머니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독일 정부는 현 의회 임기 내에 다각적인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수요에 부응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여성인력이라는 추가 고용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이다.

그러나 현재, 특히 서독 지역과 인구 밀집도가 높은 대도시권에서는 여전히 보육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대응하여 연방정부는 '인프라 및 기후중립 특별 기금(Sondervermögen Infrastruktur und Klimaneutralität; SVIK)'을 재원으로 인프라 투자를 지원한다.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이 기금을 통해 보육 인프라 확충 목적으로 각 연방주(州)에 매년 9억 4천만 유로가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연방정부는 부가가치세 세수 배분 조정을 통해 보육기관 운영비 중 매년 8억 4,500만 유로를 추가로 부담하여, 주 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어줄 것이다.

<그림 2> 2006년~2024년 6세 미만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률(단위: %)[12]



출처: 독일 연방통계청 자료, 동독특임관실 실무팀 재구성

[12] 취학 전 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아동 포함
[13] 2006년~2008년 자료는 가정어린이집(Kindertagespflege)를 이용하는 취학아동을 집계에서 제외함
[14] 2009년 보고연도 함부르크주(州) 통계 보고에서 가정어린이집과 보육시설을 병행 이용하는 아동의 수가 과소 집계됨
[15] 2019년 수치는 브란덴부르크주(州) 초센 시의 데이터가 누락되어 소폭 과소 집계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16] 2020년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州)의 경우 약 50개 보육시설(약 2,000명의 보육 아동)이 과소 집계됨
[17] 2021년 헤센주(州) 및 라인란트-팔츠주(州)의 취학 전·후 교육기관 이용 아동 수가 과소 집계됨. 또한 코로나 팬데믹 기간 각 연방주(州)의 상이한 방역 조치가 보육 통계에 미친 영향은 정확히 정량화하기 어려움
[18] 2022년 수치는 튀링겐주(州) 키프호이저군 내 1개 보육시설 데이터가 누락되어 소폭의 과소 집계가 발생함
[19] 2023년 수치는 튀링겐주(州) 키프호이저군 전체와 예나의 1개 보육시설 데이터가 누락되어 소폭의 과소 집계가 발생함

이러한 재정 지원은 서독에서는 주로 보육시설 이용에 대한 법적 권리를 충족하고 부모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데 기여한다. 반면, 전통적으로 보육 인프라가 잘 구축된 동독 지역에서는 기존 시설의 개보수를 통해 정원을 유지하고,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데 주력한다.

아울러 연정협약에 따라 현행 '어린이집 환경법(Kita-Qualitätsgesetz)'은 향후 '환경개선법(Qualitätsentwicklungsgesetz)'으로 개편되어 전국적으로 통일된 표준을 수립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만 4세 아동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언어능력 및 발달 상태 평가 의무화 등의 조치가 포함된다. 또한 연정협약에 따라 '언어 중점 어린이집(Sprach-Kitas)'과 '출발기회 어린이집(Startchancen-Kitas)'에 대한 추가 지원도 계획되어 있다. 이는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연방정부 차원의 핵심적인 노력이다.

특히 한부모 가정 아동을 위한 전일제 보육 제공도 중요한 과제이다. 초등학교 연령 아동 대상 전일제 보육에 대한 법적 권리는 2026년부터 학년별로 순차 도입되어 2029년부터는 초등 1~4학년 전원에게 적용된다. 연방정부는 이를 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35억 유로를 지원한다. 또한 법적 권리 시행으로 인해 주 정부의 보육 운영비 부담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수직적 부가가치세 세수 배분 구조를 주 정부에 유리하도록 조정했다. 이에 따라 지원 규모는 2026년 1억 3,500만 유로에서 시작해 2030년부터는 연간 13억 유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연방정부는 초등학생 대상 전일제 돌봄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목표는 해당 법적 권리를 아동에 맞추어 질적으로 충실하게 실현함으로써 아동의 안녕을 보장하고 가정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있다.

무엇보다 아동보육 분야 자체가 하나의 핵심 노동시장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인력이 부족해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할 경우, 이는 다른 산업의 전문인력난을 심화시키고 나아가 국가 경제 전체의 역동성을 저해하게 된다. 따라서 연방정부와 주 정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 분야의 전문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자 다양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연방고용청 산하 해외·전문인력중개센터(Zentrale Auslands- und Fachvermittlung)는 '유치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Willkommen im Kindergarten)' 프로그램을 통해 스페인 출신 보육교사를 유치하고 있다. 또한, '미래를 설계하다(Shaping the Future)' 프로젝트를 통해 콜롬비아 출신 보육교사 채용을 시범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보육직업 나침반(Kompass Erziehungsberufe)'은 보육 분야에 관심 있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및 전일제 돌봄 시설에서 경력을 성공적으로 시작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연방정부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시간제 근로시간 확대 장려금(Teilzeitaufstockungsprämie)'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이 제도는 시간제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지속적으로 늘리도록 유도하는 효과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근로시간 확대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할 예정이다.

여성의 근로시간 확대는 동서독 지역 모두에서 전문인력난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연방정부가 계획한 조치들은 특히 여성 근로자를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다. 나아가 무급 돌봄 노동에서 나타나는 남녀 간 불평등 구조 역시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이 점에 있어서도 동독 지역은 서독에 비해 성별 돌봄격차(Gender Care Gap)가 현저히 낮게 나타나는 등 이미 보다 진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20]

[20] DIW Wochenbericht 9/2023, BMFSFJ (2020). Was der Gender Care Gap über Geld, Gerechtigkeit und die Gesellschaft aussagt. Einflussfaktoren auf den Gender Care Gap und Instrumente für seine Reduzierung.

‘구조적 취약 지역을 위한 범독일 지원 시스템’

경제력이 탄탄하고 삶의 질이 높으며 사회적 결속력이 강한 지역은 독일 전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안정적인 일자리, 풍요로운 삶, 견고한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중요한 토대이다. 2020년부터 도입된 ‘구조적 취약 지역을 위한 범독일 지원 시스템(Gesamtdeutsche Fördersystem für strukturschwache Regionen, 이하 GFS)’은 ‘동등한 삶의 질’ 제공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연방정부의 핵심적인 범부처 협력 구조이다. GFS는 연방 차원의 지역 진흥 사업뿐만 아니라 연방과 주 정부가 공동 추진하는 사업까지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구체적으로 GFS는 기업 지원, 인프라 및 공공 서비스, 디지털화, 연구·혁신, 전문인력 확보, 환경 및 기후 보호, 민주주의·참여·사회 결속 강화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분야의 프로그램을 아우른다. 각 프로그램은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만 집중 지원하거나, 타 지역 대비 더 유리한 지원 조건 및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역량 강화를 도모한다. 이러한 체계는 특히 동독 지역의 긍정적인 발전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제20대 의회 임기 동안 ‘범독일 지원 시스템’은 지원금의 지역별 배분 현황에 대한 정밀 분석과 프로그램 전반에 걸친 평가 등 부처 간 협력 과정을 통해 한층 발전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주요 결과는 2024년 연방정부의 「동등성 보고서(Gleichwertigkeitsbericht 2024)」에 담겨 있다. GFS 개편을 통해 개별 지원 프로그램은 동등한 삶의 질 조성과 경제구조 전환이라는 목표에 더욱 부합하도록 조정되었다. 또한 GFS의 정책적 운영 구조도 최적화되었다.

제21대 의회 임기에 관한 연정협약에서 연방정부는 GFS를 통해 동등한 삶의 질 조성에 기여하고, 이번 의회 임기에도 본 체계를 계속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하고 있다. GFS 내 재원 배분의 지역별 현황 분석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동등한 삶의 질 조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다른 연방 프로그램들까지 분석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GFS는 다시 한번 전 프로그램에 걸친 통합 평가를 거치게 되며, 운영 구조 역시 조정 및 확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GFS의 인지도를 제고함으로써,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들이 본 시스템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지역경제구조개선사업

독일 통일 이후 35년이 지난 지금, 주요 사회·경제 지표 전반에서 동서독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있다. 특히 경제 역동성과 노동시장 변화 측면에서도 양 지역 간의 격차는 크게 감소했다.

이러한 격차 해소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독일 지역정책의 핵심 선도 수단인 '지역경제구조개선을 위한 공동과업(Gemeinschaftsaufgabe „Verbesserung der regionalen Wirtschaftsstruktur, 이하 GRW)'이다.

본 사업을 통해 연방정부와 동독 지역 연방주(베를린 포함)는 지난 35년 간 10만 건 이상의 프로젝트에 총 644억 유로를 공동 투입했다. 이를 바탕으로 특히 산업 생태계 및 경제 관련 인프라 분야에 2,605억 유로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31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거나 안정적으로 확보되었다.

GRW는 이미 지난 의회 임기에 전면적인 개편을 거쳐 현재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고도화를 추진 중이다. 연방과 주 정부는 개편 작업을 2025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본 지원 사업의 매력도와 효율성을 더욱 높이고자 한다.

동독 지역의 대표적인 GRW 투자 사업 사례는 본 보고서 82~83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베를린주(州)

베를린-아들러스호프(Berlin-Adlershof)는 독일 최대 규모의 과학기술단지이자, 수도 베를린에서 가장 중요한 미디어 거점이다. 본 지구는 1990년대 중반부터 지역개발계획의 일환으로 공동과업 '지역경제구조개선사업(GRW)'의 자금을 지원받아 왔다. 4.6km²에 달하는 부지를 개발하기 위해 총 5억 유로 이상의 GRW 재원이 투입되었다. 수많은 다른 조치 외에 특히 태양광 및 재생에너지 센터(ZPV)를 비롯한 거의 모든 창업·기술 센터가 이 자금을 바탕으로 설립되었으며, 현재는 대체 에너지와 무공해 에너지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오늘날 이곳에는 약 1,350개의 기업과 18개의 연구기관이 입주해 있고, 직원은 총 29,100명에 달하며 이 외에도 약 6,300명의 대학생과 950명의 직업교육생이 함께 하고 있다.

브란덴부르크주

GRW 지원의 대표적인 성공 모델은 오라니엔부르크(Oranienburg)에 위치한 오라폴 유럽 유한책임회사(Orafol Europe GmbH) 투자 사례이다. 총 투자 규모 2억 2,700만 유로 가운데 약 3,600만 유로를 GRW 보조금으로 지원함으로써, 5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GRW 자금은 중소기업 지원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코트부스(Cottbus)에 위치한 식품 기업 쿠넬라 파인코스트 유한책임회사(Kunella Feinkost GmbH)에 약 120만 유로를 지원하여 37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경제 관련 인프라 분야에서는 슈프렘베르크(Spremberg)의 슈바르체 품페(Schwarze Pumpe) 산업단지 개발에 총 1억 2,720만 유로의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이 가운데 약 1억 유로가 GRW 재원으로 충당되었다. 체험형 온천 시설인 나투어테르메 템플린(NaturTherme Templin) 조성에도 총 5,660만 유로 중 4,010만 유로의 GRW 자금이 투입되었다.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

로스토크(Rostock)에 위치한 리프헤어-MCC텍 로스토크 유한책임회사(Liebherr-MCCtec Rostock GmbH)는 2억 6,760만 유로를 투입하여 새로운 사업장을 건설하고 여러 시설 확충을 단행했다. 이 중 3,060만 유로가 GRW 자금으로 지원되었으며, 이를 통해 해상 크레인 제조 및 화물 처리 시설, 전문 교육 센터를 갖춘 현대적인 부지가 완공되었다. 현재 이곳에는 1,000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또 다른 중요한 프로젝트는 뤼겐(Rügen) 섬의 쾨니히스슈툴 국립공원 센터(Nationalpark-Zentrum Königsstuhl) 재활성화 사업이다. 1,710만 유로의 투자와 약 1,590만 유로의 GRW 보조금을 통해 쾨니히스슈툴을 가로지르는 무장애(barrier-free) 접근로 등 여러 시설이 새롭게 마련되었다.

작센주

바우첸(Bautzen)군 슈바르체 품페(Schwarze Pumpe) 산업단지에 창업·비즈니스 센터 '독크3(Dock3)'가 설립되어 지역 기업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핵심 허브가 마련되었다. 약 630만 유로의 GRW 재원이 투입된 이 프로젝트는 시설 가동과 기업 입주가 빠르게 이어지면서 실질적인 경제적 성과를 조기에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독일에서 가장 긴 역사를 자랑하는 우편함 제조업체 막스 크노블로흐 유한책임회사(Max Knobloch Nachf. GmbH)는 생산 시설을 미텔작센(Mittelsachsen)군 되벨른(Döbeln)으로 이전했다. 총 1,600만 유로에 달하는 투자 중 490만 유로를 GRW 자금으로 승인받음으로써 대대적인 시설 확장을 시행하였다.

작센-안할트주

할버슈타트(Halberstadt)에 소재한 다임러 트럭 주식회사(Daimler Truck AG)는 전 세계 20개 지역 물류 센터에 부품을 공급하는 새로운 글로벌 부품 센터에 3억 5,420만 유로를 투자하였다. GRW 지원금은 830만 유로였으며, 이 센터를 통해 향후 최대 450개의 정규직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나움부르크 대성당(Naumburger Dom) 방문자 센터는 세계유산의 가치를 전달하고 잘레-운슈트루트-엘스터(Saale-Unstrut-Elster) 지역의 문화 경관을 소개하는 공간이다. 해당 센터 조성에 투입된 총 900만 유로 중 860만 유로가 GRW 재원으로 지원되었다.

튀링겐주

튀링겐주의 대표적인 GRW 지원 성공 사례로는 아른슈타트(Arnstadt)에 위치한 항공엔진 정비 전문기업인 N3 엔진 오버홀 서비스사(N3 Engine Overhaul Services GmbH & Co. KG)를 꼽을 수 있다. 총 1억 3,860만 유로가 투입된 이 사업에는 약 3,040만 유로의 GRW 보조금이 지원되었으며, 이는 65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졌다. 또한 같은 지역의 배터리 제조업체인 컨템포러리 암페렉스 테크놀로지 튀링겐 주식회사(Contemporary Amperex Technology Thuringia AG)의 투자 프로젝트에도 총 880만 유로의 GRW 지원금이 제공되어 150개의 일자리가 창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경제 관련 인프라 분야에서는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두드러진다. 에르푸르터 크로이츠(Erfurter Kreuz) 산업단지 개발에는 GRW 보조금 약 1억 유로를 포함해 총 1억 2,900만 유로가 투자되었으며, 게라(Gera)의 크레츠슈비츠(Cretzschwitz) 산업단지 개발에는 총 1,240만 유로의 투자액 중 1,080만 유로가 보조금으로 지원되었다.

또한, 2021년 연방정원박람회의 일환으로 에르푸르트에 세계 최초의 사막·원시림 복합 전시 온실인 다나킬(Danakil)이 조성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총 투자액 2,490만 유로 중 GRW 재원 2,070만 유로를 지원받았다.



사진: 리히터 무지코프스키 건축사무소

독일 통일과 유럽 전환을 위한 미래센터 건립 추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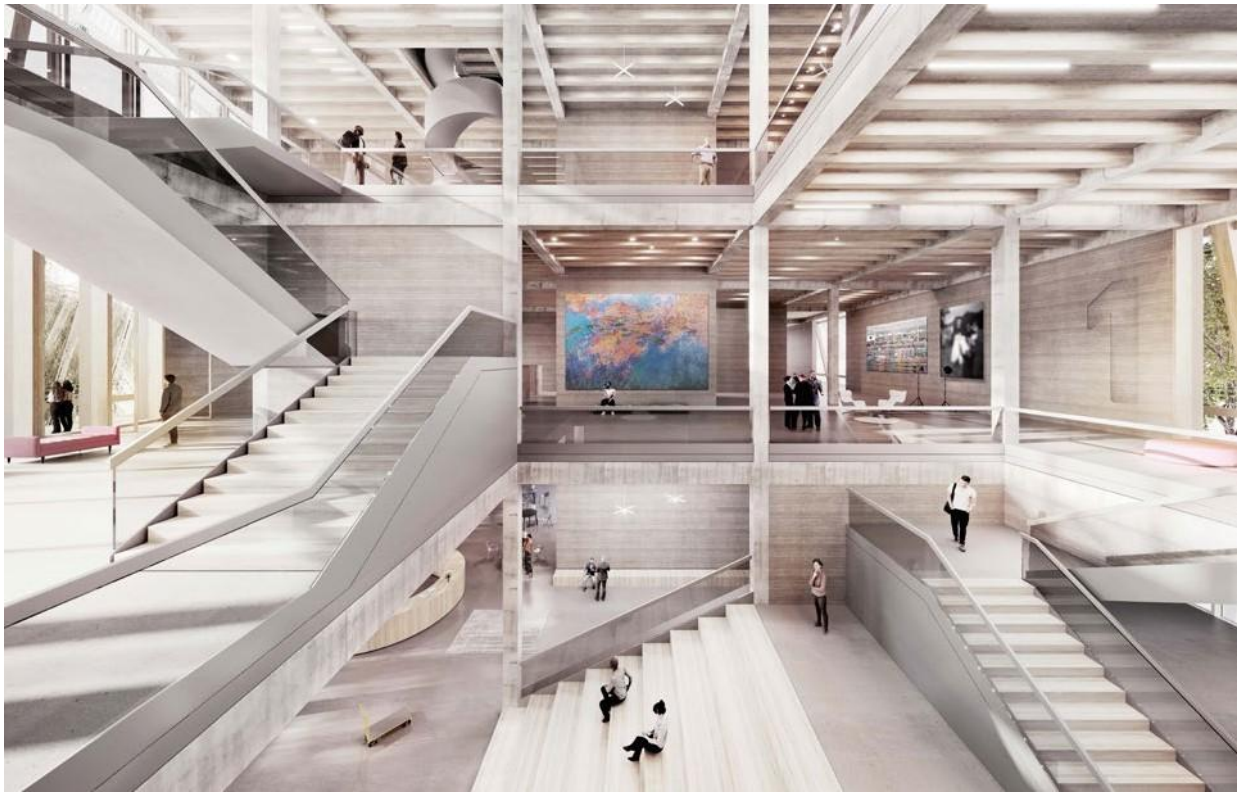
지난 2019년, 연방정부는 '평화혁명과 독일통일 30주년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회의 임무는 독일 현대사의 중대한 전환점이자 운명적인 시기를 기리는 기념 행사를 지원하는 한편, 독일 사회 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위원회의 권고안 중 하나가 바로 '독일 통일과 유럽 전환을 위한 미래센터(Zukunftszentrum für Deutsche Einheit und Europäische Transformation, 이하 미래센터)' 건립이었다.

이후 고위급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단이 지난 몇 년간 건립안을 구체화해 왔다. 미래센터는 만남과 교류의 장이 될 것이며, 이곳에서 여러 국가와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현재와 미래의 전환 과정에서 마주하는 과제들을 함께 고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의 토대는 1990년대 철의 장막 붕괴 이후 근본적인 체제 변혁을 경험한 중동부 유럽 국가들이 축적한 경험이다. 미래 센터는 당시의 격변이 지닌 의미를 되새기고, 그것이 오늘날과 미래에 주는 교훈을 논의하고 연구하며 그 결과를 공유해 나갈 예정이다.

본 사업은 이미 2022년 당시 연방정부와 연방의회 내에서 폭넓은 초당적 지지를 확보한 바 있다. 현재 기민당·기사당 연합과 사민당으로 구성된 연립정부 역시 연정협약에서 미래센터 설립에 합의함에 따라 연방정부 동독특임관은 미래센터의 건립 및 확장 과정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연방총리실 소속 동독특임관은 첫 단계로 2022년 7월 부지 선정 공모를 실시했으며, 2023년 2월 할레(잘레)(Halle (Saale)) 시가 동독 지역 6개 후보 도시와의 경합 끝에 최종 건립지로 확정되었다. 연방정부는 이곳에 미래센터 용도로 14,000m^2 규모의 신축 건물을 건설할 예정이며, 사업 시행은 연방주거도시개발건설부가 담당한다.

부지 선정과 병행하여 '독일 통일과 유럽 전환을 위한 미래센터 비영리 유한책임회사(Zukunftszentrum für Deutsche Einheit und Europäische Transformation gGmbH)'도 설립되었다. 본 회사는 신축 건물의 운영뿐만 아니라 미래센터가 담아낼 콘텐츠 기획을 담당한다. 이 과정에서 견지할 주요 원칙은 다음과 같다.



미래센터는 학술, 대화, 문화 영역의 긴밀한 연계와 상호 영감을 통해 사회적 전환과 적응 과정을 설계하는 문제에서 주요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1990년대의 전환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은 기후 보호, 에너지, 정의, 사회적 측면과 같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지식 저장소로 활용될 것이다.

본 센터는 모든 방문객에게 열려 있는 개방형 대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전 세대를 아우르는 프로젝트로 기획되었지만, 특히 젊은 세대를 핵심 타깃으로 설정한다.

미래 센터 비영리 유한회사는 2024년 9월 설립 이후 초반 몇 개월에 걸쳐 업무 수행 역량을 구축해 왔으며, 행정·경영 구조를 정비하고 핵심 인력을 충원했다. 향후 인적·물적 역량을 더욱 강화하여 신축 건물 완공 후 운영 및 기술 관리 전반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미래센터는 임무를 구체화할 예정으로 중장기 프로그램은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수립된다. 그러나 센터는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되고 신축 건물이 완공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콘텐츠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할레(잘레) 시에 마련된 자체 쇼룸에서는 전시, 토론회, 청소년 교류 활동이 진행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미래센터는 다양한 분야의 파트너 기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2024년 4월, 연방건설공간정비청은 미래 센터 신축을 위한 국제 공개 건축공모를 실시했다. 이번 공모에서는 연방정부의 건설사업 역사상 최초로 시민 참여가 이루어졌다. 요룬 라그나르스도티르(Jórunn Ragnarsdóttir) 심사위원장의 주재 아래, 심사위원회는 2025년 4월 베를린 소재의 리히터 무지코프스키 건축사무소와 ST 라움 아 조경건축기업(ST raum a. – Landschaftsarchitektur)의 설계안을 만장일치로 1등작에 선정했다. 이 설계안은 경쾌하면서도 강렬한 조형 언어를 통해 심사위원회를 매료시켰으며, 미래센터가 도시 공간에서 정체성을 형성하는 장소로 자리잡게 할 것이라는 점에서 심사위원회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할레(잘레) 시는 작센-안할트주의 지원을 받아 향후 몇 년간 리베크 광장을 전면 재정비하고 품격을 높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미래 센터와 주변 외부 공간은 도시 환경에 녹아드는 동시에 도심과 연결될 것이다.



사진: 리히터 무지코프스키 건축사무소

2025년 유럽 문화수도 켐니츠

독일에서 15년 만에 다시 한 도시가 '유럽 문화수도'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작센주의 전통적인 산업도시 켐니츠(Chemnitz)는 지난 2020년, 수년에 걸친 국가 차원의 선정 절차를 거쳐 최종 우승 도시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켐니츠는 쟁쟁한 후보 도시들을 제치고 강력한 참여형 접근 방식으로 유럽 전문가 심사위원단을 사로잡았다. 유럽 문화수도라는 타이틀은 켐니츠를 넘어 미텔작센(Mittelsachsen), 에르츠게비르게(Erzgebirge), 츠비카우 지역(Zwickauer Land)의 38개 파트너 지자체가 공유하며, 이는 독일과 유럽에서 새로운 문화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기회가 될 것이다. 연방문화미디어청은 초기 단계부터 문화수도 프로그램의 실현을 지원했으며, 총 1억 1,500만 유로의 예산 중 2,500만 유로를 분담했다. 켐니츠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라(C the Unseen)'라는 슬로건 아래, 공동의 문화와 산업유산을 공유하는 주변 지역과 함께 전 세계 방문객들을 유럽 한가운데 자리한 독일 동부 속 다채로운 탐험으로 초대하고 있다. 특히 문화수도 프로그램을 폭넓은 참여 형식으로 실현하겠다는 독특한 접근 방식은 성공적으로 이행되었다. 프로그램에 포함된 약 200개의 프로젝트는 켐니츠와 문화수도 지역 시민 약 900명이 유럽 및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함께 만들어가고 있으며, 개인과 협회, 시민단체 등이 제출한 120개의 프로젝트 아이디어 또한 프로그램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다.

가능한 한 많은 시민을 참여시켜 민주적 가치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도 달성되었다. 행사 연도의 상반기 동안 수천 명의 켐니츠 시민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자원봉사 프로그램에도 1,00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가 등록하는 등 뜨거운 참여 열기를 보였다.

유럽 문화수도로 지정된 지 반년이 지난 현재, 켐니츠와 주변 지역의 중간 평가는 긍정적이다. 문화수도 지역 전체가 지역 주민은 물론 작센주, 독일 전역, 나아가 유럽 및 전 세계 방문객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 6개월 동안 1,000건 이상의 행사가 개최되었으며, 문화에 관심 있는 외부 방문객 60만 명 이상이 이 지역을 방문했다.

동독 지역의 문화 진흥과 기억문화 지원

동독 지역의 문화 지원

데사우의 바우하우스(Bauhaus)와 아이제나흐의 바르트부르크 성(Wartburg)을 비롯한 수많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은 동독 지역의 문화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연방문화미디어청은 이러한 유산과 동독 지역의 많은 다양한 문화적 랜드마크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으로는 베를린-브란덴부르크 프로이센 궁전 및 정원 재단, 바이마르 고전주의 재단, 슈트랄준트 독일 해양 박물관 재단, 작센-안할트 루터 기념관 재단, 할레 프랑케 재단 등이 포함된다. 이 모든 기관은 지역의 경계를 넘어선 문화적·역사적 명소로서 기능할 뿐만 아니라 지역 내 고용을 창출하고 문화를 전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25년은 여러 중요한 기념일을 맞이하는 해이다. 바우하우스 데사우 재단은 2025년 9월 '바우하우스 데사우 100주년'을 기리는 기념행사를 시작한다. 1925년 당시 바우하우스 학교는 나치 정권에 의해 바이마르에서 쫓겨나 데사우로 이전하게 되었다. 이후 1년도 채 되지 않는 설계 및 건설 기간을 거쳐 1926년 발터 그로피우스가 설계한 전설적인 바우하우스 건물(현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문을 열었다. 바우하우스 데사우 재단은 이를 기념하고자 2025년부터 2026년까지 다채로운 전시와 행사를 개최하며, 바우하우스의 역사와 오늘날의 의미를 조명할 예정이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바우하우스는 사회적·국제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현대적이고 개방적이며 자유로운 사회를 상징한다.

2025년은 퓌르스트 퓌클러 공원과 무스카우 성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20주년을 맞이한 해이기도 하다. 이 공원은 고전적인 유럽 조경 예술의 정수로, 독일과 폴란드가 공동으로 등재한 양국 공동 세계문화유산으로서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하다. 이와 더불어 데사우-뵈를리츠 정원 지대 역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25주년을 맞았다. 이러한 정원 지대를 보존하기 위해 연방문화미디어청은 작센-안할트주와 협력하여 '건축·정원 유산 보존 마스터플랜'의 일환으로 1억 5천만 유로를 지원하고 있다. 이 재원은 문화재로 지정된 건물과 공원 시설의 손상을 복구하고, 문화적 활용을 위한 부지 개발에 투입되고 있다. 특히 이번 기념행사들은 동시에 기후 변화로 인한 가뭄, 폭우, 토양 침식 등 역사적 공원들이 직면한 심각한 도전 과제를 강조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퓌르스트-퓌클러 박물관 공원 및 브라니츠 성 재단이 주관하는 코트부스 인근의 '나무 대학(Baumuniversität)' 프로젝트에서 공동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독일 중부 궁전 및 문화 경관 강화 특별 프로그램(Sonderprogramm zur Stärkung der mitteldeutschen Schlösser- und Kulturlandschaft)'을 통해 연방문화미디어청은 작센-안할트주와 튀링겐주의 궁정과 정원을 보존·복원하기 위해 각각 1억 유로를 지원하며, 주정부 측에서도 동일한 규모의 자금을 조달한다. 2032년까지 이어지는 이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쾨텐 성과 루돌슈타트의 하이데크스부르크 성 등이 대대적인 보수 작업을 거쳐 독일 역사의 증거로서 후대에 전수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연방문화미디어청은 독일 중부 궁전 및 문화 경관의 문화·박물관 프로젝트에도 주별로 최대 7,500만 유로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튀링겐 보물관(Schatzkammer Thüringen)'과 같이 지역 고유의 궁정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 공간들이 조성될 전망이다. 특히 작센-안할트주에서는 2025년 6월, 해당 프로그램의 건축 프로젝트 중 하나로서 대규모 복원을 마친 알슈테트 성을 재개관했다. 이곳은 1525년 농민전쟁 500주년을 기념하는 작센-안할트주 지역 거점형 주립전시회 '정의 1525(Gerechtigkeyt 1525)'의 부분 전시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종교개혁과 더불어 독일 역사의 중대한 사건이었던 농민전쟁은 특히 독일 자유의 역사라는 측면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 지속적인 의미를 지닌다. 2025년 토마스 뮌처(Thomas Müntzer) 기념의 해와 농민전쟁 500주년을 맞아, 연방문화미디어청은 1,500만 유로의 의회 예산을 투입해 전국적으로 기념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해당 지원은 작센-안할트주와 튀링겐주를 넘어 바이에른주와 바덴-뷔르템베르크주까지 아우른다. 주요 프로그램에는 아이슬레벤과 만스펠트에서 열리는 참여형 전시, 루터 기념관 재단의 디지털 스토리텔링 프로젝트, 튀링겐주 뮐호이저 박물관의 종합 주립전시회 등이 포함된다.

동독 지역의 기념시설과 기억문화

연방정부는 나치 시대 주요 범죄 현장들의 지리적 위치를 고려하고, 동독 시절 옛 나치 강제수용소 부지에 조성된 추모기념시설을 관리하며, 사회주의통일당(이하 사통당) 독재 시절의 구금 및 범죄 현장에 설립된 기념관들의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현재 동독 지역의 여러 기념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1989년까지 동독 주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겪어야 했던 사통당 독재 정권의 불법행위와 억압을 규명하고 성찰하는 일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국가의 핵심적인 과업으로 남을 것이다.

기억·기념 시설은 역사적 장소일 뿐 아니라 지역 내 고용 기반을 마련하고 관광지이자 지역 정체성을 형성하는 미래지향적 공간으로 재정비되고 있으며, 이로써 해당 지역 내에서 중요성을 공고히 하며 그 너머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현재 연방문화미디어청에서 수립 중인 기념시설 구상 개정안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연방정부는 이미 1999년부터 이 구상안(2008년 개정)을 바탕으로 나치 테러 통치와 동독 독재 정권의 과오를 기억하기 위한 국가적 중요성을 지닌 프로젝트들을 지원해 왔다. 이는 독일의 추모·기억문화를 강화하는 핵심적인 토대이며, 연방정부는 그 연장선상에서 동독의 평화혁명을 기리는 라이프치히 자유통일 기념비 건립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나아가 나치 범죄와 사통당의 불법행위라는 두 가지 분야를 아우르는 연방문화미디어청의 '청년이 기억한다(Jugend erinnert)' 지원 프로그램 역시 주목할 만하다. 본 프로그램은 체계적인 개편을 거쳐 이미 두 번째 지원 단계에 진입했으며, 동독 지역의 기념시설과 기억문화 기관들이 청소년 대상의 학교 밖 역사·정치 교육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방행정기관 내 ‘동독 출신 관리직’ 확대 방안의 지속적 보완 및 이행

서문

2023년 1월 25일, 연방정부는 연방행정기관 내 동독 출신[21]의 관리직 비율을 높이기 위한 종합계획을 채택하였다. 이와 동시에 연구 프로젝트인 ‘엘리트 모니터(Elitenmonitor)’가 시작되었다. 이 연구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정치, 행정, 경제, 학술, 군(軍), 법조, 언론, 문화 등 총 12개 분야에서 동독 출신 인사들의 진출 현황을 분석한다. 또한 동독 출신의 관리직 비율이 여전히 낮은 원인을 파악하고, 이러한 과소대표 현상을 야기하는 구조적 장애 요인을 규명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민당·기사당·사민당 연립정부는 본 계획을 일관되게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동독 출신 인사들이 관리직급에서 적정한 대표성을 갖는 것은 공정성의 문제이며, 궁극적으로 독일 사회 전체의 이익에 직결되는 핵심 사안이기 때문이다.

I. 데이터 현행화 및 조사 현황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조사에도 최고 연방기관에 속하는 24개 기관이 참여하였다. 조사 대상에는 각 연방부처뿐만 아니라 연방대통령실, 연방하원, 연방상원, 연방헌법재판소 등 주요 헌법기관이 포함되었으며, 연방감사원과 연방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자유 특임관실[22]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올해는 정책담당관급(Referentinnen und Referenten)에 대해서도 최근 3개년 자료가 확보되었다.

또한, 83개 상급 연방기관과 5개 연방최고법원 역시 소속 공무원 및 법관 관련 데이터를 제출하였다.[23] 이로써 관리직 및 정책담당관급의 총 14,700여 명과 법관 341명의 출신 지역 자료가 집계되었다.

[21] ‘동독 출신’에 관한 구체적인 정의는 「연방행정기관 내 동독 출신 관리직 비율 제고를 위한 연방 방안(Bundeskonzept zur Steigerung des Anteils von Ostdeutschen in Führungspositionen der Bundesverwaltung)」 보고서 12쪽 이하 참조

[22] 신설된 연방디지털국가현대화부는 조사 기준일(2025년 6월 30일) 당시 조직 구축 단계에 있었으므로 이번 조사 대상에서는 제외함

[23] 5대 연방최고법원에는 연방일반법원(BGH), 연방행정법원(BVerwG), 연방재정법원(BFH), 연방사회법원(BSG), 연방노동법원(BAG)이 포함됨

<표 1> 최고 연방기관 관리직의 출신 지역: 2022년 및 2025년 비교

최고 연방기관	직원 수(타 기관 파견자, 출산·육아 휴직자, 고령자 단시간 근로제(ATZ)에 따른 부분적·전면적 근무 면제자 포함)					
	총계	구분: 출신 지역별(출생지 기준) 직원 비율				
	직급	합계	해외	서독 (베를린 제외)	동독 (베를린 포함)	동독 (베를린 제외)
2022	지도부	44	2.3	90.9	6.8	4.5
2025		54	1.9	94.4	3.7	1.9
2022	국장급	184	3.8	87.5	8.7	2.7
2025		205	3.4	87.8	8.8	5.4
2022	부국장급	375	0.8	89.6	9.6	5.6
2025		528	3.4	84.1	12.5	8.1
2022	과장급	2,391	2.8	82.1	15.1	8.2
2025		2,867	4.1	79.1	16.7	8.8
2022	관리직 합계	2,994	2.2	83.5	13.9	7.5
2025		3,654	3.9	80.6	15.5	8.4
2023	정책담당관급	8,827	6.2	70.2	23.6	12.0
2024		10,647	6.1	70.1	23.8	13.0
2025		11,092	5.9	69.3	24.8	13.3

출처: 연방정부 동독특임관실 실무팀(각 기관 제출 자료 기반)

2022년부터 2025년 사이 최고 연방기관 관리직 중 동독 출신(베를린 포함)의 비율은 소폭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5년 중반 기준, 베를린을 포함한 동독 출신 관리직 비율은 15.5%를 기록하여 2022년의 13.9% 대비 증가하였다. 다만, 베를린을 제외한 동독 5개 주 출신으로 한정할 경우 해당 비율은 8.4%로 나타났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지도부 수준에서 동독 출신 인사의 비율이 감소했다는 점이다. 베를린을 포함한 동독 출신 비율은 2022년 6.8%에서 2025년 3.7%로 하락했으며[24], 베를린을 제외할 경우 같은 기간 동안 4.5%에서 1.9%로 떨어졌다.

반면, 중간 관리직에서는 긍정적인 추세가 나타났다. 부국장급의 경우 베를린 포함 시 9.6%에서 12.5%로, 베를린 제외 시 5.6%에서 8.1%로 올랐다. 과장급에서도 상승세가 관찰되었는데, 베를린 포함 시 15.1%에서 16.7%로, 베를린 제외 시 8.2%에서 8.8%로 각각 증가했다. 실·국장급의 경우 베를린 포함 시 수치상 큰 변동이 없었으나(2022년 8.7%, 2025년 8.8%), 베를린을 제외한 비율은 2.7%에서 5.4%로 증가했다.

[24] 해당 직급의 모집단 자체가 매우 적으므로(2022년 3명, 2025년 2명), 수치 변화만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2023년부터 통계 분석에 포함된 정책담당관급의 경우, 2025년 기준 베를린 포함 동독 출신 비율은 24.8%를 기록하였다. 이는 차세대 실무진 직급에서 동독 출신 비율이 독일 전체 인구 중 동독 출신 비율을 상회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베를린을 제외한 동독 5개 주 출신으로 한정할 경우 그 비율은 13.3%로 집계되었다. 이는 관리직 비율보다는 높은 수치이나, 여전히 해당 지역의 인구 비중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다음 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상급 연방기관 내 관리직 구성의 변화 추이를 보여준다.

<표 2> 상급 연방기관 관리직의 출신 지역: 2022년 및 2025년 비교

상급 연방기관			출신 지역별(출생지 기준) 관리직 비율(%)			
	직급	관리직 전체(절대값)	해외	서독 (베를린 제외)	동독 (베를린 포함)	동독 (베를린 제외)
2022	기관장	74	2.7	93.2	4.1	2.7
2025		89	3.4	92.1	4.5	4.5
2022	부기관장	77	2.6	89.6	7.8	3.9
2025		86	2.3	88.4	8.1	5.8
2022	실·국장급	494	2.8	84.2	13.0	6.9
2025		537	3.9	81.0	14.7	10.2
2022	관리직 합계	645	2.8	85.9	11.3	6.0
2025		712	3.7	83.3	12.6	9.0

출처: 연방정부 동독특임관실 실무팀(각 기관 제출 자료 기반)

상급 연방기관 내 동독 출신 고위직 비율은 완만하지만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고위직 전체를 기준으로 할 때, 베를린을 제외한 동독 5개 주 출신 비율은 2022년 6.0%에서 2025년 9.0%로 상승하여 3년 사이 3%p 증가하였다. 베를린을 포함할 경우 2025년 기준 비율은 12.6%로 집계되었다.

기관장급은 여전히 서독 출신 인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동독 출신 비율은 2022년 2.7%에서 2025년 4.5%로 1.8%p 증가하였다.[25] 부기관장급 또한 2022년 3.9%에서 2025년 5.8%로 상승하였다. 실·국장급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관찰되어 동독 출신(베를린 제외) 비율이 2022년 6.9%에서 2025년 10.2%로 3.3%p 상승하였으며, 이로써 조사 시작 이래 확인된 긍정적인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5] 해당 직급의 모집단 자체가 매우 적으므로(2022년 3명, 2025년 2명), 수치 변화만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다음 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연방최고법원 법관들의 소속 연고지 및 출생지별 분포를 보여준다.

2022년과 마찬가지로 2025년 연방최고법원 법관단의 구성 현황은 '소속 연고지'와 '출생지' 중 어느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분석 결과, 소속 연고지를 기준으로 집계했을 때 동독 출신으로 분류되는 법관의 비율이 출생지 기준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표 3> 연방최고법원 법관의 소속 연고지 및 출생지: 2022년과 2025년 비교

연방최고법원 법관		소속 연고지별[26] 법관 비율(%)			출신 지역(출생지 기준)별 법관 비율(%)			
		서독 (베를린 제외)	동독 (베를린 포함)	동독 (베를린 제외)	해외	서독 (베를린 제외)	동독 (베를린 포함)	동독 (베를린 제외)
2022	재판장급	80.0	20.0	11.1	0.0	95.6	4.4	2.2
2025		76.5	23.5	11.8	2.0	96.1	2.0	2.0
2022	일반 법관	80.4	19.6	12.7	1.0	91.4	7.6	5.5
2025		82.1	17.9	10.0	0.7	89.3	10.0	8.3
2022	법관 전체	80.4	19.6	12.5	0.9	92.0	7.1	5.1
2025		81.2	18.8	10.3	0.9	90.3	8.8	7.3

출처: 연방정부 동독특임관실 실무팀(각 기관 제출 자료 기반)

조사 기간 중 각 기준에 따른 비율 변화는 다음과 같은 추이를 보인다.

재판장을 제외한 법관의 경우, 2022년 대비 2025년에는 소속 연고지 기준 동독 출신 비율은 소폭 감소한 반면, 출생지 기준으로는 동일 기간 비율이 다소 상승하는 상반된 흐름을 보였다.

재판장급 법관의 경우 이와 상반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출생지 기준 동독 출신 비중은 감소한 반면, 소속 연고지 기준 비중은 오히려 다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방헌법재판소에서도 유의미한 변화가 관찰된다. 현재 재임 중인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2명이 동독 출신이며, 이는 민주적 법치국가의 핵심 기관에서 동독 출신의 대표성이 보다 균형 있게 확보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26] 연방최고법원 법관의 경우 출생지뿐만 아니라 '소속 연고지'를 함께 고려한다. 이는 법관이 선출되기 전, 특정 연방주의 사법부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역량을 검증받고 해당 주의 추천을 받는 독일 법관 선출 시스템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이 지표는 해당 법관이 어느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했는지, 어느 연방주와 실질적인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이다.

요약

통일 35주년을 맞이한 현재까지도 최고 연방기관의 최상위 지도부 내 동독 출신의 과소대표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반면, 그 아래 단계인 고위 관리직급에서는 긍정적인 변화가 감지된다. 해당 직급에서 동독 출신 비율이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는 점은 관리직 진입을 위한 구조적 환경이 변화하기 시작했음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다.

상급 연방기관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확인된다. 최상위 직급에서는 아직 일관된 상승세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실무를 총괄하는 고위 관리직층에서는 동독 출신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연방행정기관 관리직으로의 진입 장벽이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조심스럽지만 긍정적인 신호로 풀이된다.

연방최고법원 법관단의 경우, 출생지와 소속 연고지라는 두 가지 기준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타나는 복합적인 구성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II. 동독 출신의 관리직 진출 확대를 위한 방안 이행 현황

A. 범정부적 차원의 종합 대책

동독 출신 관리직 진출 현황의 정기적 실태조사

연방정부는 2025년 6월 30일을 기준일로 '연방 종합계획'의 제3차 현행화 및 이행 과정에서 최신 데이터를 수집·발표하였다.[27] 차기 데이터 수집은 2026년 6월 30일을 기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연방정부의 통합적 다양성 전략

독일 사회는 점차 다원화되고 층위가 복잡해지고 있다. 따라서 공직 사회의 구성원과 관리자들이 이러한 다양성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기본법 제33조 제2항에 명시된 적성, 능력, 전문능력에 따른 능력중심 인재 선발 원칙을 준수하면서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28] 또한, 연방정부가 행정 조직 내 다양성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관리해 나갈 때, 국가는 사회적 모범으로서 부여된 책무를 다할 수 있게 된다.

2025년 1월 29일, 연방정부는 최초로 연방행정 전반을 아우르는 '다양성 전략'을 공식 채택하였다. 해당 전략은 공직 사회의 다양성 제고를 위한 정책 지향점을 설정하고, 각 부처가 실천해야 할 주요 실행 영역 및 세부 이행 과제들을 담고 있다. 특히 연방정부 관리직 내 동독 출신 인사의 과소대표 문제와 기본법 제36조에 명시된 연방공무원의 지역 간 균형 배치 원칙을 반영하여, 이번 전략에서는 독일 내 출신 지역을 다양성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명시하였다.

[27] 첫 조사는 2022년 9월 30일에 실시되었으며, 이후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정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28] 주: 공개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는 특정 직위(연방최고기관의 차관 및 실·국장급, 기타 기관의 기관장급 등)의 경우 임용상의 특수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직위는 일반적인 채용 절차보다 최고 연방기관 지도부의 강력한 실천 의지가 정책 이행의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동독 지역 내 신규 연방기관 및 연구기관 유치

연방정부는 최근 수년간 동독 지역에 신규 연방기관과 연구기관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왔다. 이는 2024년 6월 연방내각에서 채택된 '구조적 취약 지역 내 연방기관 및 비대학 연구기관 유치 계획'에도 명문화되어 있다. 해당 계획은 지역 일자리 창출, 현지 주민들의 경력 개발 기회 확대를 목표로 함으로써, 구조적 취약 지역을 장기적으로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24년 다양성 및 기회균등 조사

2019년, 연방행정기관 내 문화적 다양성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최초의 대규모 직원 조사인 '다양성 및 기회균등 조사(Diversität und Chancengleichheit Survey: DuCS)'가 실시되었다. 이어 2024년 시행된 2차 조사에서는 최초로 동독 출신의 대표성과 관련하여 연령대, 직급, 고용 형태, 기관 소재지 등 다양한 기준에 따른 세분화된 데이터가 수집되었다. 해당 데이터는 연방 공공부문 내 동독 출신 인력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승진 및 참여 기회를 보장받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핵심적인 실증적 근거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연방정부 통합 채용 브랜드 구축

연방정부는 유능한 인재를 연방행정기관으로 영입하기 위해, '독일, 당신이 있어야 움직입니다(Deutschland. Läuft nur mit dir.)'라는 슬로건 아래 통합 채용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이 브랜드는 전용 채용 포털 사이트(https://karriere.bund.de/)와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정기적인 전국 단위 디지털 홍보 캠페인을 통해 동서독 전역의 사회 초년생과 전문 인력 모두에게 다가가고 있다.

동독 지역 연방주와의 협력

2025년 4월 23일 개최된 동독 지역 주총리 회의에서 '공정한 대표성'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다. 동독 5개 연방주 주총리들은 경제 및 연구 분야의 정책 수립 시 동독 지역이 보유한 잠재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하며, 기존의 구조적 불이익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연방기관, 유럽연합(EU) 산하 기구, 주요 연구기관 등을 동독 지역에 집중적으로 유치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기 결정된 기관 이전 계획의 신속한 이행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결론적으로, 연방정부 내 동독 출신 관리직 비율 제고를 위한 계획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은 연방과 주 정부 모두가 견지하는 공동 우선 과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B. 주요 조치 및 모범 사례

연방정부는 연방행정기관 내 관리직의 동독 출신 비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활동을 대대적으로 확충해 왔다. 구체적인 이행은 각 부처가 담당하며, 그 범위는 맞춤형 인재 확보 프로그램부터 멘토링 및 직무 역량 강화 교육, 구속력 있는 다양성 전략 수립, 신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전개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이를 주요 분야별로 정리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도출된 대표적인 모범 사례들을 소개한다.

인재 확보 및 채용 마케팅

다수의 연방부처는 동독 출신 지원자를 유치하기 위해 차별화된 맞춤형 전략을 펼치고 있다. 주요 사례로는 동독 지역 내 채용 박람회 직접 참가, 지역 학교 및 대학을 대상으로 한 전략적 아웃리치 프로그램 운영 등이 있다. 특히, 다양한 지역적 배경을 가진 지원자를 포용할 수 있도록 채용 공고문을 세밀하게 조정하는 방식을 도입하였다. 이미 상당수의 부처가 지원 과정에서 지원자의 출신 배경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채용 규정 내 다양성 관련 조항을 보완하고 있다. 아울러 정보 제공 캠페인과 동독 지역 대학과의 협력 프로그램 등을 통해 우수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연결하고 있다.

인식 제고 및 교육

대다수 연방부처는 무의식적 편향, 일반평등대우법(AGG), 출신 지역에 따른 차별 금지를 주제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일부 부처에서는 지역적 다양성을 주제로 하거나, 채용 면접관 및 평가 위원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이러한 인식 제고 교육을 선발 절차의 필수 이수 과정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이러한 조치의 본질적인 목적은 특정 집단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와 업무 관행, 그간 관성적으로 답습해 온 조직 내 루틴을 비판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데 있다.

네트워크 및 교류 채널

여러 연방부처는 동독 출신 종사자들이 주도하는 활동과 사내 커뮤니티를 신설하거나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직원 간의 경험 공유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조직 내에서 동독 출신의 관점이 가시화되도록 돕고 구성원의 자기효능감을 고취하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동독 출신 차세대 리더를 대상으로 한 특화된 네트워킹 행사를 개최하여 노하우를 전수하고 인적 유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데이터 수집 및 모니터링, 투명성 확보

여러 연방부처에서 동독 출신 종사자들의 대표성을 파악하기 위해 내부 지표를 마련하고, 이를 인사 모니터링 과정에 포함시켰다. 단순히 출생지 정보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 과정이나 성장 배경 등 다각적인 요소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고위직 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들을 명확히 짚어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

경력 지원 및 인적 자원 개발

동독 출신 종사자들의 경력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멘토링과 코칭 프로그램, 고위직 대상 신진 인재 양성 프로그램, 고위직 선발 및 임용 시 적극적인 스카우트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고위 공무원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돕기 위해 역량 강화 교육과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심층 연구 및 원인 분석

한 연방부처는 동독 출신의 관리직 진출이 저조한 원인을 밝혀내고, 실질적인 권고안을 마련하기 위해 별도의 연구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다른 부처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정책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수정하거나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는 채용 및 평가 방식의 개선, 교육 프로그램의 확충, 이미 운영 중인 사내 네트워크와 멘토링 체계를 한층 더 내실 있게 강화하는 활동 등이 포함된다.

하급 기관에서의 조치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하급 기관들도 최근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무의식적 편향 및 차별 방지 교육, 전문 멘토링과 코칭 프로그램, 직원 간 네트워크 신설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혁신적인 시도들도 눈에 띈다. 지역 다양성을 주제로 한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이나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과 연계한 워크숍 시리즈 기획 등이 그 대표적인 예다.

향후 전망

연방정부 관리직 내 동독 출신의 균형 있는 대표성 확보라는 목표는 아직 완전히 달성되지 않았다. 최신 '엘리트 모니터(Elitenmonitor)'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동독 출신 인사의 관리직 진입 속도는 여전히 지체되고 있으며, 일부 분야에서는 그 비중이 소폭 감소하거나 정체되는 양상도 확인된다. 사회 전반의 12개 핵심 분야를 종합해 볼 때, 동독 출신 비율은 2018년 10.9%에서 2024년 12.1%로 상승했으나, 이는 독일 전체 인구 중 동독 지역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약 20%)에는 아직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연방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제21대 의회 임기에도 기 수립된 연방 차원의 종합계획을 토대로 구조적 장벽을 해소하고, 동독 출신의 리더급 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 및 배출하기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제3장

연구 및
자료 조사

엘리트 모니터 최신 결과

알렉산더 헨첼, 유스투스 융커만, 라이 콜모르겐, 아스트리드 로렌츠, 리누스 파에트,
마리온 라이저, 얀 샬러, 라르스 포겔

2018~2024년 동독 출신 엘리트 직위 현황: 변화 추이, 장애 요인 및 대응 방안

통일 이후 35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주요 엘리트 직위 내 동독 출신의 비율은 전체 인구 대비 비중에 비추어 볼 때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1] 본 절에서는 먼저 2018년 이후 동독 출신의 과소대표 현황과 그 변화 추이를 살펴본다. 아울러 이러한 불균형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는 성격의 문제인지에 검토하고자 한다. 이어서 동독 출신 인사가 엘리트 계층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장애 요인과 병목 구간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지원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본 절에서 제시하는 모든 결과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연방정부 동독특임관실의 지원으로 수행된 '엘리트 모니터(Elitenmonitor)' 연구 프로젝트의 데이터와 분석 결과에 기반한다. 해당 프로젝트는 그간 동독 출신의 과소대표 문제를 둘러싼 그간의 논쟁을 학술적으로 검증된 데이터와 분류에 기반하여 사실 중심의 논의로 전환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2]

단순한 시간 문제인가? 동독 출신 과소대표 현황 및 추이

'엘리트 모니터'는 2018년부터 독일의 엘리트 직위 인사들의 생애 경로와 배경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해 왔다.[3] 2024년 말 기준, 전체 조사 기간을 통틀어 약 3,000개의 직위에서 4,100명 이상의 인적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변화 추이는 다음과 같다.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전체 엘리트 직위 중 동독 출신의 비율은 10.9%에서 12.1%로 소폭 상승하였다(<표 4> 참조).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공행정과 학계에서의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반면 경제, 문화, 안보, 시민사회 분야에서는 오히려 소폭 감소하였으며, 그 외 분야는 미미한 상승을 보이거나 기존 수준을 유지하는 데 그쳤다.

이러한 변화 추이는 과소대표 문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임을 시사하는가? 우선 긍정적인 신호를 확인할 수 있다. 전체적인 상승 폭이 비록 크지는 않으나, 수치상 꾸준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젊은 세대의 경우 동독 출신 엘리트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2018년 이후 신규 임용된 엘리트 직위 중 동독 출신의 비중은 14.7%에 달해 전체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표 4> 독일 엘리트 직위 내 동독 출신 비율

분야	2018		2022		2024	
	명	%	명	%	명	%
정치	609	19.9	598	20.8	585	21.4
경제/협회	424	5.1	392	5.0	426	4.0
세부: 기업	206	2.9	168	0.0	191	0.0
세부: 협회	218	7.8	224	9.2	235	7.6
행정	533	9.8	576	14.0	579	12.7
학계	162	1.6	163	8.2	165	8.9
노동조합/근로자 단체	44	14.3	45	13.2	43	14.7
사법부	187	1.4	175	1.4	183	14.7
군사	78	0.0	70	0.0	68	0.0
안보	101	14.9	96	11.1	100	11.1
미디어	305	8.4	325	7.9	324	10.3
문화	90	9.3	105	7.4	122	6.8
시민사회	166	14.8	179	12.9	182	11.1
종교	64	5.5	64	7.3	66	7.1
합계	2,763	10.9	27.88	12.0	2,843	12.1

[1] 본 연구에서 '엘리트 직위(Positions-Eliten)'는 가치 판단을 배제한 개념으로 사용된다. 이는 독일의 주요 기관 및 조직에서 최상위 의사결정 직위를 맡아 사회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거나 이에 관여하는 인사를 의미한다. '동독 출신(Ostdeutsche)'은 구동독 지역 또는 통일 이후 동독 연방주에서 태어나 14세까지 해당 지역에서 주로 거주한 사람을 지칭한다. 현재 독일 전체 인구 중 동독 출신의 비중은 약 19%로 추산된다. 참조: Vogel, L. (2024). Ausmaß und Persistenz personeller Unterrepräsentation in den Eliten Deutschlands. pp. 107–148, Kollmorgen, R., Vogel, L. & Zajak, S. (편저): *Ferne Eliten: Die Unterrepräsentation von Ostdeutschen und Menschen mit Migrationshintergrund.* Wiesbaden: Springer Fachmedien.

[2] https://research.uni-leipzig.de/elitenmonitor/

[3] 본 조사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12개 분야의 주요 조직 및 기관을 선정하고, 해당 기관의 최상위 직위에 있는 인사들을 파악한 후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생애 경로 및 배경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이러한 지표들이 과소대표 문제의 자연스러운 해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분야별로 변화의 양상이 상이하며, 일부 분야에서는 오히려 동독 출신 비율이 감소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2018년부터 2024년 사이 기존 엘리트 직위의 약 3분의 2가 교체되는 대규모 인력 변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독 출신 비율의 상승폭은 매우 미미했다. 이는 "1990년대 동독 지역의 요직을 차지했던 서독 출신들이 은퇴하면 그 자리를 자연스럽게 동독 출신들이 채울 것"이라던 사회적 통념이 사실과 다름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실은 엘리트 진입 평균 연령이 약 49세라는 데이터에서도 명확히 뒷받침된다. 즉, 현재 새롭게 엘리트 직위에 오르는 이들은 1990년 통일 당시 평균 14세였던 세대다. 1990년대에 자리 잡았던 서독 출신 엘리트층의 퇴진과 세대교체는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독 출신의 과소대표 현상은 지난 몇 년간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동독 출신의 과소대표 현상이 장기화되는 원인과 그 메커니즘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동독 출신 인재가 엘리트 직위로 성장해 나가는 경력 단계에서 직면하게 되는 장애 요인과 이른바 '병목 구간'에 주목해야 한다.

엘리트 직위 진입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과 병목 구간

기본적으로 동독 출신이 엘리트 직위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서독 출신에 비해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사회지리적 요인 및 경제·사회 구조적 불리함이다. 동독 출신은 서독 출신과 비교했을 때 지방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다. 이러한 지역은 이른바 '엘리트 커리어'를 형성하는 데 유리한 명문 대학, 대기업 본사, 연방 주요 기관 혹은 직위 등의 기반 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또한, 동독 출신은 전통적으로 엘리트층을 다수 배출해 온 사회 계층 및 환경(예: 고학력 상위 중산층 및 상류층)에 속하는 비율도 현저히 낮다. 정의에 따른 편차는 있으나, 동독 출신이 상위 중산층 및 상류층에 속하는 비율은 10~15% 수준인 반면, 서독 출신은 25~30%에 달한다.[4]

둘째, 주관적 요인과 결부된 불리함이다. 동독 지역 대다수가 지리적 주변부에 위치함에 따라, 능력과 자질, 인성 면에서 엘리트 직위로 오르기 충분한 역량을 갖춘 동독 청년들조차 상대적으로 사회적 자본이 부족한 실정이다. 여기서 사회적 자본이란 영향력 있는 인물들과의 상호 관계 형성, 신뢰 구축, 네트워크 연결 등을 통해 축적되는 자원을 의미한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엘리트 집단에 진입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이후 조직 내에서 최고위직으로 승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문화적 장벽 또한 견고하다. 전통적인 엘리트 집단이 동독 출신 지원자에 대해 문화적 이질감이나 생소함을 느끼는 사례가 여전히 존재한다. 이는 동독 지원자들이 서독 출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리적 주변부나 사회적 취약 계층 배경을 가진 비율이 높다는 점에 기인한다. 동시에 동독 지역에서는 중산층이라 할지라도 도전과 모험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안정에 중점을 둔 교육 및 진로 전략을 선택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또한, 서독에 비해 핵심 엘리트직의 역할이나 그들의 전형적인 행동 양식에 대해 심리적 불신과 거리감이 여전히 강하게 잔존하고 있다는 점도 진입을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한다.

[4] 참조: Groh-Samberg, O., Büchler, T. &; Gerlit, J.-Y. (2020). Soziale Lagen in multidimensionaler Längsschnittbetrachtung (Lebenslagen in Deutschland, Armuts- und Reichtumsberichterstattung der Bundesregierung, Begleitforschung zum Sechsten Armuts- und Reichtumsbericht der Bundesregierung). Berlin: BMAS, 95쪽 이하. Spannnagel, D. (2024). WSI Verteilungsmonitor: Reichtumsquoten in Ost- und Westdeutschland. Düsseldorf: HBS (https://www.wsi.de/de/reichtum-15099-reichtumsquoten-15187.htm).

결론적으로 동독 지역은 현재까지도 엘리트 커리어를 가능하게 하거나 촉진하는 경제·문화·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데 있어 구조적·문화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적극적인 지원책과 활성화 정책을 통한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지원 및 활성화 조치

동독 출신의 엘리트 직위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반 여건은 분야, 연령대, 경력 단계에 따라 상이하다. 예컨대, 이미 연방 행정기관 내 중간 관리직으로 재직 중인 50대 동독 남성이 겪는 어려움과 이제 막 경제계에서 경력을 시작하는 30대 동독 출신 여성이 직면하는 장벽은 동일할 수 없다. 따라서 지원 조치는 이러한 개별적 차이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용 기관과 정책 당국이 참고할 수 있는 보편적인 대응 방안을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채용 주체는 최고위직 및 그 예비 단계인 관리직 인사를 발굴하고 선발하는 현행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 특히 경제계와 행정 분야의 인사 담당자들은 개인적 인맥이나 헤드헌터를 통한 비공식적 인재 영입 관행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일부 분야에서는 공개 채용 공고를 내지 않기도 한다. 이러한 방식이 기존의 동질적인 인맥 바깥에 존재하는 유능한 인재들까지 충분히 포괄하는지 비판적으로 성찰해야 한다. 조직 내부 인사는 물론, 채용 과정에 관여하는 외부 컨설팅 업체들에도 제한된 채용 경로가 결과의 편향성을 초래할 수 있음을 명확히 주지시켜야 한다. 무엇보다 지원자의 출신 배경을 고려한 성과 평가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이는 동독 출신 가정의 평균적인 교육 및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여 해외 경험이나 학력 이력 등을 적절히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현재의 직위와 책임 범위를 넘어 지원자의 장기적인 역량과 잠재력, 조직에 기여할 수 있는 발전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정책적 차원에서는 연방정부와 주 정부가 긴밀히 협력하여 동독 출신 인재의 공정한 대표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우수한 동독 인재들이 영재지원재단(Begabtenförderungswerke)의 장학금을 보다 원활하게 수혜할 수 있도록 학교와 대학의 추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연방정부는 재정지원기관으로서 각 재단이 장학 프로그램을 더욱 널리 홍보하고 추천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동독 연방주 차원에서는 교사들이 학생을 더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추천 업무를 수행한 교사에게 수당을 지급하거나 업무 부담을 경감해 주는 방식, 또는 일정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이 자동으로 추천 후보에 오르도록 하는 시스템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실제로 2023년 엘리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엘리트 직위 인사의 21.7%가 학생 시절 장학금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 인구 대비 현저히 높은 비율이다.

장학금은 초기 경력 단계에서 멘토링, 인적 네트워크 형성, 경제적 지원 등을 제공하기 때문에 엘리트 네트워크에 진입하는 핵심적인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동독 지역 학생들의 장학금 수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된 원인은 동독 내 학교들이 학생 추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학재단 역시 선발 평가 체계 내에서 개인의 출신 배경을 충분히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5]

동독 출신 비율이 현저히 낮은 사법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앞당기기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동독의 각 연방주는 판사와 검사를 연방검찰청의 보직에 추천함으로써 이들의 승진을 지원하고, 경력 관리에 필요한 네트워크 형성 및 주요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통찰력을 얻도록 도울 수 있다. 현재 연방대법원에 파견된 연구관 중 동독 출신은 단 4%에 불과한데, 이는 이러한 기회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제한적임을 보여준다. 또한, 각 정당의 주당부 역시 잠재력 있는 동독 출신 인재를 연방 차원의 보직에 더 많이 진출시킴으로써, 향후 연방 단위의 최고위직을 수행할 수 있는 실무 경험을 갖춘 인재 풀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5] 예를 들어, 인구 밀도가 낮은 동독 지역은 장학금 수여 시 주요 평가 기준으로 간주되는 '공식적인 시민사회 참여'를 뒷받침할 지역단체 구조가 서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2024년 다양성 및 기회균등 실태조사

독일 연방행정기관 내 동독 출신의 경력 기회

안드레아스 에테, 조피 슈트라우프, 마르틴 바인만

동독 출신은 연방행정기관 전체 종사자의 23.9%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직 진출에 있어 전반적으로 양호한 기회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독일 연방인구연구소가 시행한 '2024년 다양성 및 기회균등 실태조사(Diversität und Chancengleichheit Survey 2024, 이하 DuCS 2024)'를 바탕으로 분석한 최신 결과이다.

본 조사는 73개 연방행정기관에 소속된 5만 명 이상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대표성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상 최초로 연방행정 내 동독 출신의 공직 진입 및 경력 개발 기회에 대한 차별화된 분석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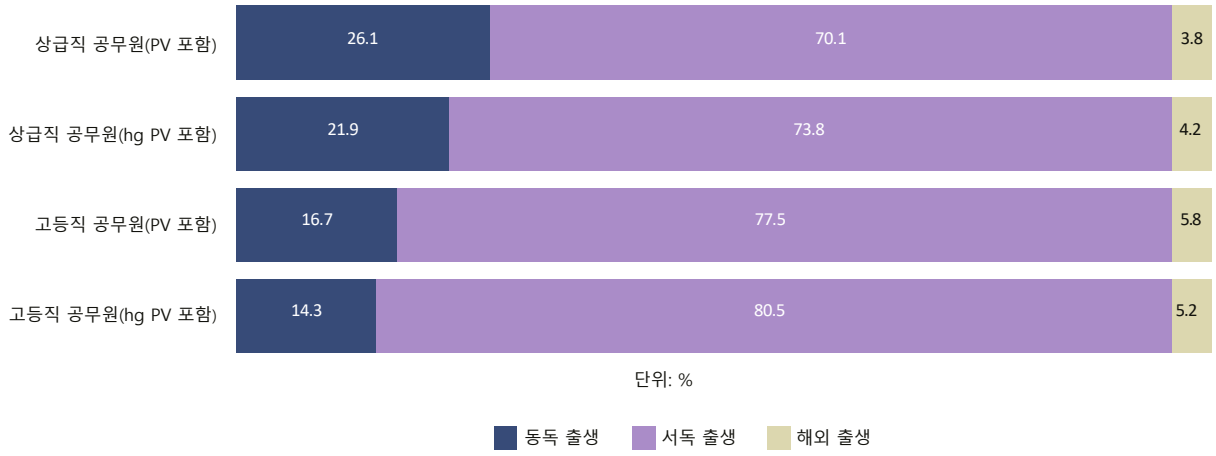
2024년 다양성 및 기회균등 실태조사(Diversität und Chancengleichheit Survey 2024)

- 독일 연방행정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중앙에서 통합 실시한 설문조사
- 전체 104개 기관 중 73개 기관 참여, 직접적 연방행정기관 전체 종사자의 65.3%를 포괄
- 2024년 5월~6월 중 온라인 조사 실시
- 5만 건 이상의 유효 인터뷰 완료(응답률 34.7%)
- 직접적 연방행정기관 종사자의 근무 여건 및 인력 구성의 다양성에 관한 대표성 있는 데이터 확보
- 연방행정기관 내 동독 출신 인사의 대표성을 연령대, 직급, 고용 형태, 기관 소재지별로 분석한 최초의 데이터 제공

그러나 연방행정 내 직급이 높아질수록 인사·조직 관리 책임을 맡은 동독 출신 종사자의 비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그림 1> 참조). 상급직(gehobener Dienst)의 경우 동독 출신 비율이 최소 22%를 기록하며 인구 비례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고등직(höherer Dienst)에서는 비율이 17% 미만에 그쳤다. 또한 동독 출신은 두 직군 모두에서 핵심적인 인사 책임을 수행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독 출신 종사자들은 다른 상급 관리자의 지휘를 받는 직위에 종사하는 경우가 더 많은 반면, 서독 출신 동료들은 조직 내 핵심적인 인사결정 권한을 수반하는 직위를 더 많이 맡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하에서는 고등직 가운데 인사 책임을 수반하는 보직을 '관리직'으로 정의한다. 관리직은 통상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직무 경력을 전제로 하므로, 이에 대한 접근성을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다. 6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서독 출신 종사자의 12.9%가 관리직에 종사하고 있는 반면, 동독 출신은 6.0%에 불과하다. 이러한 관리직 진출의 격차는 젊은 연령층에서도 관찰되며, 비록 그 정도는 다소 낮지만 여전히 존재한다. 예컨대 30~39세의 연령대의 경우 서독 출신 종사자의 5.0%가 관리직인 반면, 동독 출신은 3.6%에 머물렀다.

<그림 1> 연방행정기관 내 관리직의 출생지별 비율(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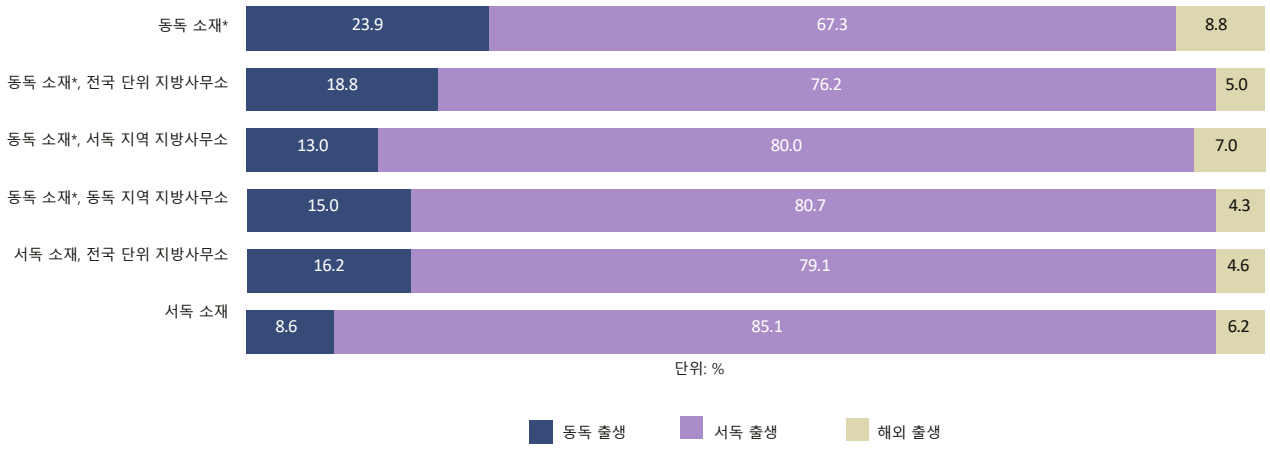


주: PV는 인사 책임을, hg PV는 핵심적인 인사 책임을 의미함
출처: DuCS 2024, 가중치 적용 데이터, 독일 연방인구연구소 분석(신뢰도 α=0.69)

추가 분석 결과, 이러한 차이는 성별이나 직무 자격요건 등 변수를 통제하더라도 모든 연령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는 독일 통일 이후 진행된 엘리트 인력 이동 과정에서 발생한 구조적 소외 현상이 오늘날까지도 동독 출신의 직업적 기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결과적으로 비교적 젊은 세대의 동독 출신 종사자들조차 관리직 진출에 있어 서독 출신 동료들에 비해 여전히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다.

<그림 2> 연방행정기관 내 관리직의 출생지 및 기관 소재지별 비율(단위: %)



주: *베를린 포함
출처: DuCS 2024, 가중치 적용 데이터, 독일 연방인구연구소 분석

연방행정기관 내 동독 출신 인사의 관리직 대표성은 기관의 소재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그림 2>). 1990년대 초부터 행정 구조를 재편하고 동독 지역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조치가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2024년 다양성 및 기회균등 실태조사(DuCS 2024)' 결과에 따르면, 베를린을 포함한 동독 지역 소재 기관에서조차 관리직의 67.3%가 서독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관 관리직 중 동독 출신은 고작 23.9%에 불과하다. 기관의 서독 지역 편중도가 높을수록 동독 출신 관리직 비율은 예상대로 더욱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DuCS 2024'의 분석 결과는 연방행정기관 내 관리직 진입에 있어 동서독 출신 간 불평등이 여전히 존재함을 재확인해 준다. 특히 직급이 높아질수록 인사 책임을 수반하는 보직 내 동독 출신의 비율은 현저히 감소한다.

젊은 세대 동독 출신 공무원 역시 여전히 불리한 여건에 처해 있다. 나아가 현재 동독 지역에 소재한 기관들조차 관리직은 여전히 서독 출신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향후 기존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젊은 세대 동독 출신 인재들의 참여 기회를 개선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통일 이후 동독 지역으로 부임했던 많은 서독 출신 관리직들의 은퇴 시기가 도래한 점과, 동독 지역 내 추가적인 기관 유치 등은 인적 구성의 변화를 위한 적절한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연방행정의 지속 가능한 인사 정책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데이터 수집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다양성 및 기회균등 실태조사'는 앞으로도 연방행정 내 동독 출신의 대표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진단할 수 있는 적합한 도구로서 기능할 것이다.

2025년 독일 모니터

사회적·정치적 태도에 대한 요약 보고서 「독일은 변화에 얼마나 수용적인가?」

헬레네 프랑케, 에버하르트 홀트만, 토비아스 예크, 라인하르트 폴락, 마리온 라이저, 마티아스 잔트, 피에르 치셀

베를린, 할레(잘레), 예나, 만하임 / 2025년 7월

1. 서론

독일은 변화에 얼마나 수용적인 사회인가? 최근의 시대진단에 따르면, 독일 사회의 정신적 상태를 특징짓는 개념으로 이른바 '변화 피로감(Veränderungsmüdigkeit)'이 자주 언급된다. 사회학자 슈테펜 마우(Steffen Mau)는 이를 '변화에 대한 탈진(Veränderungserschöpfung)'이라 표현하며, 사회 구성원의 일부가 사회적 변화에 의해 "휩쓸리고 있다고 느끼는" 현실을 지적한다(Mau, 2022). 경제학자 마르셀 프라츠셔(Marcel Fratzscher) 역시 이와 유사한 논조로 독일 내 위험 회피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한다. 전통적으로 독일의 정치와 경제가 "속도보다는 안정성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 "변화를 성급하게 밀어붙이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접근해야 한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라고 설명한다(Fratzscher, 2024).

이처럼 현상유지를 고집하는 시대정서를 뒷받침하는 경험적 근거도 존재한다. 일례로 2021년에 실시된 한 심리학 연구는 독일 사회 전반에 '새로운 시작을 향한 동력'이 부족하다고 결론지은 바 있다. 응답자의 37%는 '평온함을 누리는 것'에 가치를 두었으며, 31%는 '새로운 것을 (더 이상) 계속해서 시도하고 싶지 않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동시에 응답자의 80%는 '지금 행동에 나선다면, 위기에 대응해야 하는 압박이 오히려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았다(Rheingold-Institut, 2021, p. 51, 60). 이 결과는 표면적으로 모순되어 보일 수 있으나, 독일 사회에 단순히 변화에 대한 피로감이 만연한 것이 아니라, 상당수 시민이 기후 변화와 같은 구체적인 도전 과제에 대해서는 변화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시사한다(Hebenstreit et al., 2025, p. 175; Harfst et al., 2023, p. 61). 이러한 배경에서 「2025년 독일 모니터(Deutschland-Monitor 2025)」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독일은 변화에 얼마나 수용적인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 글로벌 관세 분쟁, 경제 성장 둔화 등 복합 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이미 높은 수준에 이른 변화에 대한 압박이 앞으로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은 한편으로 경제계와 국민이 변화의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사회적 전환에 따른 결과를 감당해야 한다는 객관적 필요성을 증대시킨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권이 생활 및 근로 조건의 변화를 선제적이고 자원 효율적이며, 사회적으로 균형 잡힌 방식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기대 또한 높아지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이거나 예견되는 전환 과정을 적절히 지원하고 설계할 수 있는 정책 차원의 '변화 관리(Change-Management)'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변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우려, 희망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가능한 한 정확한 최신 정보가 필수이다. 올해 「독일 모니터(Deutschland-Monitor)」의 주제 설정은 이러한 정치·사회·학문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2025년 독일 모니터」의 핵심 주제에 기초한 문제 제기, 즉 독일 국민들이 사회적 변화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는 단순히 변화가 개인의 삶의 일부로 인지되는지 여부와 그 방식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본 조사에서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진행 중인 변화의 규모와 강도, 속도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긍정적인지 혹은 부정적인지를 파악하고, 변화를 기회와 위험 중 어느 측면으로 더 크게 받아들이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또한, 이미 경험한 변화를 유리하게 혹은 불리하게 느끼는지, 어떤 조건과 맥락에서 사회적 변화에 동참할 의지가 있는지도 핵심적인 분석 대상이다. 본 보고서는 이와 관련하여 이론적·개념적 기반으로 조직연구 이론과 '변화 피로(Change Fatigue)' 개념을 차용하였다. 변화 피로란 변화의 당사자들이 인식하고 평가하기에 변화와 혁신의 빈도가 너무 잦거나 그 폭이 지나치게 깊은지 여부를 측정하는 것이다(Berneth et al., 2011 참조). 사회 전반의 변화 개방성과 변화 피로도를 세분화하여 파악하기 위해 변화 수용성을 4가지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표 1>). 이 과정에서 변화를 기회와 위험 중 무엇으로 인식하는지뿐만 아니라, 변화의 속도와 범위, 깊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개인별로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핵심적인 기준이 된다.

<표 1> 변화 수용성의 4가지 차원

차원		측정 내용	척도
1	**변화에 대한 평가: 기회-위험**	사회적 변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지(기회), 부정적으로 인식하는지(위험) 측정	위험 <--> 기회
2	**변화의 속도**	사회적 변화가 진행되는 속도를 어떻게 체감하는지 측정	너무 느림 <--> 너무 빠름
3	**변화의 범위**	변화가 얼마나 다양한 생활 영역 및 사회 부문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 측정	너무 적음 <--> 너무 광범위함
4	**변화의 깊이**	변화가 표면적인 수준인지, 혹은 구조적으로 깊이 개입하는 변화로 경험하는지 측정	거의 체감 불가 <--> 너무 심층적

본 연구에서는 변화 수용성을 전반적 차원과 특정 정책 분야별 차원으로 구분하여 고찰한다. 먼저, 앞서 제시한 4가지 차원을 바탕으로 변화라는 주제에 대한 전반적인 관점을 분석한다. 이러한 전반적인 변화 수용성은 응답자들이 사회적 변화 과정을 총체적으로 어떻게 인지하고 평가하는지를 보여준다. 이 분석을 토대로 총 5가지 변화 유형을 도출하고, 각 유형이 변화에 대해 지니는 차별적인 관점을 살펴본다. 아울러 과거의 변혁 및 변화 경험과 사회구조적·정치적 요인이 전반적인 변화 수용성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조사한다. 이어서 구체적인 정책 분야별 변화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식과 평가를 분석한다. 분야별 변화 수용성을 파악하기 위해 현재 변화가 한창 진행 중인 6대 핵심 분야, 즉 이주, 국방, 디지털화, 인구구조, 경제, 기후에 초점을 맞춘다. 여기에서는 각 분야의 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물론, 현재 사회적으로 논쟁이 되고 있는 쟁점들에 대한 국민들의 입장을 함께 조명한다. 나아가 어떤 인구 집단이 각 정책 분야의 변화에 보다 개방적인지, 혹은 상대적으로 유보적 태도를 보이는지 분석한다. 결론에서는 '독일 사회의 변화 수용성은 어느 정도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핵심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제시한다.

본 분석의 경험적 근거는 독일에 거주하는 만 16세 이상의 독일어 사용 인구를 대상으로 시행한, 대표성을 확보한 설문조사이다. 총 4,005명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는 2025년 4월 23일부터 5월 30일까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포르자(Forsa)가 컴퓨터 보조 전화면접조사(CATI) 방식으로 실시하였다.[6]

2. 전반적인 변화 수용성

2.1 전반적으로 변화 수용성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

사회 변화에 대한 인식은 국민들 사이에서 분화된 의견 분포를 보인다. 우선 변화의 깊이와 관련하여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6%는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10명 중 약 4명에 해당하는 39%는 변화를 (지나치게) 심층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변화의 범위에 대한 평가 역시 이와 유사하여, 응답자의 약 절반(47%)은 변화가 너무 많은 영역에 영향을 미치지도, 너무 적은 영역에 국한되지도 않는다고 보았다. 반면 29%는 변화가 지나치게 많은 분야에 걸쳐 일어난다고 평가했으며, 사회적 변화가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 오히려 너무 적다는 응답은 24%로 나타났다. 변화의 속도 측면에서도 중립적인 위치를 선택한 응답자가 45%로 가장 많았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사회적 변화가 (너무) 빠르다고 느끼는 응답자(22%)보다 오히려 (너무) 느리다고 느끼는 응답자(33%)가 확연히 더 많다는 사실이다.

[6] 「독일 모니터」는 독일 전역의 정치적·사회적 인식을 조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별 영향 요인 외에도 지역적 생활 환경('맥락(Kontext)')이 해당 지역 거주자의 사회적·정치적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2025년 독일 모니터」는 서로 다른 두 표본을 대상으로 실시된 표준화된 설문조사 두 종류를 결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는 독일에 거주하는 16세 이상 독일어 사용 인구를 대상으로 한 대표 표본조사로, 수집된 인터뷰 자료는 '독일 사회의 변화 수용성은 어느 정도인가?'라는 주제를 다루는 본 요약 보고서의 기초적인 분석 자료가 되었다. 둘째는 주민등록청 자료를 기반으로 한 지역 표본조사이다. 이를 위해 동·서독 내 구조적 강세 지역과 취약 지역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약 4,000건의 추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방법론적 혁신을 통해 시·군 및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구조적 데이터와 인식 조사 자료를 연계함으로써, 지역환경 요인이 정치적·사회적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었다. 또한, 이 설문조사는 해당 지역에서 실시된 질적 표적집단면접을 통해 보완되었다. 보다 심층적인 분석은 추후 발간될 「2025년 독일 모니터」 종합 보고서에 수록될 예정이며, 상세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www.deutschland-monitor.info/)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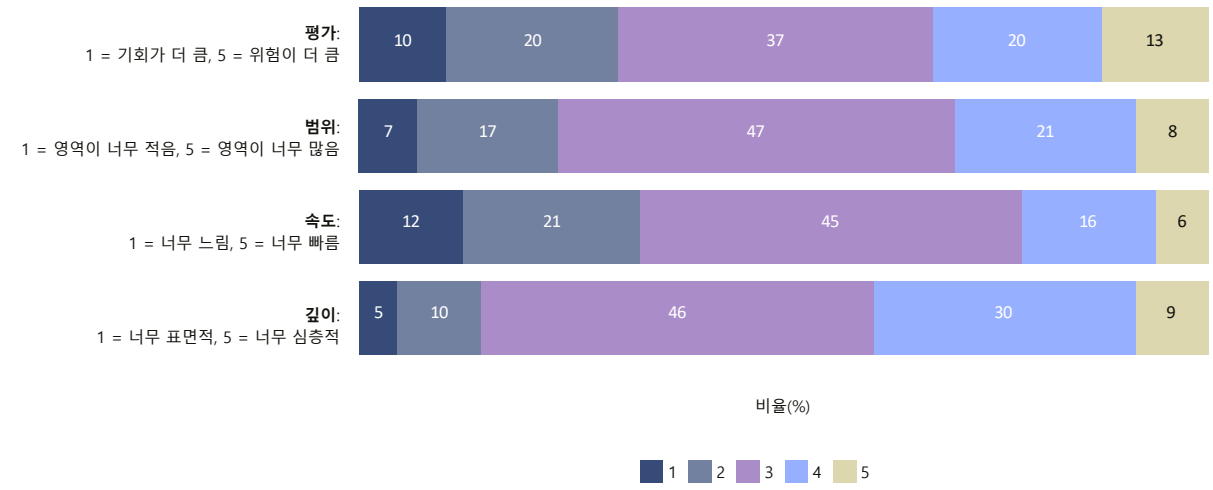
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보면, 응답자의 약 3분의 1은 주로 위험 요인을 떠올린다고 답했으며(33%), 또 다른 3분의 1은 기회를 더 크게 본다고 응답했다(30%). 나머지 37%는 사회 변화를 위험과 기회가 균형을 이루는 현상으로 인식하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

사회 변화에 대한 전반적 평가에서 동서독 간 차이는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변화를 기회와 위험 중 어느 쪽으로 인지하는지에 대한 평가에서만 동독 지역의 인식이 다소 부정적인 양상을 띠었다. 동독에서는 응답자의 27%가 변화를 기회로 인식한 반면, 서독에서는 31%가 기회라고 답하였다. 또한 동독 응답자의 약 35%는 변화를 위험과 결부시킨 데 반해, 서독은 그 비율이 32%로 소폭 낮았다. 결과적으로 서독에서는 변화를 기회와 위험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대체로 비슷한 반면, 동독에서는 위험으로 인식하는 쪽으로 무게 중심이 다소 기울어 있는 경향이 확인된다.

2.2 5가지 변화 유형으로의 분류

근본적인 사회 변화를 위험 혹은 기회 중 무엇으로 인식하는지는 변화의 깊이, 범위, 속도에 대한 개인의 평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8] 즉, 현재의 사회 변화가 지나치게 심층적이고, 너무 빠르며, 과도하게 광범위하다고 체감할수록, 그 변화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함께 나타난다. 이는 곧 변화에 대한 회의적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다. 반대로, 진행 중인 실제 변화가 너무 표면적이고, 너무 느리며, 그 영향 범위가 제한적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오히려 변화를 독일의 미래를 위한 기회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평가에는 변화에 대한 개방성이 내포되어 있다.

<그림 3> 인식된 변화에 대한 평가[7]: 변화의 깊이, 범위, 속도 및 평가



*주: 수치의 합계가 100%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미달 혹은 초과)는 반올림에 의한 것임

[7] 변화의 깊이, 속도, 범위 변수는 본래 0~10의 척도로 조사되었으나, 전반적 평가 항목(기회/위험)과의 비교를 위해 1~5의 값으로 재코딩함

[8] 분석에 사용된 4가지 변수(깊이, 범위, 속도, 평가)는 통계적으로 단일한 차원으로 수렴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이하에서는 이를 '변화 수용성'이라 정의한다. 해당 변수들로 구성된 척도의 신뢰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확보되었다(α=0.61). 새롭게 산출된 평균값 척도는 1점 '변화 회의적'에서 5점 '변화 수용적'까지의 범위를 나타낸다.

이러한 변화 수용성의 4가지 차원에서 나타난 평가 조합의 다양한 분포 양상을 바탕으로 5가지 '전환 유형'을 도출할 수 있다(<표 2>).

'전환 지지형'(유형 1)은 변화를 필수적이며 기회가 많고, 주도적으로 설계 가능한 과정으로 인식한다. 이들은 근본적인 변화에 개방적이며, 변화의 속도가 최소한 적절하거나 오히려 너무 느리다고 체감한다. 해당 유형은 동서독 지역 모두에서 응답자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표 2> '5가지 전환 유형'의 분류 체계

1~5점 척도 기반 평균값

유형		깊이	속도	범위	평가	평균값(1–5)[9]
1	**전환 지지형**	중립~다소 피상적, 지나치게 피상적	다소 느림, 지나치게 느림	중립~다소 제한적, 지나치게 제한적	다소 긍정적~ 매우 긍정적	4.0
2	**전환 개방형**[10]	중립~다소 피상적	중립~다소 느림	중립~다소 제한적	중립~다소 긍정적	3.3
3	**전환 양가형**	양가적·중립적 인식[11], 타 유형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집단				3.0
4	**전환 비판형**[12]	중립~다소 심층적	중립~다소 빠름	중립~다소 광범위함	중립~다소 부정적	2.5
5	**현상유지 지향형**	다소 심층적~ 지나치게 심층적	다소 빠름~ 지나치게 빠름	다소 광범위함~ 지나치게 광범위함	다소 부정적~ 매우 부정적	1.6

'전환 개방형'(유형 2)은 원칙적으로 변화를 인정하지만, 그 과정이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기를 원한다. 전체 응답자의 13%가 이 유형에 해당하며, 동독 지역에서의 비율은 9%로 다소 낮은 수준이다.

'전환 양가형'(유형 3)은 변화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않는 집단이다. 예컨대 변화의 속도나 범위는 너무 미진하다고 평가하면서도 동시에 변화가 초래할 위험은 크다고 인식한다. 이러한 양가적 태도로 인해 다른 유형으로 명확히 분류되기 어려우며,[13] 전체의 52%를 차지하여 조사 대상 중 가장 큰 비중을 나타낸다.

[9] 각 유형이 '변화 수용성' 척도(1=낮음, 5=높음)에서 차지하는 평균값을 나타냄. <표 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유형 분류는 변화 수용성의 4가지 차원을 기반으로 함. 복잡한 행동 양식을 가시화하는 분석 도구로서의 유형 분류 방법론에 대해서는 Silbereisen/Pinquart(2008, 15)를 참조할 것.

[10] 전환 개방형은 최대 3개 항목에서 중립으로 응답하고, 최소 1개 항목 이상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한 응답자를 의미함

[11] 전환 양가형은 위험은 높게 평가하면서도, 변화의 속도와 범위는 오히려 너무 낮다고 평가하는 경우 등을 포함함. 여기서 중립적 인식이란 4가지 차원 모두에서 중립으로 응답한 경우를 의미함

[12] 전환 비판형은 최대 3개 항목에서 중립으로 응답하고, 최소 1개 항목 이상에서 부정적인 답변을 한 응답자를 의미함

[13] 이는 해당 집단이 현재의 사회 변화에 대해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동의하고 있을 가능성도 시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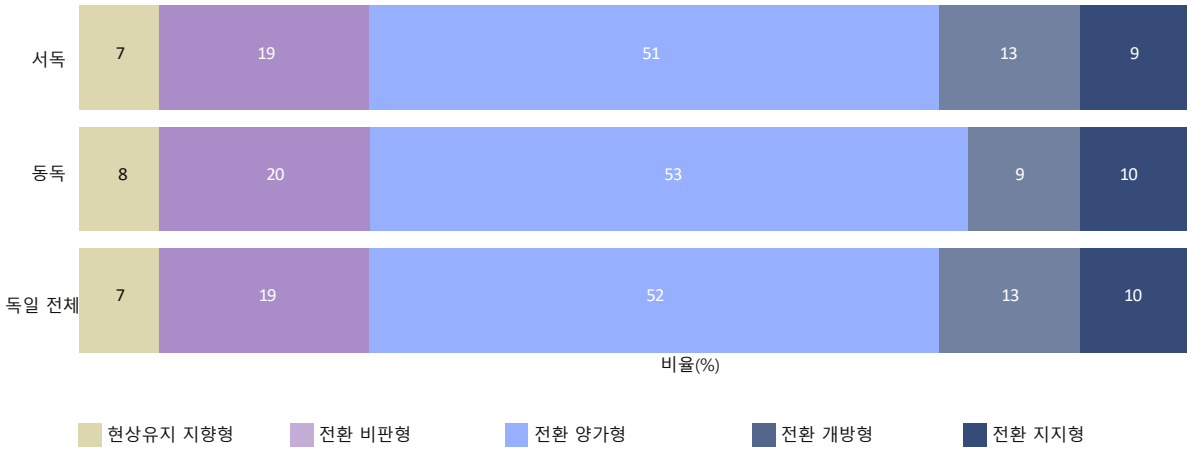
‘전환 비판형’(유형 4)은 사회 변화에 대해 회의적이거나 거부적인 태도를 취한다. 이들은 변화가 대체로 너무 빠르고 광범위하며 심층적인 동시에, 상당한 위험을 수반한다고 인식한다. 동서독 지역 모두에서 응답자의 약 5분의 1에 가까운 인원이 이 유형으로 분류된다.

가장 회의적인 유형인 ‘현상유지 지향형’(유형 5)은 현재의 변화 과정을 지나치게 심층적이고 빠르며 광범위하고, 전적으로 위험이 따른다고 일관되게 평가한다. 이들은 현상유지에 대해 뚜렷한 선호를 보이며 사회 전환에 근본적으로 매우 비판적이다.

특히 ‘전환 비판형’(유형 4)과 달리, 4가지 차원 중 어느 하나에서도 중립적인 입장을 전혀 취하지 않는다. 이 유형은 전체의 7%를 차지하여 수치상으로 가장 작은 비율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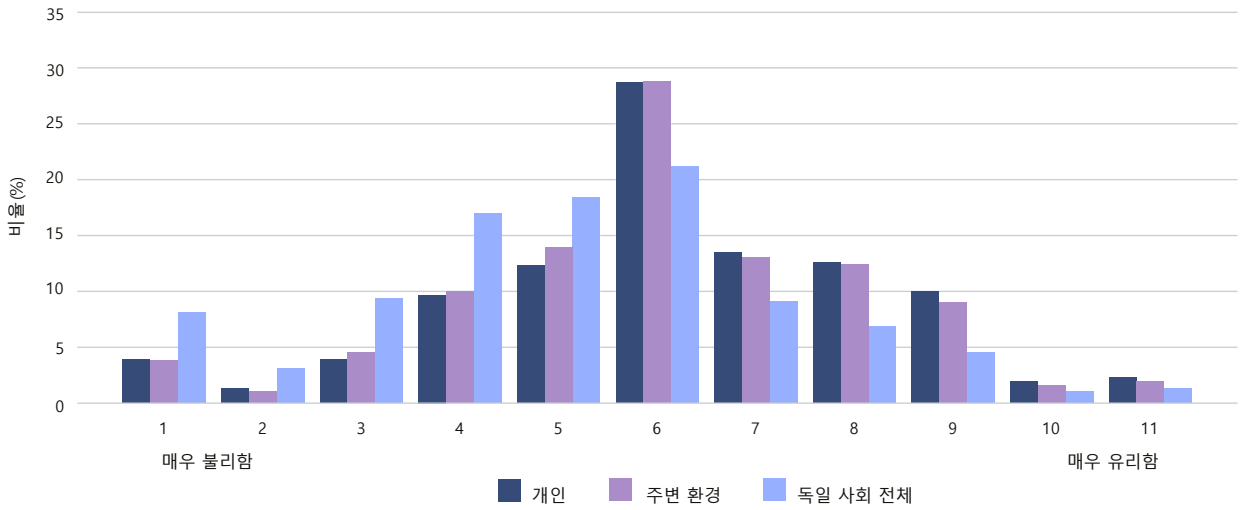
5가지 전환 유형의 분포를 동독과 서독 지역별로 나누어 살펴보면(<그림 4>), 두 지역 간의 변화 수용성이 놀라울 정도로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 동독, 서독 및 독일 전체*의 전환 유형별 분포



*주: 수치의 합계가 100%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미달 혹은 초과)는 반올림에 의한 것임

<그림 5> 지난 10년간 변화에 대한 응답자들의 평가



2.3 전환 경험: 변화 수용성을 결정짓는 요인인가?

사회 변화에 대한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이에 관한 핵심적인 질문 중 하나는 현재와 미래의 변화에 대한 개방성이 과거에 축적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전환 경험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느냐 하는 점이다. 특히 독일 통일 및 체제 전환기를 거치며 동독 주민들이 겪은 특수한 경험이 변화에 대한 더 큰 회복탄력성으로 이어졌는지, 아니면 오히려 변화 피로감을 심화하는지를 두고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변화 경험은 변화 개방성을 높이는 경향이 있는 반면, 실직과 같은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은 현재와 미래의 전환에 임하는 수용 의사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가정된다(Lettrari, 2019; Mau, 2024; Ragnitz, 2025 등 참조).

그렇다면 실제로 독일 국민들은 지난 10년간 경험한 사회적 변화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이하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개인적 차원과 주변 환경 차원(가족, 이웃, 친구), 독일 전체 차원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응답자 10명 중 3명(29%)은 최근의 사회 변화가 본인이나 주변 환경에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았다고 평가했다(<그림 5> 범주 6). 이와 비슷한 비율의 응답자들이 지난 10년간의 변화를 개인(31%) 또는 주변 환경(33%)의 측면에서 다소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범주 1~5). 반면, 응답자 10명 중 약 4명은 개인(40%) 및 주변 환경(38%)에 대해 긍정적인 변화 성과가 있었다고 답했다(범주 7~11).

평균적으로 독일 사회 전체를 기준으로 한 변화 경험 평가는 개인이나 주변 환경에 대한 평가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인식의 층위는 개인의 경제적 상황을 독일 전체의 경제적 상황보다 훨씬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일반적인 패턴과 유사하다.[14] 동서독 지역 간 차이는 전체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의 개인적 변화 경험은 동독 지역에서 아주 근소하게 더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응답자를 1990년 이전에 구동독 또는 서독 중 어느 지역에서 사회화되었는지를 기준으로 구분할 경우, 보다 뚜렷하게 나타난다. 반면, 통일 이후 사회화된 젊은 층의 경우 동서 간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개인, 주변 환경, 독일 사회 전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조사된 변화 및 전환 경험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부정적인 경험은 변화 수용성을 유의미하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 1에서 4까지의 집단에서는 과거 경험에 따른 뚜렷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편향이 관찰되지 않은 반면, 현상유지 지향형(유형 5)은 이와 확연히 차별화된 양상을 보였다. 이들은 타 유형에 비해 부정적 변화 경험을 현저히 높은 빈도로 보고하고 있다(<표 3> 참조). 이는 이들이 지난 10년간 축적한 부정적 경험으로 인해, 변화에 대해 근본적으로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며 사회적 변화를 위험 요소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종합하면, 이러한 결과는 과거의 부담스러운 변화 경험이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변화 피로감을 설명하는 핵심 요인이라는 학계의 가설을 뒷받침한다.[15]

2.4 변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구조적·정치적 요인

변화 경험 외에 변화 수용성과 체계적인 상관관계를 갖는 요인은 무엇인가? <표 3>은 주요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그 특성에 따른 전환 유형별 분포를 보여준다. 우선 연령은 변화 수용성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전환 지지형'과 '전환 개방형'의 경우 타 유형의 응답자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약간 더 젊은 편이지만, 그 차이는 매우 근소하다. 이러한 결과는 고령층일수록 변화에 더 회의적일 것이라는 통념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없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반면 교육 수준에 따라서는 전환 유형별로 뚜렷한 격차가 관찰되었다. 대학입학자격(Abitur) 보유 비율을 살펴보면, '전환 지지형'(42%)과 '전환 개방형'(37%)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현상유지 지향형'은 26%로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했다. 소득 측면에서는 '전환 지지형'만이 두드러진 양상을 보였다. 이 집단의 평균 가구 균등화 소득은 2,839유로로 나타났는데, 이는 집단 간 큰 편차를 보이지 않은 나머지 네 유형에 비해 확연히 높은 수준이다.

성별과 변화 수용성 사이에는 약한 상관관계가 관찰되었다. 여성은 평균적으로 남성보다 사회적 변화를 더 민감하게 체감하며, 변화를 위험 요인과 결부하여 인식하는 경향도 남성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전환 지지형' 내 남성 비율이 여성보다 약 2배가량 높은 반면, '전환 개방형'(유형 2)과 상대적으로 비판적인 성향을 보이는 유형 4와 5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더 높았다.

[14] 「2025년 독일 모니터」에 따르면,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매우 좋음/좋음'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66%에 달했으나, 독일 전체의 경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13%에 불과했다. 이러한 '만족도 역설(Zufriedenheitsparadoxon)' 현상에 대해서는 Koltermann(2025) 참조

[15] 동독의 '체제 전환 기억(Umbruchsgedächtnis)' 및 사회적 '균열(Frakturen)'이 변화 대응 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Mau(2024, 33)의 논의 참조

전국적으로 볼 때, 독일 전체의 경제 상황을 낙관적으로 평가할수록 변화 수용성 또한 높아지는 상관관계를 보였다. '전환 개방형'과 '전환 지지형'은 독일의 경제 상황을 평균적으로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5점 척도 기준 평균 각각 3.1과 3.2), '현상유지 지향형'은 국가 경제 상황을 훨씬 더 부정적으로 인식했다(평균 3.8).

각 전환 유형 간 차이는 주관적 정치 성향에서도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념적 좌우 스펙트럼(0~10점) 상에서 자신의 위치를 평가하게 한 결과, '전환 지지형'과 '전환 개방형'은 스스로를 상대적으로 좌측에 위치한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평균 4.2). 반면 '현상유지 지향형'은 자신의 위치를 확연히 더 우측으로 규정하고 있었다(평균 5.5). 정당 선호도를 살펴보면, '현상유지 지향형' 내에는 독일을 위한 대안당(AfD) 지지층이 평균을 상회하며 밀집되어 있는 반면, '전환 지지형'에서는 녹색당 지지층이 과표집되어 나타나는 양상을 보였다.

사회구조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의 분포를 종합해 볼 때, 보유 자원이 풍부할수록 대체로 변화에 대해 보다 개방적이라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난다. '전환 지지형'에 속한 응답자들은 평균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고, 정규 교육수준 또한 높은 경향을 보였다. 반면, 변화에 대해 전반적으로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는 집단은 평균적으로 가용 자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또한 지금까지의 변화 경험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며, 개인의 경제 상황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경제 상황 역시 평균적으로 더 부정적으로 인식한다. 아울러 거주 지역의 특성을 보면, '현상유지 지향형'으로 분류되는 이들은 변화에 보다 개방적인 집단에 비해 대도시 거주 비율이 더 낮은 양상을 띠었다.

<표 3> 전환 유형별 특성 프로필

	전환 지지형	전환 개방형	전환 양가형	전환 비판형	현상유지 지향형
전반적 평가 (0점(부정)~10점(긍정) 사이 평균값)	5.2	5.3	4.7	5.0	3.6
평균 연령(단위: 세)	48.4	48.9	51.3	52.1	51.4
학력(대학입학자격 보유 비율)	42%	37%	31%	32%	26%
균등화 소득 **(단위: 유로화, 평균)**	2,839	2,451	2,539	2,503	2,359
성별(여성 비율)	37.1%	56.9%	48.9%	60.9%	55.2%
독일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 (1점(매우 좋음)~5점(매우 나쁨) 평균값)	3.2	3.1	3.4	3.3	3.8
대도시 거주자 비율	36%	35%	32%	30%	25%
주관적 정치 성향(이념적 위치) (0점(좌측)~10점(우측)사이 평균값)	4.2	4.2	4.6	4.6	5.5

3 주요 정책 분야별 변화 수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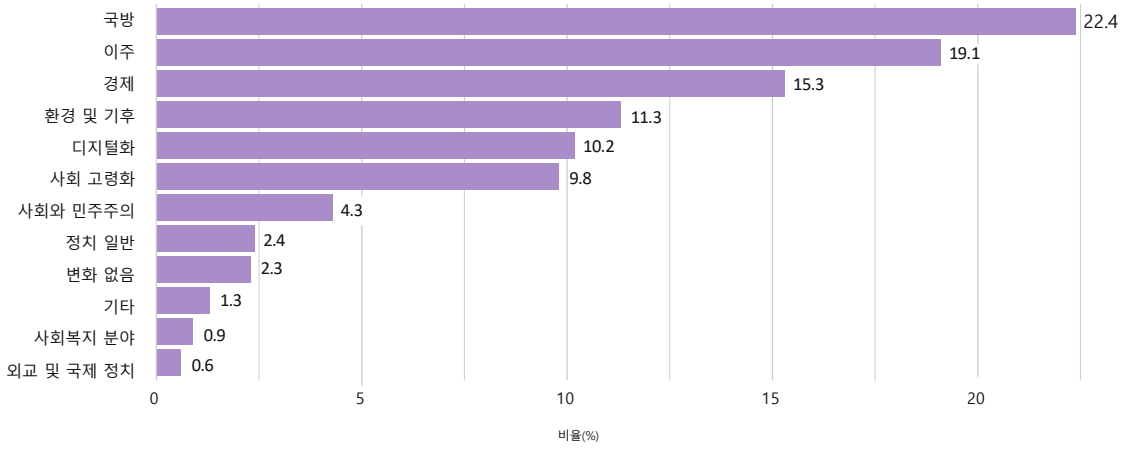
앞서 살펴본 사회 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결과는 구체적인 정책 분야별 변화 수용성을 분석하기 위한 출발점이 된다. 본 장에서는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며, 시민들이 일상에서 그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주요 사회 영역에 대한 관점에 초점을 맞춘다. 구체적으로는 국방, 이주, 경제, 디지털화, 인구구조 변화, 기후 등 6개 정책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3.1 가장 광범위하고 빠른 변화가 두드러지는 분야는 어디인가?

먼저 현재 독일 국민이 어느 정책 분야에서 가장 큰 변화를 체감하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특정 단일 분야에 변화가 국한되기보다 여러 정책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상당한 변화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언급된 분야는 '국방 및 대외안보(22%)'였으며, '이주(19%)'와 '경제(15%)'가 그 뒤를 이었다(<그림 6>). 이어서 '환경 및 기후 보호'가 11%로 나타났고, '인구구조 변화'와 '디지털화'는 각각 10%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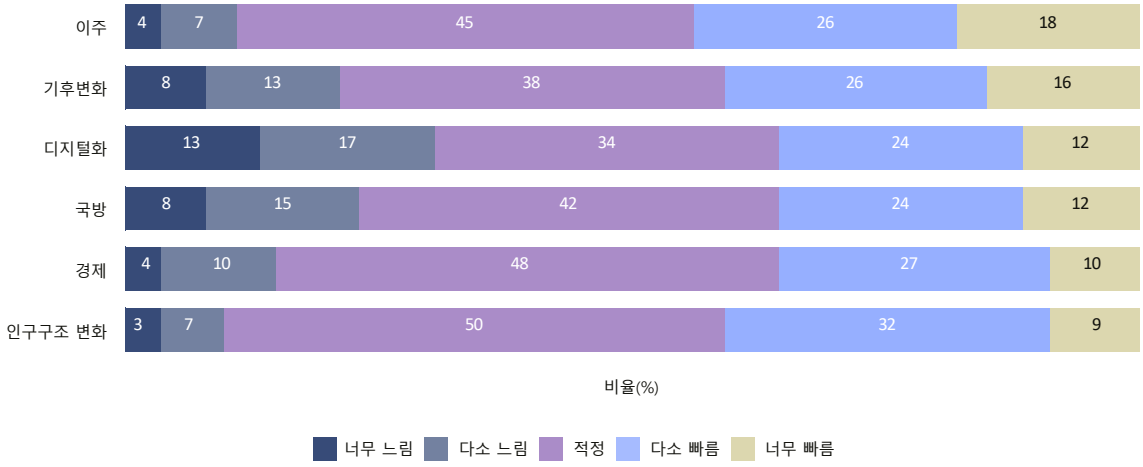
모든 정책 분야를 막론하고 응답자의 상당수(분야별 36%~44%)가 현재의 변화를 '다소 빠름' 또는 '너무 빠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개별 정책 분야에서 체감하는 변화 속도가 전반적인 사회 변화에 대한 체감 속도(22%)보다 평균적으로 훨씬 더 빠르게 평가되었다는 것이다.

<그림 6> 국민 인식 속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정책 분야(자유응답)



주: 자유응답 문항은 다음과 같음. "현재 기후, 경제, 이주, 디지털화, 국방, 사회 고령화 등과 관련하여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현재 독일 내 어느 분야에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림 7> 선정된 정책 분야별 인식되는 변화 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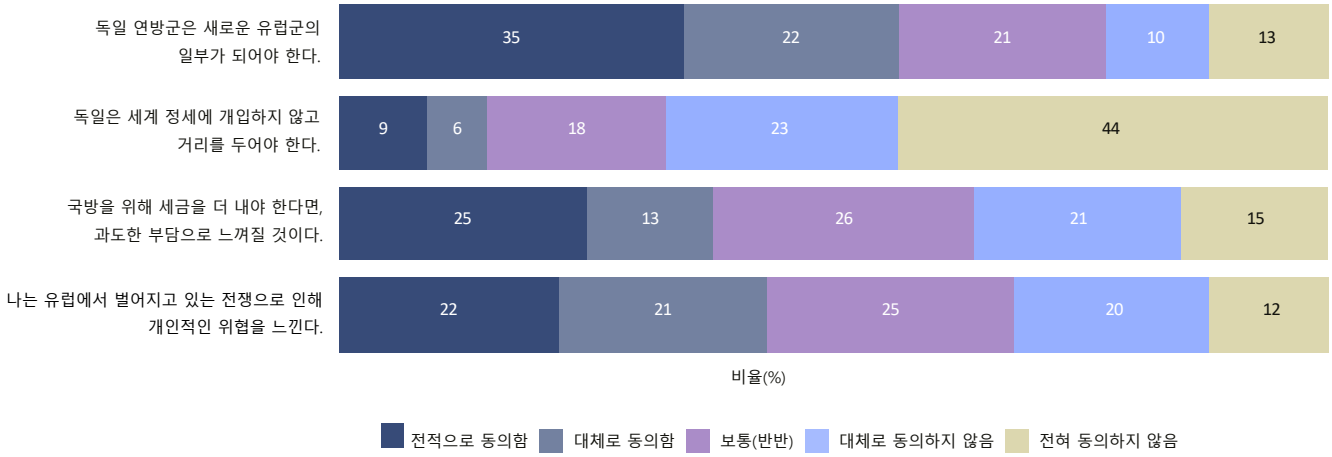
주: 수치의 합계가 100%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미달 혹은 초과)는 반올림에 의한 것임. 본 도표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척도(0: 너무 느림~10: 너무 빠름)를 다음과 같이 5개 범주로 통합하여 제시함. (0, 1) '너무 느림', (2, 3) '다소 느림', (4~6) '적정', (7, 8) '다소 빠름', (9, 10) '너무 빠름'

특히 이주 및 기후 정책 분야에서는 응답자의 각각 18%와 16%가 현재 변화를 '너무 빠름'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더욱 유의미한 비중을 차지하는 집단은 변화 속도를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은 '적정 수준', 즉 '지금이 알맞다'고 인식하는 응답자들이다. 이러한 응답은 정책 분야에 따라 34%에서 50% 사이의 분포를 보였다. 한편 변화가 '너무 느리다'는 인식이 두드러지는 분야는 디지털화, 기후 정책, 국방 영역으로 나타났으며, 각 분야에서 응답자의 20% 이상이 현재 추진되는 변화의 속도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디지털화 분야의 경우, 변화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의견과 너무 느리다는 의견이 공존하고 있어 속도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엇갈리고 있음을 보여준다(<그림 7>).

변화 속도 인식에 있어 동서독 간의 지역적 차이는 전반적으로 크지 않으나, 기후와 경제 분야에서는 비교적 뚜렷한 차이가 확인된다. 기후 정책의 경우, 동독 지역 응답자들은 서독에 비해 변화 속도를 평균적으로 다소 느리게 인식하고 있다. 동시에 동독 지역에서는 기후보호 조치의 필요성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동독 55%, 서독 63%), 이는 「2024년 독일 모니터」의 조사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Hebenstreit et al., 2025).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동독 지역 주민들은 기후 변화를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되는 사안으로 보며, 그 결과 정책적 대응의 긴급성 또한 낮게 체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경제 분야에서도 동독 지역 응답자들은 서독에 비해 경제 구조 전환의 속도가 느리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동독 20%, 서독 14%). 동시에 동독 지역 주민들은 자신의 생활환경에서 구조 변화의 부정적 여파를 더 자주 체감하고 있으며(동독 37%, 서독 31%), 침체 지역에 대한 정치적 보완 조치의 강화를 요구하는 비율도 더 높게 나타난다(동독 70%, 서독 62%). 이러한 결과는 동독 지역 주민들이 경제 구조 전환 그 자체보다, 변화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너무) 지연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보다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8> 국방 정책에 대한 인식*



*주: 수치의 합계가 100%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미달 혹은 초과)는 반올림에 의한 것임

3.2 정책 분야별 변화에 대한 관점

정책 분야별로 나타나는 구체적인 변화 수용성은 단순히 변화가 지나치게 광범위한지, 혹은 너무 느리거나 빠르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평가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그와 더불어 중요한 요인은 해당 정책 분야의 변화가 국민의 일상에 얼마나 큰 도전과제로 인식되는지, 그 과정에서 수반되는 제약이나 생활방식의 전환이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수 있다고 체감되는지의 여부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절에서는 '부담 회피(Zumutungsaversion)'라는 개념(Bergmann/Diermeier, 2024)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부담을 느끼는 정책적 변화 조치에 대해 어떤 저항을 보이는지 조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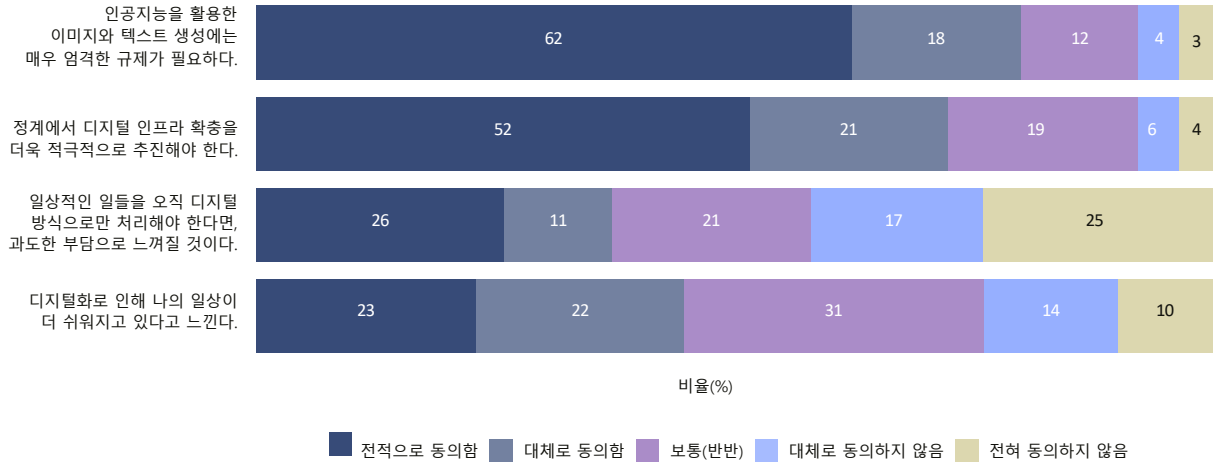
3.2.1 국방

국방 정책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사회적으로 더욱 주목받기 시작했다. 실제로 상당수 응답자들이 전쟁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응답자의 43%는 유럽 내 전쟁 상황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위협을 느낀다고 답했으며,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32%)보다 높게 관찰되었다. 개인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에서도 의견 차이가 드러났다. 국방비 확충을 위한 세금 증액을 '과도한 부담(Zumutung)'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8%인 반면, '과도한 부담은 아니다'라고 답한 비율은 36%에 달해 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그림 8> 참조). 이러한 부담 인식은 특히 동독 지역에서 두드러지며, 동독 응답자의 45%가 국방비 증액을 위한 추가 세금 부담을 감내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현재 국방 정책을 둘러싼 논의의 핵심은 변화한 국제 정세 속에서 독일의 군사적 개입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가에 있다.[16] 전반적으로 사회 변화에 낙관적인 태도를 가진 집단일수록 국방 분야에서의 군사적 역할 확대에 수용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현상유지 지향형' 집단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대한 거부감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16] 이를 위해 <그림 8>에 제시된 상위 3개 문항을 활용해 하나의 척도를 구성함(신뢰도 α=0.60)

<그림 9> 디지털화에 대한 인식



*주: 수치의 합계가 100%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미달 혹은 초과)는 반올림에 의한 것임

사회인구학적 및 경제적 차이 또한 국방 정책적 개입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젊은 세대는 국방 분야의 개입 확대에 대해 고령층보다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이는 최근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Graf, 2025). 실제로 유럽군 창설에 관한 구상에 대해 젊은 세대는 고령층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반면 서독 출신 남성 및 고학력자 집단에서는 국방 정책의 개입 확대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개방적인 태도가 관찰되었다. 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이도 뚜렷하게 나타나, 고소득층은 저소득층에 비해 국방비 증액을 위한 추가 세금 부담 등을 감내할 의향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3.2.2 디지털화

디지털 기술 및 인프라의 급격한 발전은 변화 속도에 발맞춰야 한다는 요구와 일부 계층이 사회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키며 사회적 긴장을 동반하고 있다(유럽연합 집행위원회, 2022; DFA, 2025).

조사 결과, 독일 국민들은 전반적으로 디지털화에 대해 높은 수용성을 보였다. 응답자의 45%는 디지털화로 인해 일상이 더 편리해졌다고 평가한 반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24%에 그쳤다. 다만, 모든 일상적인 과업이 디지털 방식으로만 처리되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평가가 갈린다. 응답자의 37%는 전면적인 디지털 전환을 '과도한 부담'으로 인식한 반면, 42%는 이를 부담으로 느끼지 않는다고 답했다(<그림 9> 참조).

전반적인 변화 수용성이 국가와 공공 부문의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인식과 수용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17], '현상유지 지향형' 집단은 추가적인 디지털화에 대해 상대적으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디지털 전환에 동의하는 비중이 타 집단 대비 유의미하게 낮았다. 반면, '전환 지지형'은 국가와 사회 전반의 디지털화에 대해 보다 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17] 이를 위해 <그림 9>의 하단 3개 문항을 활용해 하나의 척도를 구성함(신뢰도 α=0.68)

연령 및 사회경제적 요인 또한 디지털 전환 수용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고령층의 경우 디지털화된 일상에 적응할 준비가 되어 있거나 스스로 그럴 수 있다고 느끼는 비율이 낮았다(Störk-Bieber et al., 2020). 반대로 고소득·고학력·남성 집단은 디지털화에 대해 더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는 특히 가용 자원이 풍부한 집단일수록 디지털 전환에 더 원활하게 적응하고 이를 수용할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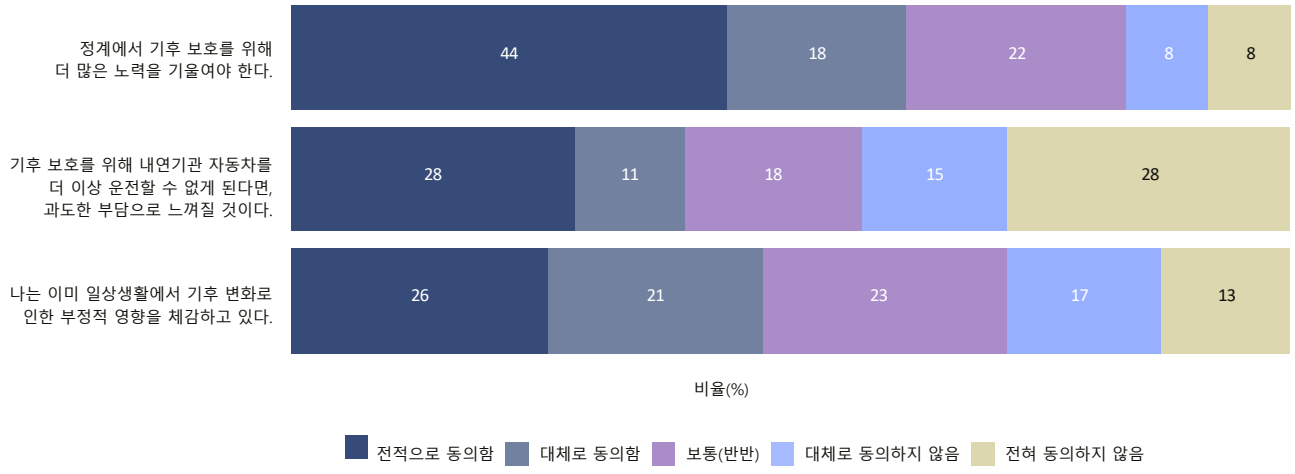
3.2.3 기후 변화

자연과학계는 인간 활동에 의한 기후 변화가 지구 생태계를 위협하는 결정적 요인이라는 점에 대해 사실상 이견이 없는 상태다(Cock et al., 2016). 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7%가 이미 일상에서 기후 변화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체감하고 있었으며, 추가로 23%가 이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다수(62%)는 정치권이 기후 보호를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으며,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16%에 불과했다(<그림 10> 참조).

그러나 전력 생산, 난방, 교통 분야에서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론이 엇갈린다. 특히 교통 분야에서 논쟁이 두드러지는데, 응답자의 39%는 기후 보호를 이유로 내연기관 자동차를 포기하는 것을 '과도한 부담'으로 느낀다고 답한 반면, 43%는 이를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보았다. 전반적인 변화 수용성의 차이는 기후보호 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와 그에 대한 개방성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난다.[18] 특히 '현상유지 지향형'은 추가적인 기후보호 조치에 대해 강한 유보적 입장을 보이며, 자신의 주변환경에서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체감한다고 응답하는 비율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반면 '전환 지지형'과 '전환 개방형'은 기후보호에 대해 보다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다.

기후보호 정책은 현재 독일 공공 담론에서 고도로 정치화된 사안이자 여론의 양극화가 두드러지는 쟁점이다(Mau et al., 2023; Teney et al., 2024; Hebenstreit et al., 2025, p. 42 이하; Canzler, 2024, p. 117). 이러한 양상은 올해 「독일 모니터」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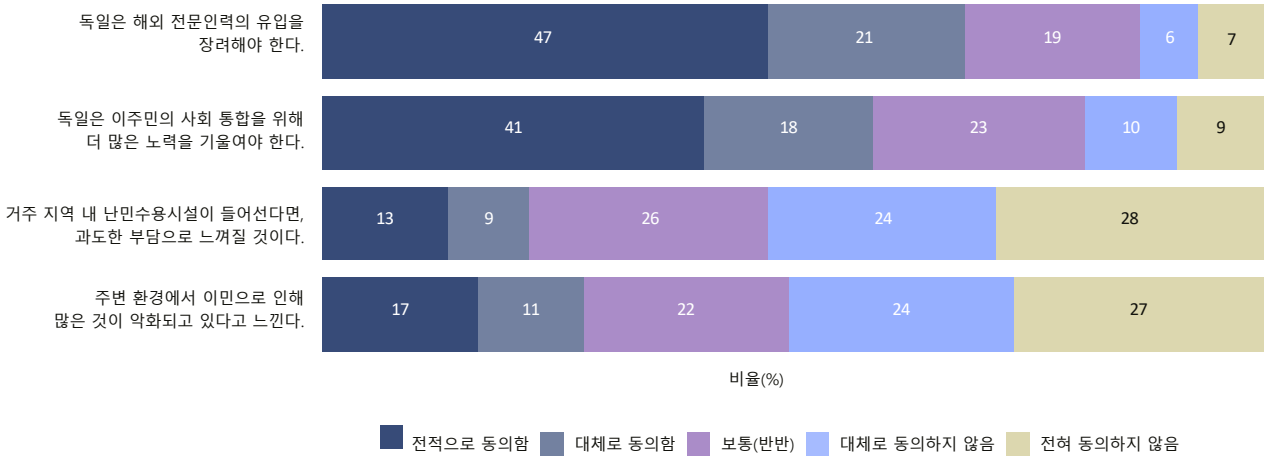
<그림 10> 기후 변화 및 기후 보호에 대한 인식*



*주: 수치의 합계가 100%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미달 혹은 초과)는 반올림에 의한 것임

[18] 이를 위해 <그림 10>의 3개 문항을 활용해 하나의 척도를 구성함(신뢰도 α=0.69)

<그림 11> 이주·이민에 대한 인식*



*주: 수치의 합계가 100%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미달 혹은 초과)는 반올림에 의한 것임

본인의 정치적 성향을 우측으로 인식할수록 일상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체감하는 정도는 낮아졌으며, 기후보호 조치에 대한 거부감은 더 크게 나타났다. 아울러 주관적 정치 성향뿐만 아니라 정규 교육 수준과도 뚜렷한 상관관계가 드러났는데, 고학력자일수록 기후 변화에 대해 의식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3.2.4 이주·이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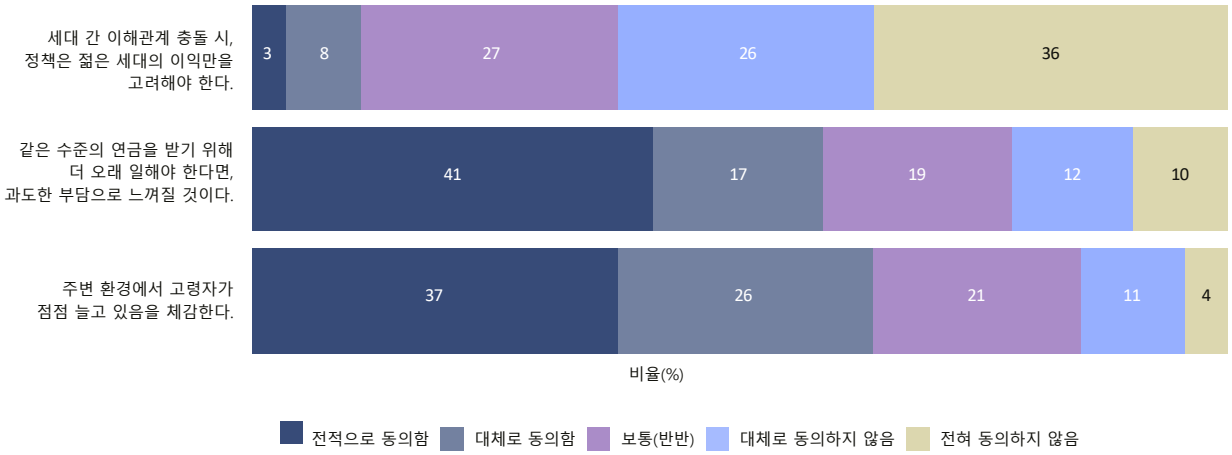
이주는 글로벌 불평등, 지정학적 위기, 무력 충돌 및 개인의 이주 결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다양한 사회정치적 도전 과제를 동반한다. 조사 결과, 이민으로 인해 많은 것이 악화되었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응답자는 28%였으나, 과반인 51%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또한 자신의 거주 지역 내 난민수용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감내하기 어려운 부담으로 여기는 응답자는 22%였으며, 절반 이상인 52%는 이를 부담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이는 이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분화되어 있으면서도, 때로 공공 담론이나 미디어 담론에서 묘사되는 것보다 전반적으로는 더 긍정적인 방향에 가깝다는 점을 보여준다(Heide, 2025, p. 248 이하).

특히 이주로 인해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인식은 여전히 사회적 양극화를 초래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그림 11> 참조).

이주·이민 분야에서도 전반적인 변화 수용성과 정책 분야별 변화 수용성 간의 상관관계가 확인된다. 변화에 대해 일반적으로 개방적인 태도를 지닌 사람일수록 이주 현상으로 인해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하는 경향은 낮아진다.[19] 또한 주관적 정치 성향과의 연관성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념적 스펙트럼상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좌측으로 인식할수록 이주에 대해 더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는 반면, 우측으로 갈수록 유보적 입장이나 거부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지역적 차이도 일부 존재하는데, 동독 지역 주민들이 서독에 비해 이주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19] 이를 위해 이주 정책 분야에서의 변화 범위와 속도를 측정한 문항과 <그림 11>의 하단 2개 문항을 결합해 하나의 척도를 구성함(신뢰도 α=0.80)

<그림 12>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인식*



*주: 수치의 합계가 100%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미달 혹은 초과)는 소수점 반올림에 의한 것임

주목할 점은, 전국적으로 응답자의 대다수가 이주민 통합 정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59%), 해외 전문인력 유입 장려에도 찬성하고 있다는 점(68%)이다. 이러한 견해에 동의하는 집단일수록 이주로 인한 사회적 변화에 더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다.

3.2.5 인구구조 변화

독일 사회는 고령화되고 있다. 2060년까지 18세 미만 인구는 약 1,340만 명으로 감소하는 반면, 67세 이상 인구는 2,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Lang et al., 2022, p. 2). 이에 따라 세대 간 인구 비중의 불균형이 심화되며 고령 세대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조사 대상자들 역시 사회 고령화를 깊이 체감하고 있다. 응답자의 63%는 자신의 주변 환경에서 고령자가 증가하고 있음을 실감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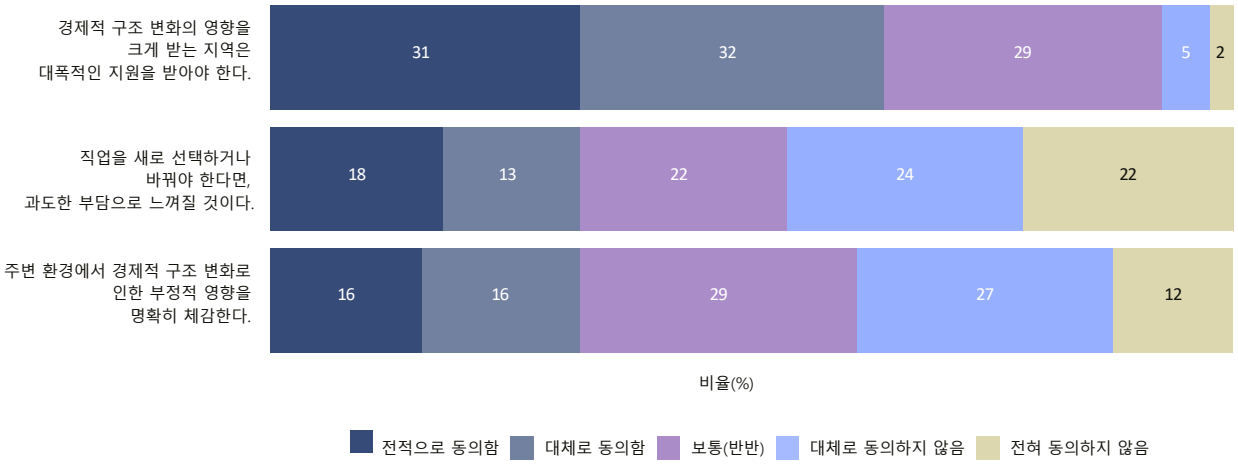
특히 연금 수령액을 유지하기 위해 더 오래 일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응답자의 과반인 58%가 '과도한 부담'이라고 답했다(<그림 12> 참조). 연령대별로는 젊은 세대일수록 정년 연장에 반대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본 조사 결과는 세대 간 형평성이 독일 국민에게 중요한 가치임을 시사한다. 세대 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젊은 세대의 이익만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보는 응답자는 소수(11%)에 불과했다.[20]

3.2.6 경제적 구조 변화

독일은 현재 장기적이고 중대한 경제적 구조 변화의 과정에 놓여 있으며, 국민들 역시 이러한 흐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32%는 자신의 주변 환경에서 구조 변화로 인한 부정적 여파를 분명하게 체감하고 있었으며, 29% 역시 이에 어느 정도 동의하였다. 반면, 부정적인 영향을 (거의)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은 39%에 그쳤다. 특히 동독 지역 주민들과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국민들이 이러한 경제적 전환의 부작용을 유의미하게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20] 이러한 경향은 모든 연령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나, 30세 미만 응답자 중에서는 젊은 세대의 이익 우선에 동의하는 비율이 22%로 다소 높게 나타남

<그림 13> 경제적 구조 변화에 대한 인식*



*주: 수치의 합계가 100%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미달 혹은 초과)는 소수점 반올림에 의한 것임

경제적 구조 변화는 생계에 대한 불안뿐만 아니라 새로운 구직 활동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업종으로의 이직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6%가 전직 및 재교육에 열려 있다고 답한 반면, 이를 감내하기 어렵고 과도한 부담으로 인식한 비율은 31%에 불과했다. 이러한 수용성 측면에서 동서독 지역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앞선 분석과 마찬가지로 '현상유지 지향형' 집단에서는 44%가 직업적 재출발을 큰 부담으로 느껴, 새로운 시작에 대한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경제적 구조 변화의 영향으로 특정 지역들이 특히 큰 압박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응답자의 압도적 다수인 63%가 이러한 위기 지역에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지역 맞춤형 지원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은 7%에 불과했다.

3.3 정책 분야별 변화 수용성 패턴

3.3.1 변화 수용성 및 경험의 정책 분야 간 공통 효과

정책 분야 전반에 걸쳐 살펴보면, 전반적인 변화 수용성은 개별 정책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변화 수용성에 일관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사회 변화 전반에 대해 기본적으로 회의적인 시각을 지닌 '현상유지 지향형'은 예상대로 모든 개별 정책 분야에서도 보수적이거나 유보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다(<그림 14> 참조).

반대로 '전환 지지형' 집단은 모든 정책 분야에서 추가적인 변화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는 전반적인 변화 수용성이 사회 변화 전반을 대하는 개인의 기본적인 성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뒷받침한다.

[21] 해당 문항은 현재 연금 수급자가 아닌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질문되었음

또한 과거의 변화 경험(2.3절 참조) 역시 개별 정책 분야에 대한 개방성에 영향을 미친다. 지난 10년간의 사회 변화가 본인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고 인식하는 집단일수록, 이주로 인한 변화, 적극적인 기후보호 정책, 국방 정책 강화와 같은 사안에 대해 더욱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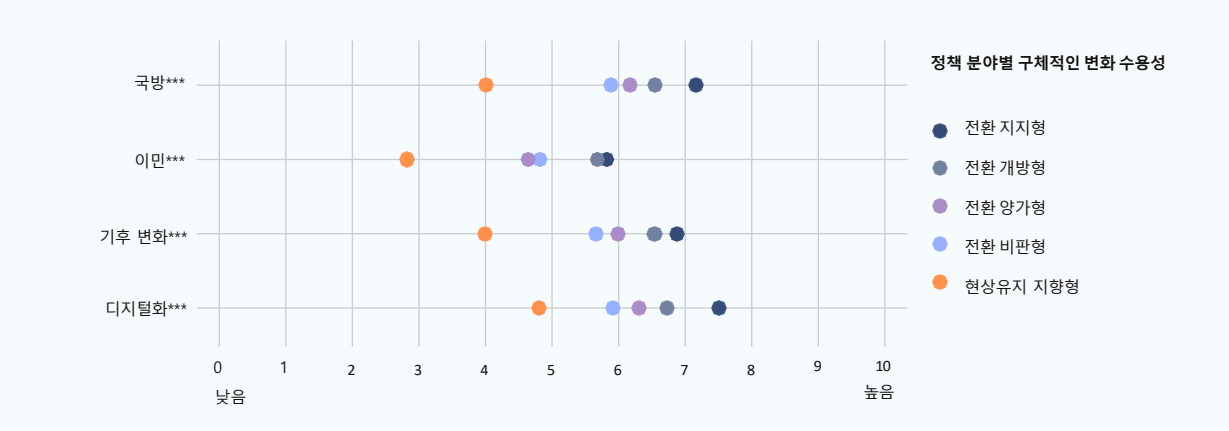
3.3.2 개인적 자원: 디지털화와 국방

전반적으로 개인적 자원은 변화 수용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고학력 집단은 중·저학력 집단에 비해 변화에 보다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다. 특히 디지털화와 국방 분야에서는 연령과 소득 수준 또한 변화 수용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디지털화 분야에서는 젊은 세대가 국가와 사회의 디지털화 확대에 더 개방적이었으며, 현재의 변화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평가하는 비중도 높았다. 이른바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s)'라 불리는 젊은 층은 디지털 매체를 성인이 된 이후에 새롭게 습득한 것이 아니라 성장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접하며 사회화되었기에, 디지털 기술을 더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세대적 배경이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 하나의 자원으로 작용하는 셈이다(Störk-Bieber et al., 2020, p. 30; Lythreatis et al., 2022 참조).

반면 국방 분야에서는 연령의 영향이 디지털화와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젊은 층일수록 독일 연방군의 군사적 개입 확대에 대해 더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한 하나의 해석은, 고령층의 경우 연령을 고려할 때 군사 작전에 실질적으로 투입되어야 할 가능성이 낮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려가 적다는 점이다. 실제로 다른 조사에서도 젊은 층이 징병제 재도입에 대해 더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Infratest dimap, 2025; Brettfeld,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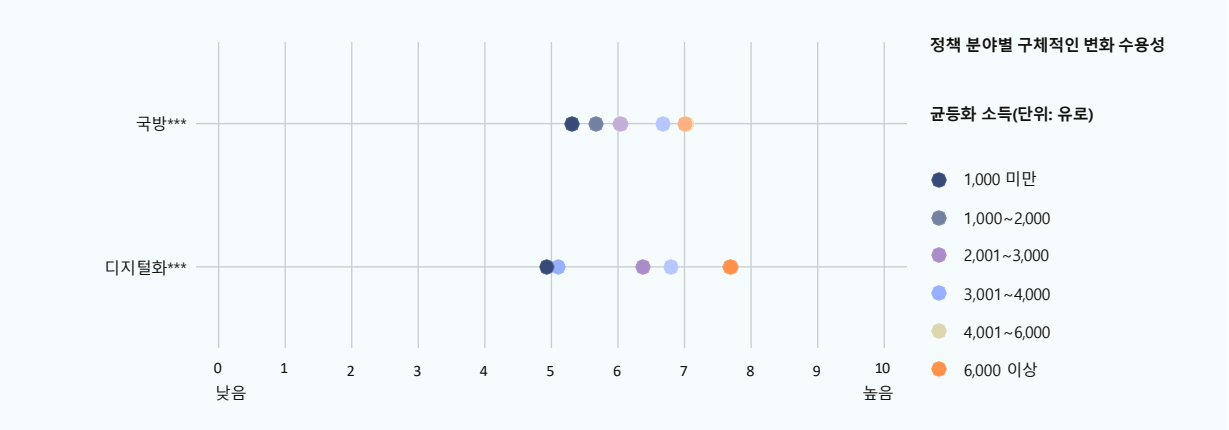
<그림 14> 전환 유형별 주요 정책 분야의 구체적 변화 수용성(평균값)



주: 유의 수준: * p<0.05; ** p<0.01; *** p<0.001

[22]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적 구조 변화 분야의 경우, 기존 문항으로부터 변화 수용성을 측정하기 위한 일관된 척도를 구성할 수 없어 본 도표 및 이어지는 분석에서 제외함

<그림 15>
국방 및 디지털화 분야에서의 소득 집단별 구체적 변화 수용성(평균값)



주: 유의 수준: * p<0.05; ** p<0.01; *** p<0.001

또한 두 정책 분야 모두에서 균등화 소득이 높을수록 디지털 전환 확대나 독일의 방위정책 강화에 따른 부담을 감수할 의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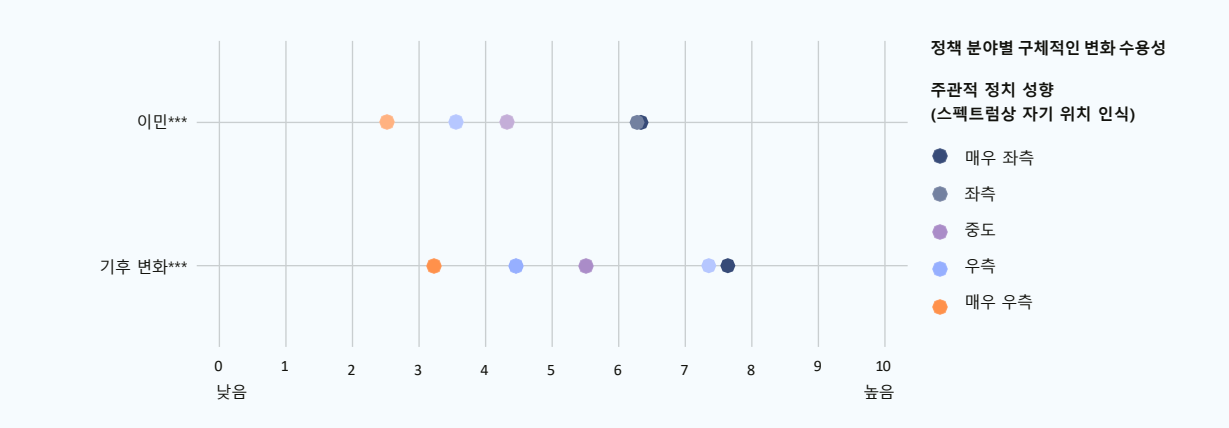
3.3.3 정치적 진영 소속: 이주 및 기후 보호

이주 및 기후 정책에 대한 태도는 전반적인 변화 수용성과 더불어 주로 정치적 진영 소속에 따라 뚜렷하게 구조화된다. 주관적 정치 성향이 우측에 가까울수록 이주 및 기후보호 정책 확대에 대해 거부감이 더 크게 나타나는 반면, 좌측에 가까운 응답자일수록 독일로의 이주에 대해 거부감이 적고 더 적극적인 기후보호 정책을 희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그림 16> 참조).

이러한 주관적 정치 성향은 현상(status quo)에 대한 평가와도 직결된다. 정치적 성향이 우측에 가까울수록 이주가 자신의 주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에 동의하는 경향이 두드러졌으며, 기후 변화의 부정적 여파를 일상에서 체감한다고 응답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경향은 정당 지지 성향에서도 확인된다. 녹색당(Bündnis 90/Die Grünen)이나 좌파당(Die Linke) 지지층은 일반적으로 이주와 기후보호 조치 강화에 대한 거부감이 적은 반면, 독일을 위한 대안당(AfD) 지지층은 이주와 기후보호 정책 모두의 축소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 정책 분야와 비교할 때, 이주와 기후 분야는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양극화된 주제로 부각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들 분야에서의 변화가 무조건적인 양극화를 야기하기 보다는 정서적으로 예민한 특정 '트리거 포인트'를 중심으로 갈등이 집중되는 양상을 보인다(Mau et al., 2023). 이는 기존의 여러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Teney et al., 2024; Bergmann/Diermeier, 2024; Reiser et al., 2025; Hebenstreit et al., 2025).

<그림 16> 이주 및 기후 분야에서의 주관적 정치 성향별 구체적 변화 수용성(평균값)



주: 유의 수준: * p<0.05; ** p<0.01; *** p<0.001

4. 주요 결과

1. 독일 국민의 상당수는 변화 피로감을 느끼지 않음

현재 독일 사회는 '변화 피로감을 느끼는(veränderungsmüde)' 상태가 아니다. 응답자의 약 4분의 1(23%)은 사회 변화에 대해 매우 개방적이고 준비된 태도를 보이며, 변화를 사회적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 절반 이상인 52%는 변화에 대해 긍정이나 부정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양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사회 변화에 대해 근본적으로 비판적이거나 거부적인 입장을 취하며 변화를 주로 사회적 위험과 연관짓는 응답자는 약 4분의 1(26%)에 불과하다. 사회 변화에 따른 구체적인 '과도한 부담'에 대해서도 이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응답자는 소수에 그쳤다. 다만, 연금 문제의 경우 다른 사안에 비해 거부감이 보다 크게 나타나며 예외적인 양상을 보인다.

2. 동서독 지역 간 격차의 미미함

전반적인 변화 수용성은 동독과 서독 간에 매우 유사하게 나타난다. 두 지역 중 어느 쪽도 변화에 지친 사회로 규정할 수 없다. 다만 특정 정책 분야별로는 소폭의 차이가 관찰된다. 특히 국방 및 이주 분야에서의 변화 수용성과 기후 및 경제 분야에서의 변화 속도 인식에 있어 동서독 간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3. 변화 경험은 변화 수용성에 뚜렷한 영향을 미침

사회 변화로 인해 개인적 차원이나 사회적 주변 환경, 혹은 국가 전체 차원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했던 응답자일수록 현재 진행 중인 사회 변화에 대해 더 높은 경계심을 보이며, 이를 사회적 기회보다는 위험 요인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경향은 동서독 지역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지만, 동독 지역 주민이 서독 주민에 비해 부정적인 변화 경험을 보고하는 비율이 다소 높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4. 변화 수용성은 개인적 자원 수준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전반적인 변화 수용성이 높은 사람들은 대체로 더 많은 사회경제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평균적으로 소득과 교육 수준이 더 높다. 반대로 사회 변화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자원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 또한 이들은 본인의 경제적 상황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도 평균적으로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5. 독일 국민은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변화를 체감하고 있음

독일 국민은 특정 단일 분야에서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회 분야에서 동시에 큰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인식한다. 가장 큰 변화가 느껴지는 분야로는 국방 및 대외 안보(22%)가 1위로 꼽혔으며, 이주(19%), 경제(15%)가 그 뒤를 이었다.

6. 전반적 변화 수용성은 정책 분야별 변화 개방성의 기본 토대로 작용

이주, 기후, 경제, 디지털화 등 개별 정책 분야에서의 변화를 대하는 태도는 개인의 전반적인 변화 수용성을 기저 요인으로 하여 형성된다. 다만 이러한 기본 성향 외에도 해당 정책 분야에 대한 구체적 인식, 주관적 정치 성향, 개인이 보유한 사회경제적 자원 수준 등의 요인들도 구체적인 변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친다.

7. 디지털화와 국방 분야에서는 연령이 변화 수용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디지털화와 국방이라는 두 영역에서는 연령이 변화에 대한 인식과 변화 수용성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디지털화에 있어서는 젊은 층이 고령층보다 훨씬 더 개방적이며 변화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느끼고, 디지털 기술에 더 높은 신뢰를 보인다. 반면 국방 분야에서는 고령층이 젊은 층보다 변화에 훨씬 더 개방적이다. 젊은 세대가 보이는 국방 정책에 대한 회의론과 징병제 등에 대한 강한 거부감은 군사적 개입이 자신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8. 기후와 이주 분야에서는 양극화가 관찰됨

기후 및 이주 정책 분야에서의 변화 수용성은 개인의 정치적·이념적 성향에 크게 좌우된다. 이러한 태도는 개인의 주관적 정치 성향과 정당 지지 성향에 의해 형성되며, 다른 정책 분야에 비해 사회적 양극화가 특히 심하게 나타나는 지점이다.

참고문헌

Bergmann, K. & Diermeier, M. (2024). *Transformationspolitik*. Bielefeld. Germany: transcript Verlag.

Bernerth, J. B., Walker, H. J. & Harris, S. G. (2011). Change fatigue: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of a new measure. *Work & Stress 25 (4)*. 321–337.

Canzler, W. (2025). Verkehrswende: Mehr als nur ein Antrieb. Schroeder, W. & Ranft, F.(편저). *Varianzen der Transformation.* Wiesbaden: Springer Fachmedien Wiesbaden. 113–122.

Cook, J., Oreskes, N., Doran, P. T., Anderegg, W. R. L., Verheggen, B., … Maibach, E. W. (2016). Consensus on consensus: a synthesis of consensus estimates on human-caused global warming. *Environ. Res. Lett. 11 (4)*. 48002.

DFA Digital für alle gGmbH (2025). Studie zur digitalen Teilhabe. Berlin. 다음 링크에서 확인 가능: https://digitaltag.eu/studie (최근 확인일: 2025.07.22)

Europäische Kommission (2022). Index für die digitale Wirtschaft 2022: Deutschland im Mittelfeld. 다음 링크에서 확인 가능: https://germany.representation.ec.europa.eu/news/index-fur-die-digitale-wirtschaft-2022-deutschland-im-mittelfeld-2022-07-28_de (최근 확인일: 2025.07.03)

Fratzscher, M. (2024). Warum sich Deutschland nicht verändern will. *ZEIT online.* 2024.12.06. 다음 링크에서 확인 가능: https://www.zeit.de/wirtschaft/2024-12/krisenmanagment-deutschland-veraenderung-angst-sorge/ (최근 확인일: 2025.07.15)

Graf, T. (2025). Zwischen Kriegsangst und Kriegstauglichkeit. Sicherheits- und verteidigungspolitisches Meinungsbild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2024. *ZMSBw-Forschungsbericht* 137.

Harfst, P., Franzmann, S. T., Kühnel, S. M., Fitzpatrick, S. A., Krug, L., … Hartmann, J. (2024). *Niedersächsischer Demokratie-Monitor 2023*. Göttingen: Göttingen University Press.

Heide, J. (2025). Mediale Trigger. Emotionen und Argumente in deutschen Pressekommentaren. *Zeitschrift für Soziologie 54 (2)*. 238–256.

Hebenstreit, J., Holtmann, E., Jaeck, T., Pollak, R., Reiser, M. & Zissel, P. (2025). *Deutschland-Monitor 2024. Gesellschaftliche und politische Einstellungen Themenschwerpunkt: In welcher Gesellschaft wollen wir leben?* Berlin, Halle (Saale), Jena, Mannheim.

Koltermann, J. (2025): Paradoxon des Missmuts. *FAZ*. 2025.07.08. p. 9.

Lang, F. R., Lessenich, S. & Rothermund, K. (2022), Altern als Zukunft – eine Studie der Volkswagenstiftung. Berlin, Heidelberg: Springer.

Lettrari, A. (2019).Wendekinder und Transformationskompetenz. *Journal für politische Bildung 9 (4)*, 32–37.

Lythreatis, S., Singh, S. K. & El-Kassar, A.-N. (2022). The digital divide: A review and future research agenda.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175*. 121359.

Mau, S., Lux, T. & Westheuser, L. (2023). *Triggerpunkte. Konsens und Konflikt in der Gegenwartsgesellschaft*. Berlin: Suhrkamp.

Mau, S. (2024). *Ungleich vereint: Warum der Osten anders bleibt*. Berlin: Suhrkamp.

Mau, S. (2022). „Die Welt ist bunter, als meist angenommen": Ein Gespräch mit Steffen Mau über Polarisierungsunternehmer, Veränderungserschöpfung und gesellschaftliche Gewöhnungs-prozesse. *Soziopolis: Gesellschaft beobachten*.

Ragnitz, J. (2025). Ostdeutsche Strukturbruch-Erfahrungen als Transformationsbremse. Schroeder, W. & Ranft, F. (편저). *Varianzen der Transformation*. Wiesbaden: Springer Fachmedien Wiesbaden, 19–28.

Rheingold Institut. (2021). Grundlagenstudie zum Stimmungs- und Zukunftsbild in Deutschland. 17.10.2021.

Reiser, M., Rinne, J. & Vogel, L. (2025). *Eigentumskonflikte: Konsens und Polarisierung in vergleichender Perspektive*. 출판 예정.

Silbereisen, R. K. & Pinquart, M. (2008). Sozialer Wandel und individuelle Entwicklung. Dies. (편저). *Individuum und sozialer Wandel*. Weinheim und München: Juventa, 7–36.

Störk-Biber, C., Hampel, J., Kropp, C. & Zwick, M. (2020). Wahrnehmung von Technik und Digitalisierung in Deutschland und Europa: Befunde aus dem TechnikRadar. *HMD 57 (1)*. 21–32.

Teney, C., Pietrantuono, G. & Wolfram, T. (2024). What polarizes citizens? An explorative analysis of 817 attitudinal items from a non-random online panel in Germany. *PLOS. One 19 (5)*.

집필진

헬레네 프랑케 연구원
(Helene Franke, M. A.)
예나 프리드리히 실러 대학교 정치학연구소 및
극우주의 연구·민주주의 교육·사회통합 센터(KomRex)

에버하르트 홀트만 교수
(Prof. Dr. Everhard Holtmann)
할레-비텐베르크 마르틴 루터 대학교 할레 사회연구센터(ZSH)

토비아스 예크 연구원
(Dipl.-Soz. Tobias Jaeck)
할레-비텐베르크 마르틴 루터 대학교 할레 사회연구센터(ZSH)

라인하르트 폴락 교수
(Prof. Dr. Reinhard Pollak)
만하임 대학교 사회학연구소 및 GESIS 라이프니츠 사회과학연구소
사회 데이터·연구부장

마리온 라이저 교수
(Prof. Dr. Marion Reiser)
예나 프리드리히 실러 대학교 정치학연구소 및
극우주의 연구·민주주의 교육·사회통합 센터(KomRex)

마티아스 잔트 연구원
(Dr. Matthias Sand)
GESIS 라이프니츠 사회과학연구소
설문조사 설계 및 방법론 담당

피에르 치셀 연구원
(Pierre Zissel, M. A.)
예나 프리드리히 실러 대학교 정치학연구소 및
극우주의 연구·민주주의 교육·사회통합 센터(KomRex)

인쇄 정보

발행처

독일 연방정부 동독특임관실

Wilhelmstraße 97

11017 Berlin

www.ostbeauftragte.de

KontaktOst@bmf.bund.de

발행

2025년 9월

인쇄

독일 연방재무부 Z A 7과 –

인쇄 및 그래픽 서비스팀

Wilhelmstraße 97

11017 Berlin

디자인

Fork Unstable Media GmbH/fischerAppelt AG

Waterloohain 5

22769 Hamburg

연방정부의 다른 간행물은 다음 링크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주문할 수 있습니다.

www.bundesregierung.de/publikationen

본 간행물은 독일 연방정부 대외 홍보 활동의 일환으로 발행되었으며, 무상 배포용으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연방의회· 주정부·지방자치단체 선거 및 유럽의회 선거 등 모든 선거 기간 동안 정당 혹은 선거운동 관계자가 선거 홍보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본 자료는 독일 공식 정서법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엘리자베트 카이저 정무차관(Staatsministerin Elisabeth Kaiser)
독일 연방정부 동독특임관
www.ostbeauftragte.de

@Ost_Beauftragte
@Ostbeauftragte.Kaiser